국민의 생각을 듣습니다. 국민의 정책을 삽니다.

광화문1번가

국 민 인 수 위 원 회

100일간의 기록

광화문1번가
국 민 인 수 위 원 회

100일간의 기록

한 눈에 보는 국민인수위원회 운영 현황 004

광화문 1번가 캘린더 008

1. 국민모두가 인수위원인 국민인수위원회 출범 011

2. 오프라인 광화문1번가 출범 012

3. 온라인 광화문1번가 오픈 013

4. 50일간의 주요 활동내용

정책제안 경청 015
불공정 관련 집중 접수기간 운영 016
국민마이크 017
열린포럼 018
대통령의 서재 019
국민경청보고서 전달식 개최 020
광화문1번가 현장접수 종료 행사 021

5. 50일 현장활동 이후의 활동내용

022

6. 정책제안 현황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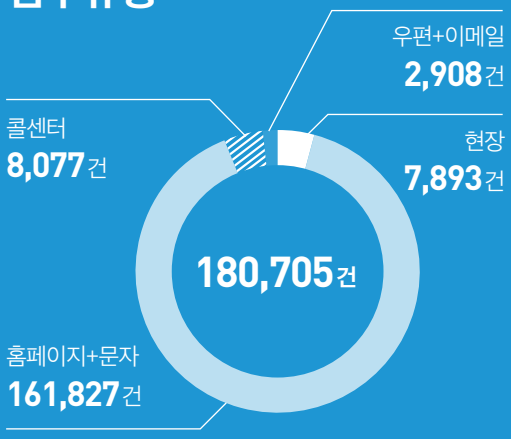
제안 접수현황 024
빅데이터 분석 결과 026

7. 167개 국민제안 실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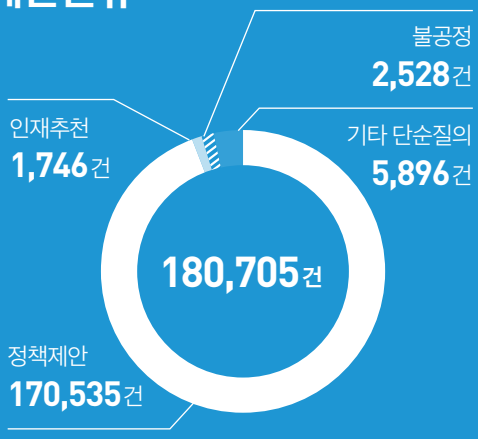
부정·부패 청산 031
경제민주화 053
민주·인권 067
일자리 082
경제성장 099
분권·균형 113
저출산·고령화 116
민생·복지·교육 137
외교·안보 177
안전 182
성평등·환경 221
문화·언론 235
기타 250

한 눈에 보는
국민인수위원회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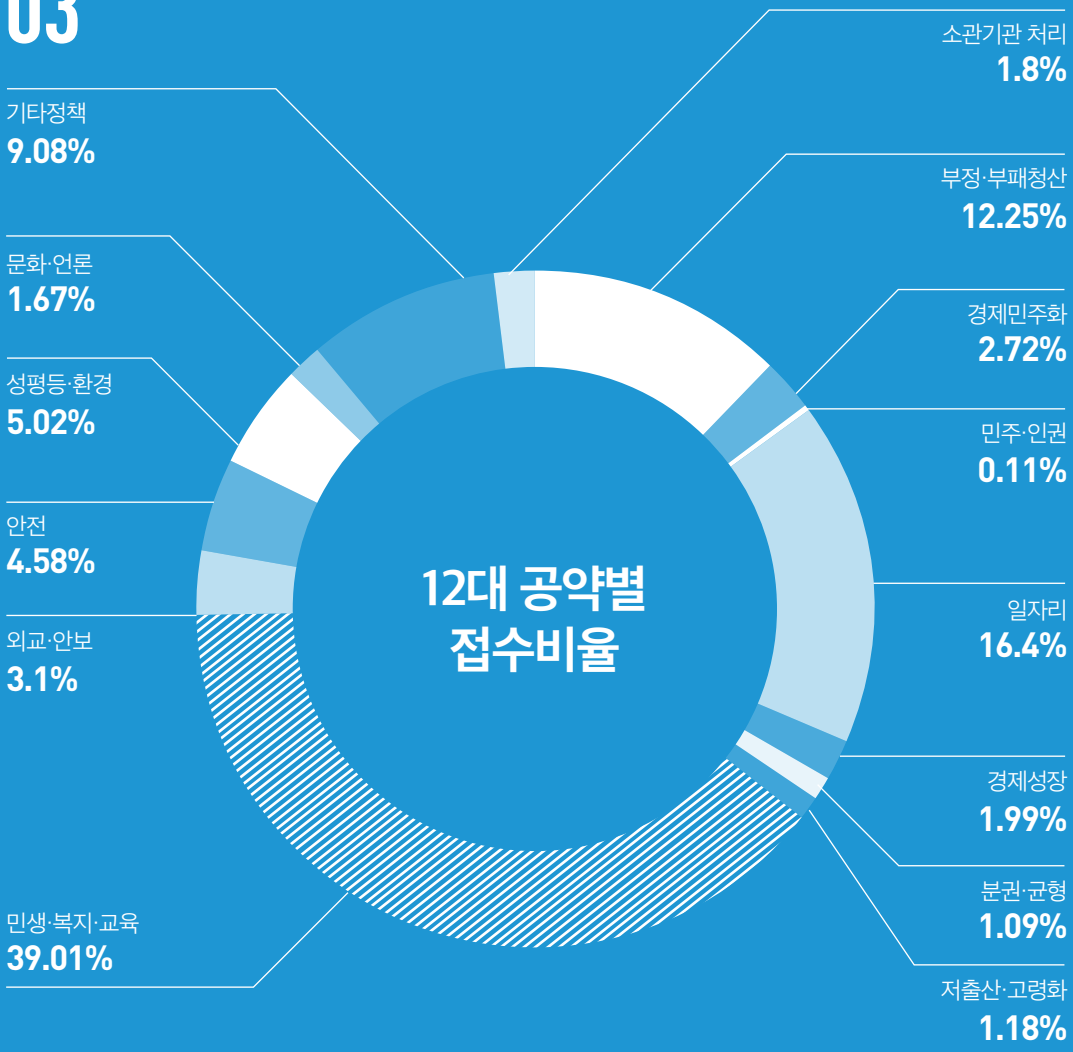
01
접수유형



02
제안분류



03


12대 공약별
접수비율
소관기관 처리
1.8%
부정·부패청산
12.25%
경제민주화
2.72%
민주·인권
0.11%
일자리
16.4%
경제성장
1.99%
분권·균형
1.09%
저출산·고령화
1.18%
민생·복지·교육
39.01%
외교·안보
3.1%
안전
4.58%
성평등·환경
5.02%
문화·언론
1.67%
기타정책
9.08%

04
기타통계

국민인수위원회
운영 지자체
23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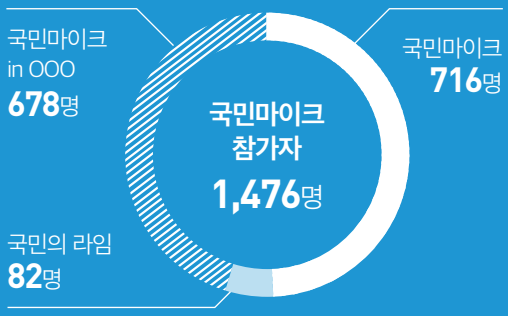
지자체
자체 접수건수
1,76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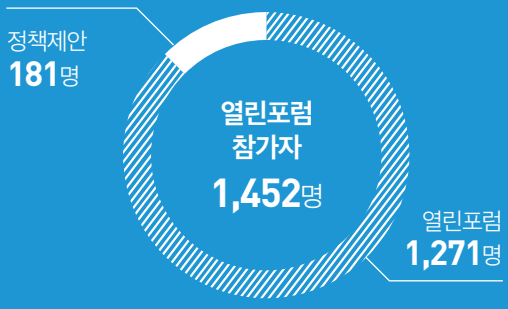
국민이 만드는
<대통령의 서재>
추천도서
579권

북콘서트

발표자 **38**명

참가자 **208**명





새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
포스트잇
4,986개

문을 열다
128명

문을 닫다
168명

제안지원팀 공무원
63명

현장운영요원
56명

05
워드 클라우드

광화문1번가
캘 린 더

2017 05 12
대통령 지시

2017 05 23
제안지원팀 사전 워크샵

2017 05 24
광화문1번가 부스 설치 공사 완료 /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gwanghwamoon1st.go.kr 오픈

2017 05 25
광화문1번가 문을 열다

2017 05 26
광화문1번가 온라인 정책제안 시작

2017 05 27
국민마이크 01 촛불이 말합니다

2017 05 30
열린포럼 01 소셜벤처와 창업

2017 05 31
정책제안 20,875건 접수

2017 06 01
열린포럼 02 청소년 / 불공정사례 집중 신고기간 시작

2017 06 03
국민마이크 02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나라를 위한 국민 제안

2017 06 07
정책제안 40,396건 접수

2017 06 08
열린포럼 03 공동체미디어

2017 06 09
고민정 부대변인
워킹맘과 점심번개

2017 06 13
열린포럼 04 청년

2017 06 14
정책제안 61,968건 접수

2017 06 16
열린포럼 05 외교·안보·통일

2017 06 17
국민마이크 04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를 위한 국민 제안 /
국민경청보고서 전달식

2017 06 18
불공정사례 집중
신고기간 종료

2017 06 20
열린포럼 06 장애인

2017 06 21
정책제안 80,997건 접수

2017 06 22
열린포럼 07 마음건강

2017 06 24
국민마이크 05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제안

2017 06 25
북콘서트 01 도서관인과 함께 하는
책읽는 대통령이 보고 싶다

2017 06 27
열린포럼 08 성평등과 교육
정책제안 01 보육·노동

2017 06 28
정책제안 100,107건 접수

2017 06 29
열린포럼 09 나눔문화

2017 06 30
열린포럼 10 문화예술

2017 07 01
국민마이크 스페셜 : 국민의 라임

2017 07 02
북콘서트 02 국민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17 07 04
열린포럼 11 과학과 기술
정책제안 02 인터넷·IT
(Information Technology)

2017 07 05
정책제안 125,488건 접수

2017 07 06
열린포럼 12 교육

2017 07 09
북콘서트 03
국민과 함께, 책과 함께
'책 읽는 사회, 함께 만들어갑시다'

2017 07 11
열린포럼 13 중장년의 삶과 일
정책제안 03 사회적 경제

2017 07 12
광화문1번가 문을 닫다
정책제안 접수 마감 /
정책제안 180,705건 접수

01

국민모두가 인수위원인 **국민인수위원회 출범**

국민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새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정책반영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에 설치된 국민참여기구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기존의 정부위원회들과 달리 위원장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을 일반위원으로 하였으며, 다만 운영을 위한 간사위원으로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을 임명하고, 국민소통위원으로 홍서윤 전 KBS 앵커와 서천석 마음연구소 소장을 위촉하였으며, 실제 제안을 경청 하고 정책에 반영할 실무 지원기획단은 민간 전문가, 중앙부처 공무원 6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의 소통 공간 명칭은 국민주권시대를 상징하는 광화문 광장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광화문 1번가'로 정했습니다.

02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 오픈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는 촛불혁명의 중심지였던 광화문의 의미를 살리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 인근의 세종로 공원에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직접 만나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보자는 것이 오프라인 소통공간 설치의 가장 큰 취지였으며, 이를 살리기 위해 정책제안 경청 공간, 정책간담회 공간, 대통령의 서재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 소통공간은 5월 25일(목) 오후 2시 **'국민이 정권 인수의 문을 열다'**라는 취지의 개소식을 시작으로 광화문 1번가 50일간의 대장정의 막이 올랐습니다.

03

온라인
광화문 1번가 오픈

온라인 광화문 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는 5월 24일(수)에 개설해 홍보를 시작하고, 26일(금)부터 정책제안을 접수받았습니다. 특히 '국민 모두가 대통령'이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연한 홍보 메시지로 오픈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소통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안을 제출하고 다른 사람의 제안을 검색해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접수된 정책제안을 분석해 성별·지역별·연령대별 접수통계보고서, 30대 우수제안을 선별한 국민경청보고서, 다수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은 제안을 선별한 국민공감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04

50일간의
주요 활동내용

정책제안 경청

불공정 관련 집중 접수기간 운영

국민마이크

열린포럼

대통령의 서재

국민경청보고서 전달식 개최

광화문1번가 현장접수 종료 행사

정책제안 경청

광화문 1번가는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온·오프라인 소통공간 뿐만 아니라 SNS, 우편, 이메일, 콜센터, 문자 메시지 등 참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총 231개 지방자체단체에도 정책제안 접수창구를 별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기간 50일 간 총 18만 705건, 하루 평균 3,600여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어휘의 70%를 차지하는 한자어를 이해하기 위해 초등학교 한자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담뱃갑의 경고 그림을 금연을 응원하는 감성적인 글귀로 변경해달라'는 제안까지 그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에는 서류 뭉치를 잔뜩 들고 오신 어르신, 휠체어를 타고 기념촬영 하는 장애인, 광화문에 친구 만나러 왔다가 의견을 남기는 대학생, 소풍을 나온 유치원생 등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찾아와 실생활과 밀접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불공정 관련 집중 접수기간 운영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아 광화문 1번가는 6월 1일(목)부터 6월 18일(일)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불공정사례를 토로·신고할 수 있는 접수처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급여, 하도급 등 개인이 경험한 불공정 사례, 사회구조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총 2,528건의 불공정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접수받은 불공정 신고건 들을 분류·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을 파견 받아 전담팀을 구성,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마이크

국민마이크는 광화문 1번가의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서 매주 토요일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촛불광장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누구나 발표하던 정신을 이어받아 5월 27일(토) 제1회 국민마이크 '촛불이 말합니다'를 시작으로 총 다섯 번 개최되었으며, '하청노동자 노동권 보장',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개성 있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발언 내용들은 정리되어 광화문1번가의 정식 제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국민마이크는 지역별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주관으로 대구, 인천 등 전국 20여개 지자체에서도 개최되었습니다. 그 내용 역시 빠짐없이 광화문1번가로 전달되어 제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열린포럼

열린포럼은 자유발언대인 국민마이크와 달리 주제를 갖고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목요일 저녁시간에 주제를 설정하여, 이에 관심있는 국민, 전문가, 관련단체, 소관부처 담당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0일(화) 제1회 열린포럼 '소셜벤처와 창업'을 시작으로 총 13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청소년', '장애인', '여성', '교육', '중장년 층의 일과 삶'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특기할 점은 발표 주제에 관계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내놓은 제언들에 대해 질의·응답하거나 향후 추진방향을 밝혀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통령의 서재

대통령의 서재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명사들이 총 579권의 책에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구절이나 국정 운영에 참고할 만한 내용에 밑줄을 긋고, 카드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대통령의 서재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시민 본인이 아끼는 손때 묻은 책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았으며, 유명 음악인, 방송인, 베스트셀러 저자 본인 등 유명 인사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자신이 추천하는 책을 소개하여 관심도를 더욱 높여 주셨습니다. 모여진 책들은 청와대 내에 비치될 예정이며, 밑줄 그은 부분들은 대통령에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전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경청보고서 전달식 개최

6월 17일(토)에는 국민인수위원회 중간보고서인 '국민경청보고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국민경청보고서에는 6월 중순까지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받은 총 6만 5천여건의 정책제안 요지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 그리고 엄선한 30건의 우수제안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제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며 "제안서 하나하나가 촛불 민심과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국정과제에 많이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달된 6만 5천건의 정책제안 중 총 99건의 제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7월 19일(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광화문1번가
현장접수 종료 행사

5월 25일(목) 문을 연 광화문1번가는 7월 12일(수) 현장접수를 마감하면서 간단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일 17시에 개최된 현장접수 종료행사에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진표 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홍서윤·서천석 소통위원, 현장접수 및 제안분류를 담당했던 부처 공무원 40여명, 민간 기획팀 및 현장스텝, 각종 상설 프로그램 참석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뜨거운 여름날 그보다 더 뜨거운 국민들의 열기를 수용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쏟아부었던 50일을 회고하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05

50일 현장활동
이후의 활동내용

정책제안 검토·분석

현장접수가 끝난 7월 12일 이후에도 광화문 1번가 운영은 계속되었습니다. 7월 12일까지 광화문 1번가로 접수된 총 18만 705건의 정책제안을 분석, 실천과제를 선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5월 출범과 동시에 제안분류 전담팀, 민간 전문가, 제안 소관부처 담당공무원,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공공데이터혁신본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안을 실시간으로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1차로 제안분류 전담팀과 민간전문가가 동일·중복 제안을 제외한 후 중요 제안을 선별하였고, 2차로 제안 소관부처에서는 중요 제안의 정책반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3차로 국민인수위원회는 각 부처의 정책반영 계획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167개의 국민제안 실천과제(우수제안)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접수받은 정책제안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고, 그 이면에 담긴 국민들의 바람을 도출해내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제안이 접수되어 검토·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책상에서는 듣지 못했던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지막 한건까지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06

정책제안 현황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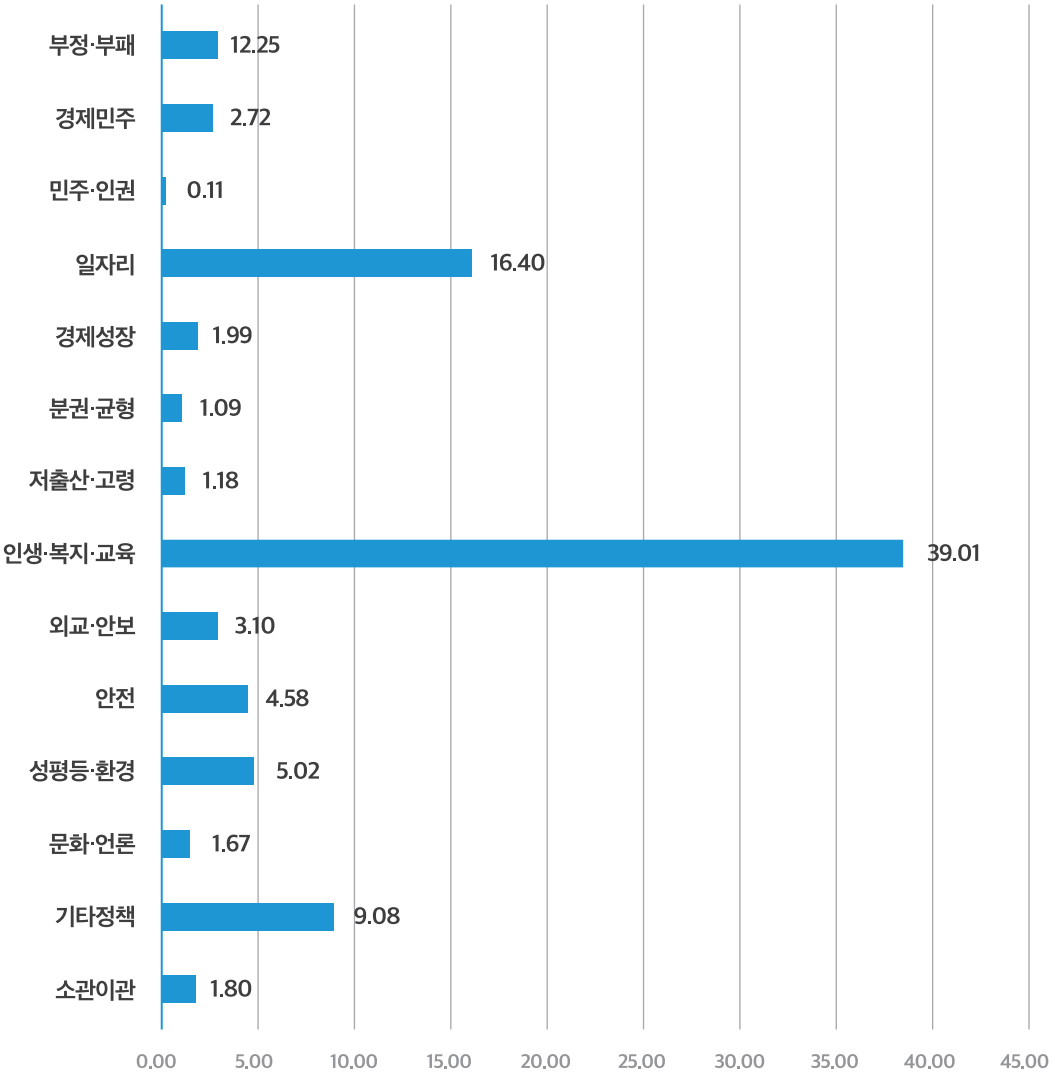
제안 접수현황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제안 접수현황

총 18만 705건을 접수 방식별로 분류하면 홈페이지·문자메세지(89.5%),
콜센터(4.5%), 현장(4.4%), 우편·이메일(1.6%) 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민생·복지·교육(39.01%), 일자리(16.4%), 부정·부패(12.25%) 등의
순으로 많은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구 분	분 야	누 계				
		소 계	현 장	홈페이지 · 문자메세지	콜센터	우편·이메일
총 계		180,705	7,893	161,827	8,077	2,908
정책제안	소 계	170,535	7,069	158,432	2,176	2,858
	① 부정·부패 청산	20,895	254	20,380	150	111
	② 경제민주화	4,633	78	4,465	60	30
	③ 민주·인권	185	123	0	36	26
	④ 일자리	27,970	583	26,806	239	342
	⑤ 경제성장	3,388	113	3,125	48	102
	⑥ 분권·균형	1,864	109	1,578	33	144
	⑦ 저출산·고령화	2,011	128	1,708	37	138
	⑧ 민생·복지·교육	66,518	1,036	64,283	572	627
	⑨ 외교·안보	5,295	152	5,007	55	81
	⑩ 안전	7,803	180	7,421	61	141
	⑪ 성평등·환경	8,565	292	8,113	14	146
	⑫ 문화·언론	2,849	146	2,586	33	84
	⑬ 기타정책	15,487	1,238	12,960	403	886
	⑭ 소관기관 처리	3,072	2,637	0	435	0
인재추천	인재추천	1,746	46	1,688	0	12
불공정	불공정 접수현황	2,528	778	1,707	5	38
기 타	접수방법, 장소, 회원가입 등 단순 문의	5,896	0	0	5,896	0


부정·부패
12.25
경제민주
2.72
민주·인권
0.11
일자리
16.40
경제성장
1.99
분권·균형
1.09
저출산·고령
1.18
인생·복지·교육
39.01
외교·안보
3.10
안전
4.58
성평등·환경
5.02
문화·언론
1.67
기타정책
9.08
소관이관
1.80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빅데이터 분석 결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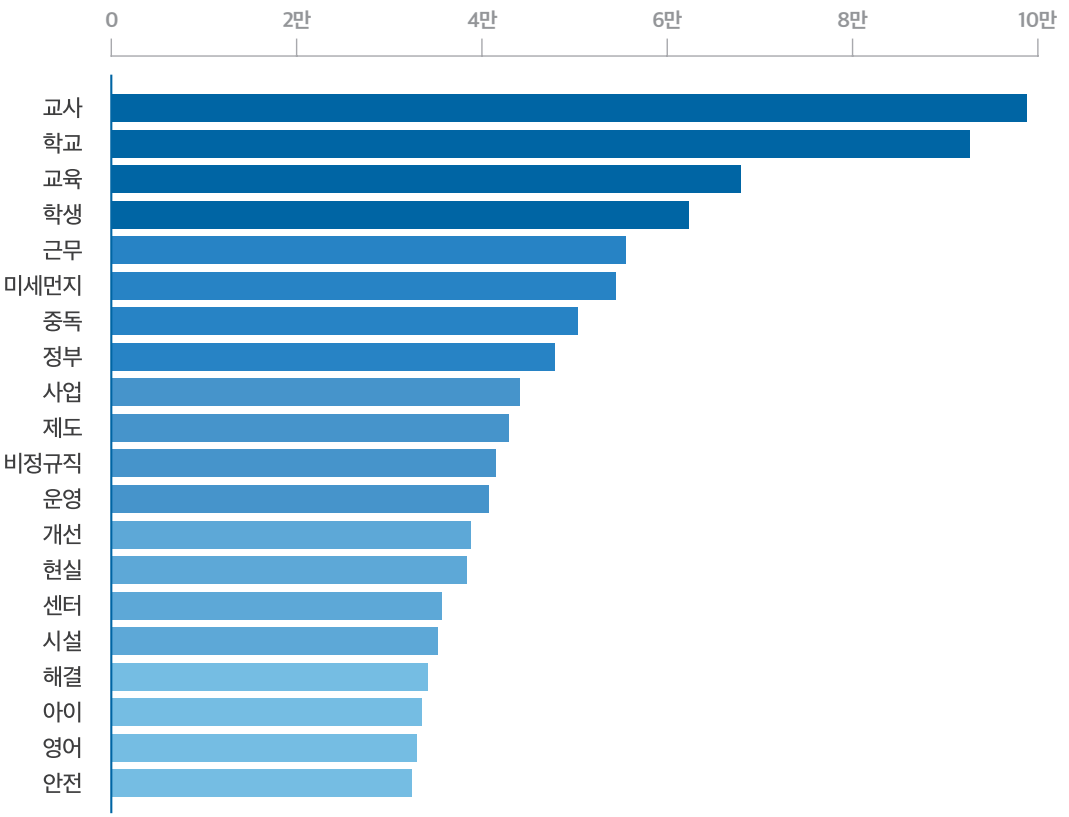
50일간 광화문 1번가로 접수된 총 18만 705건의 주요 키워드는 '교사·학교', '미세먼지', '중독', '정부', '비정규직' 이었습니다. 특히 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자 다수가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무여건 차별문제, 학교 외 비정규직문제, 버스노선 개편문제 등에도 많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키워드

1) 이 부분은 정보화진흥원(NIA) 공공데이터혁신본부에서 맡아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감성분석 사전을 활용해 정책제안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분석한 결과로는 '부정·부패 청산', '경제성장',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격려와 지지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비정규직', '중독' 등의 문제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키워드 랭킹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분야별로 가장 많이 제출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제안 분야	주요 제안 내용
1	부정·부패 청산	1. 국회의원 소환제도 마련 요구 2. 전 정부의 해결되지 않은 각종 사건들에 대한 해결 노력 3. 민원 해결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책임 부과 및 감사 강화 4. 공무원 직무별 공정한 대우 보장을 위한 노력 5. 책임실명제 등 국가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방안 마련
2	경제민주화	1.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코스닥 공매도 폐지 2. 부동산대책 마련 시급 3. 중소기업 육성 추진 및 IT분야의 대기업 참여제한에 따른 역효과 해결 4.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4대 보험 의무 조항 개선
3	민주·인권	1.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존중 2.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
4	일자리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 충돌 2.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위한 정책 마련 3.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지원금 등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제언 4.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차별 개선 및 정규직 전환
5	경제성장	1. 신재생 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 2.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3. 원자력 발전소 가동중단에 대한 상반된 의견 대립 4.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신생 기업 및 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6	분권·균형	1. 지방 일자리 창출, 지원금 지급 등 방안 마련 2. 농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완화 3. 귀농 지원 확대 4. 농촌 마을 인프라 구축, 정보화서비스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5. 산림 및 임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7	저출산·고령화	1.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증대 및 의무화 2. 난임 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 3. 노인 장기 요양보험 관련 문제 개선 4.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경제 시너지 창출 5.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결혼 장려 정책 마련 6.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확대

NO	제안 분야	주요 제안 내용
8	민생·복지·교육	1. 이륜차 정책 재정비 촉구 2. 버스 이용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3. 국민기초연금 지급 기준, 지급액 등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개혁 4. 특수 질환 지원을 위한 비급여[본인부담금] 개선 5. 병원 근무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6. 중독관리법 개정 7. 아동복지를 위한 예산 및 관련시설 지원, 근무여건 개선 8. 상담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제도 정비 9. 수능제도 폐지 또는 개선 10. 중고등교사 대상 임용고시 평가방법 및 제도 개선 11. 사교육 철폐를 위한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개정 12.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 신설 및 공정한 배정 13. 남성 육아휴직제도 사용, 육아휴직수당 증가 등 육아휴직제도 개선 14. 초등학교 돌봄교육 대상확대 및 시간연장
9	외교·안보	1. 사드 배치 철회 및 강행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 2. 대체복무제, 모병제, 부사관 육성 등을 통한 현 군제도의 정비 3. 군인월급 인상, 취업시 가산점 부여 등 병역 의무에 대한 대가 지급 4. 국가유공자 및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5. 재외국민에 대한 양육수당, 보육료 등 지원 개선
10	안전	1. 안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공무원 처우 2.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범죄 처벌 강화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
11	성평등·환경	1. 직장내 남녀 고용평등 2.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3.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4.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 마련 5.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6. 건설 공사 현장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
12	문화·언론	1. 문화재 발굴조사관련 지원이 미비하여 어려움 호소 2. 언론사 국고 보조금 폐지 및 언론 개혁 3. 종교 차별 금지법 제정 및 종교 자유 보장 4.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게임 산업 지원금 확대 5. 이력서사진 부착금지법안, 대한민국 직업사진사의 위기 우려 6. 지역 커뮤니티 공간인 작은 도서관 설립 및 운영 활성화 필요
13	기타	1. 동물 유기를 방지,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 2. 동물학대, 개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제정 3. 교사들의 지방 근무지 이동에 따른 어려움 호소 4. 종교인 과세 추진 5. 주말 국가시험 일정 변경 및 대체 시험일 지정

07

167개 국민제안 실천과제(우수제안)

부정·부패 청산
경제민주화
민주·인권
일자리
경제성장
분권·균형
저출산·고령화
민생·복지·교육
외교·안보
안전
성평등·환경
문화·언론
기타

국민인수위원회는 앞서 설명한 분석절차를 통해 선별한
총 167개의 국민제안 실천과제(우수제안)와 제안자를 소개합니다.
각 제안은 향후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제안자들의 제안은 가능한 원문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만,
제안 내용이 긴 경우에는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01
예산의 투명성 확보

제안자 **노계향**님

주요내용 국가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 및 현황 공개

제안내용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등에 대한 실시간 관리 감독 및 그 현황을 공개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세요.

국정과제 8.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열린정부)

부처추진계획 행정안전부

현재 중앙부처는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등) 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내역 등 국민이 요구하는 각종 정책정보를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부24'의 기능을 보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주가자님, 지금여기관님, 연둥이님, 관주산님, 조달안 님, 정의로운 세상님, 너에게난님, 연산홍님, 지미경님, 상봉동주민님, 안티고네님, 자두님, 멋쟁이님, grant2060님, NIVRVADA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02
성과급제도 개선

제안자 **기린**님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성과급제도 시정

제안내용 각 공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재무재표와 결과를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연말의 성과급으로 지출되는 예산낭비가 심각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참에 각종 정보활동비의 문제가 대두된 시점이니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정보활동비와 성과급제도 시정하여야 합니다.

국정과제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 평가 및 보수체계 개선)

부처추진계획 기획재정부
'17년 하반기 공공기관의 성과급 운영 현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 공공기관에는 '정보활동비'가 없음

두리두리님, 건강튼튼윤별님, 수학사랑님, 행복한나라에서님, 프란네님, 위기대응님, 왕짱공주님, 기본원칙삶님, 고운이님, 높은목소리님, 깨어나서빛나라님, 여니쌤님, 모든아이님, 해피라이프님, 공사장님, 랄랄라랄랄라2님, 바른교육01님, 가을별밤님, 와이원님, 정리정돈님, 엘리엘리님, 소중님, 희망주니님, 미소2님, 검은고래님, 나는야행복쌤님, 길나그네님, 청소기세탁기건조기님, 쮼이마미님, 공정처사님, 마린이님, 과정의평등님, 나라다운나라1님, 희망이란님, 공정한사회0000님, 방울토마토82님 외 60여분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03
군납비리 근절 및 적폐 청산

제안자 **Dengel**님

주요내용

군납비리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 국방 전반의 신뢰도 제고

제안내용

군대는 먹어야 진격한다는 나폴레옹의 말처럼, 보급이란 군대의 기틀이며 특히 대한민국처럼 징병제 국가에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복무를 하게 되는 장병들에게 있어 사기 진작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군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잇속만 채우려 하는 일부 고위급 지휘관과 군납업자들이 결탁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그 차익금을 자신들이 챙기는 행태가 존재합니다.
군 내부의 군납비리를 감찰하는 부서를 국방부 외부에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안보실장 직속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에도 군납비리를 감시하는 부서를 만들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부서가 서로를 견제하며 한 집단이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군납비리 사건 적발 시 최대 징역 10년에 벌금 5000만원인데, 형량을 늘리고 벌금은 방위사업법 제 62조 1항처럼 국방비의 10배 이하로 부과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감찰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군에서 이 고질적인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어떤 시기보다도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국정과제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국방부)

부처추진계획

국방부
방위사업 비리에 특화된 처벌 기준을 엄정히 정립하고, 검찰 구형을 강화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처벌

실현을 위해 법원과 방위사업 비리 전담 재판부 신설·지정 협의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 비리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방위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재판부 간 판결 내용 및 양형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위사업 비리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하고 방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방위사업 비리 관련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록수님, 또리아빠님, 국민을위한정부님, 위국헌신님, 이니사랑77님, 아몰랑님, 지나니님, 고려더프로시스님, 파발마통신님, 단팥방팀, 세계일주가자님, 야간장치킨먹자님, 이아연님, 노예도사람이다님 라따뚜이 님 외 90여분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04
행정심판위원회 등 정부내 행정위원회 투명성, 신뢰성 확보

제안자 **김병일**님

주요내용 행정심판위원회 등 정부 내 행정위원회 참여위원의 50% 이상을 민간인으로 해 투명성, 신뢰성 확보

제안내용 행정심판위원회 등 정부 내 행정위원회 참여위원의 50% 이상을 민간인으로 해 투명성, 신뢰성 확보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정안전부)

부처추진계획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 총 15명 중 비상임위원은 총 8인이고 민간위원 7인, 판사 1명으로 구성(47%, 2017. 6. 5. 현재)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 총 9명 중 6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67%)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총 7명 중 5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71%)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임기 종료(2018. 5. 6.) 이후 비상임위원 위촉 시에도 지명주체인 대법원, 국회에 공직자 배제 요청을 통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강봉래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05
국정과제 주요 추진실적 공개

제안자 **미토스**님

주요내용

국정 상황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진행상황,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

제안내용

모든 국정 상황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국정현황판을 만들어 월별 또는 반기별로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학용어에 미러 엔드 램프란 용어가 있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램프는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좋은 것은 무엇인가 어두운 그늘진 곳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거울과 램프처럼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우리 대통령이 성공하여 세계에서 선진국가가 되기를 기원함에 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행정안전부)

부처추진계획

국무조정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정과제 관리시스템 정비하여 분기별로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반기별로 주요 실적과 성과를 종합 검토하여 대국민 공개 실시하고 청와대·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둥둥이님, 바른세상으로가자님, 바람과님, 흰터리님, 꾸꾸아빠님, The팔로워님, 갑자기백수님, 바른재정님, 소나무22님,
미릭님, Earthiank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06
방위사업청 문민화 추진

제안자 **헌법1조**님

주요내용

방위사업 비리척결 등 해당분야 적폐청산을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군인 중심에서 민간인으로 대폭 교체

제안내용

현 방사청의 구조를 살펴보니 군인과 일반 공무원의 비율이 7:3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기 구매나 개발 사업의 단장이나 반장 본부장은 군인들이 방사청에 파견되어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구조가 방산비리의 시초라고 봅니다.
행정직 공무원들도 과거엔 사무실에서 쓰는 물품의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다 조달청이 개청하면서 업계와의 연결을 끊었고, 조달청도 초기엔 대면계약으로 업체와의 유착관계로 인한 비리를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 지금은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방사청에서 구매하는 무기들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고, 또한 고가의 물품이니 꼼꼼히 따져 구매하다보면 업체와 온라인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건 인식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못 바꾼다면 사람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쓰는 무기를 왜 본인들이 직접 사야 합니까? 그러니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심한 거라 생각합니다.
방사청 자체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맡기고, 군인들은 자문역할에 국한시켜야 하며 현재 방사청에 파견 나온 군인들은 복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과제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국방부)

부처추진계획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5.6월부터 '18.6월까지 공무원과 군인 비율을 50:50에서 70:30으로 조정 중입니다.
· 문민화 3년차 1차 선발(52명) : '17.7. ~ 12.

· 문민화 3년차 2차 선발(50명) : '18.1. ~ 6.

이루리님, 큰나무님, 블루스카이님, 엽하님, 부주동불나방님, 송리님, 뀨뀨님, 규달님, 인스코님, 밥밥밥님, 변화의물결님, Js530227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07
공기업 채용시 필기전형 성적 반드시 공개

제안자 **항상웃자**님

주요내용 투명한 채용을 위해 공기업 채용 시 공무원 필기전형에 준하도록 공개 수준을 높일 것

제안내용 공기업 채용 시 필기전형 성적을 공개하는 곳 보다는 공개 안하는 곳이 더 많음. 그냥 단순히 필기 합격. 불합격 통보로 일관함. 또한 성적공개를 하는 곳도 위탁업체의 성적처리 잘못으로 필기 합격 발표자가 바뀐곳이 있음. (예. 건강보험공단 사례)
이마저도 자신의 필기성적에 의문을 품은 많은 지원자들이 확인전화를 해서 바뀐 사례임. 개인의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함. 하지만 이 법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투명한 채용을 위해서라도, 필기전형 만큼은 개인별 성적과 전체 필기컷이 얼마인지, 자신의 성적에 의문을 제기시 OMR 카드 확인 가능 하도록, 공무원 필기전형에 준하도록 그 공개 수준을 높여야함.

부처추진계획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법률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직원 채용 관련 사항은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만 향후 투명성을 높여가도록 적극 권고해 가겠습니다.

산림녹두님, 후회없이님, 경미니아범, workman님, nugugin93님, pabi2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08
공단의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 제안

제안자 **아이사랑101**님

주요내용 법률구조공단의 민원처리 개선 방안 및 전문변호사에 의한 소송 수행 방안 마련을 제안

제안내용 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국가기관인 법률구조공단에 법률 상담을 접수하면 신청은 받지만 사건에 대한 상담 내용에 따라 꼭 도와줘야 할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핑계로 등한시하고, 간단하고 쉬운 사건만 수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법률구조공단의 원래 목적인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또한 어렵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 등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법률 지식도 없는 의뢰인에게 변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직접 소송 진행 전반에 걸쳐 의뢰인에게 준비시키고 하라고 하는 등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공단 직원 및 국선변호인 때문에 실망이 많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의뢰인이 전부 다 일하고 법률구조공단 직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열의도 전혀 없어 패소도 일례로 알고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신청인에게 형사 사건 입증 판결 등 다 준비해 오라고 하니, 의뢰인은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준비가 다 된다고 하여도 1년 넘게 준비를 하면 공소 시효를 앞두고 사임을 하겠다고 하여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없도록 촉박한 상황을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더욱 나락으로 빠뜨리게 합니다.
법률구조공단과 국선변호인은 한 번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국가 기관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국선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 재판하고자 하는데 노동 법률 변호사가 선임하는 등 완전 형식 적이고 형사 사건은 취급을 하지 않으려 하는 등 구조적 비리가 매우 심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유동성이 많으니 분야 별로 준비하여 오죽하면 국선을 쓸까 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부처추진계획 법무부

소속변호사의 소송수행 해태에 대한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공단 본부에서 사실조사 후 변호사 교체 권고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국선변호인의 소송수행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변호사 1전문분야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전문변호사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능동적인 자문 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나누미님, hurski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09
조달평가의 문제점

제안자 **Kareposs**님

주요내용 조달청 평가 시, 수행실적 평가를 배제하여 중소·창업기업을 지원하고, 평가위원의 투명·공정성 제고

제안내용

조달 관련 많은 입찰경험을 한 저는 많은 문제점을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인정하는 한 분야의 중소기업 상품이 있지만 입찰에 직접 참가를 못하고 전혀 상관없는 대표사를 세워야하며 대표사에 필요 없는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 기존 수행실적이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행실적을 없애기로 한 법안이 통과되어있음에도 실제로는 평가 항목에 변경이 없고, 또한 평가위원들과의 오랜 친분의 회사가 전혀 상관없는 용역을 선정받아 결국 하청줘서 부실을 낳고, 너무도 황당한 평가 실정입니다.
저는 관에도 있었으며 정책을 발의도 했고 일반 중소기업 회사에서도 근무 중 이나 너무도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고 확실한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선정되면 자동으로 일자리는 늘어나고 안정될 것입니다. 두서없이 제안드렸습니다.

부처추진계획 조달청

용역입찰제도는 작은 금액의 사업인 경우 수행실적 평가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구분	일반용역 적격심사					협상 계약
	학술연구	시설분야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육상운송	
수행실적 배제 금액	2억미만	5억 미만	5억 미만	배점한도 축소*	배점한도 축소*	2.1억 미만

중소·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일반용역은 낙찰 하한을 상향조정하고, 창업기업의 경우 이행실적 인정기간 범위를 확대하며, 학술연구용역 수행실적 배제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2017년 8월 개정할 계획입니다.

채부건님, 흑두장군님, 중소기업의슬픔님, 빌조이님, 물박사님, 조민님, 토스카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0
전자조달에 대한 개선의견

제안자 **소상공인**님

주요내용

수요기관 직접 입찰의 경우, 개찰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조달청의 공고·제안요청의 표준지침 마련 필요

제안내용

저는 공공기관 일반용역 입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공정성과 투명한 경쟁을 위해 전자조달(나라장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조달 진행 후 조달청에서 진행하지 않고 수요기관이 직접 입찰, 평가하는 경우 투명성을 저해하기에 건의를 드립니다.

1. “제안요청의 표준지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제안요청서를 전년도와 비슷하게 베껴쓰는 관행이 아직도 만연하며, 결국 전년도 사업수행자가 유리한 구조를 계속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2. “개찰결과의 의무화와 공고“가 필요합니다. 개찰후 탈락시에 경쟁업체들과 비교를 통해 무엇이 미진하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알아야 다음번에 또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생길 터인데 직접입찰의 경우 일부기관들은 개찰결과를 공지하지도 않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 투명한 평가과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부처추진계획

조달청

조달청은 기술평가 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요기관 직접평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강제할 수는 없으나 공개를 권고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e-발주시스템’의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템플릿에 “전년도 미진한 사항”항목을 신설하여 수요기관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최다다님, 리포미스트님, 다도해님, 공정한실현님, 세븐스타님, 약수님, 정책이실현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1
불공정한 공공조달 가격 근절

제안자 **보라카이**님

주요내용

조달청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고가임.
공공기관의 고가구매 방지를 위해 조달청의 역할 강화 필요

제안내용

같은 물건을 조달청에서 구매할 때와 일반으로 구매할 경우 가격 차이에 대한 제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쓰는 곳이 공공기관 물품 구매이죠 눈먼 돈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달가격과 일반 온라인, 오프라인 가격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정부 마크 하나 박아준다고 적게는 1~20%, 많게는 30%이상 까지 비싼 돈을 내고 물건을 구입하는 공공기관. 조달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슨 이유로 공공기관은 같은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는 것인지요 조달청에 대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부처추진계획

조달청
달청은 좋은 품질 제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데 우선 목표를 두고 조달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2월 가격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가격 부풀리기 의심품목에 대한 심층 가격을 조사하고, 시중가격 집중 모니터링 등 가격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17.12월 신규제품의 적정가격 산출을 유도하기 위해 원가계산 기관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원가계산 기관별 평가결과를 등급화 하여 계약가격결정 시 반영하겠습니다.

12
기술개발지원 정책의 문제점 개선

제안자 **물이 흐르듯**님

주요내용 정부기술개발과제 지원에서 이미 개발한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정부 지원금이 집행되는 등의 행태 시정

제안내용 저는 해외에서 약 10년간 기계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사업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약 9년 이상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분야에서 일하고 정부기술개발과제 심사위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양광발전소와 ESS에 관련된 사업 및 기술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늘 느끼는 점을 여기를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아직도 대부분의 정부 기술개발 과제가 중소기업이 이미 개발해 놓은 기술에 대해 그간 들어갔던 돈을 메우기 위해 신청하고 돈을 받아 기술개발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 몇몇 교수 또는 단체들의 정치적(학문적이 아닌)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크고 작은 정부 기술 개발과제를 따고 그것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는 이미 개발이 끝나고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 또는 제품을 국내에서는 정부과제 비용으로 몇 년 동안 개발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풍력도 똑같은 형태)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이고 그 쓰임에 대해 정부를 믿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기술개발이라는 관점에서, 100%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범위에서 기술개발 비용이 집행되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이미 개발한 기술이 정부 R&D를 통해 지원받지 않도록 평가 시 유사특허 제출 및 중복성 검토 등을

부처추진계획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R&D 출연금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지원배제에 대해서는 기준 등을 검토하여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3 법학전문대학원 공정성 강화방안 추진계획

제안자 **예비법학도**님

주요내용 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자 나이 블라인드처리,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으로 공정성 강화

제안내용

1. 로스쿨 입시 시 지원자의 나이를 블라인드로 기재함을 원합니다. 현재 국내 로스쿨은 명문일수록 나이 차별을 한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전 사법고시 준비자들이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기 어려운 큰 이유 중 하나도 20대 후반만 되도 큰 디메리트가 되는 국내 로스쿨의 특성 탓이 큽니다.
2.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로스쿨들은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성별,학부,학점,리트 점수,어학 점수,기타 유의미한 스펙(예: 공인중계사 자격증 보유 등) 을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로스쿨 측에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부처추진계획 교육부

서류평가시 개인식별 정보를 음영처리하도록 하였고, 면접평가시 무자료면접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6.11.24) 또한 최종 합격자기준으로 출신학부, 전공, 성별 현황을 공개하고, 정량평가 요소(LEET성적, 학부성적, 영어성적 등)는 평가요소별로 평균과 상위 25%, 50%, 75% 지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평가에서 제안 사항을 평가기준에 반영('17년 시범평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이행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법조개혁님, 법학전문대학원생님, 우락님, 국민5님, 번시뽀님, 부족한자님, 고지식님, 얼음사랑님, 지나가던이님, 백설님, harvardu님, SungWoo님, anakin11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4
보훈단체 적폐 청산

제안자 **마당**님

주요내용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의 각종 비리를 청산하여 상이군경회 회원으로서의 자부심 고취하기를 바람

제안내용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회원으로서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의 첫번째로 상이군경회의 비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이군경회는 회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 수의계약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수익금은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으며 각종 언론에 각종 사업 비리와 의혹들로 인해 소속회원들의 명예와 위상에 크나큰 상처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의 지적사례로는
· 상이군경회의 불법적인 대명사업 의혹
· 상이군경회 탈세에 따른 국세청의 세금추징내역 비공개
· 회원은 안중에도 없이 투표권만 있는 대의원에게 특혜를 주는 외국 초호화판 연찬회 실시
· 각종비리들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직간부들 재임명 부당성
· 회계전반에 대한 비공개
· 전국5개 보훈병원장례식장의 보훈대상자와 일반국민들께 돌려줘야할 부가세 환급금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 과납한 이용객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행위
· 국고보조금 승인신청 외 부당 사용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집단인 상이군경회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만약 비리가 드러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부처추진계획 국가보훈처
보훈단체 활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정기감사 등 관리감독 강화하겠습니다.

총회 및 이사회, 집행부의 업무 수행 및 재산사항 등에 대한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훈단체의 자율성 확보하고 수익사업관련 법 위반 시 시정명령, 승인취소 등 법 집행력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익사업은 공인기관의 회계감사, 보훈처 정기감사 등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고 명의대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제'를 실시하여 공정성을 높여가겠습니다. 향후 수익사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수익사업 일괄 폐지, 단체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가의시민님, 밝은미소남님, 아퍼요아직도님, 가효님, 아슬한님, 조규상님 도 유사한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5
외교부 파견 영사 선발 방식 변경

제안자 **mailzzang**님

주요내용

외교부 영사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여, 재외국민도 영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제안내용

현재 한국에서만 소위 외무고시나 외교관 선발 시험, 그리고 타 부처 전입 등으로만 선발하는 외교부 소속 영사들의 선발 과정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사 선발은 위와 같이 순혈주의식으로 선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직접 자신들의 경험을 살리고 외국 교민들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는 재외국민 청년들에게는 거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들을 보면, 현재 각국 영사들은 그 국가 언어도 잘 못하거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영사 업무에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높은 영사 서비스 질은 물론 공평한 선발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외교부 파견 영사 선발 방식을 다양화 하고, 재외국민 청년들에게도 그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그 선발 방식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처추진계획

외교부
외교부는 매년 공개채용과 더불어 경력경쟁채용제도를 실시하여 영사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인재 발굴 노력 추진중입니다.
경력경쟁채용제도를 활용하여, 영사분야에 있어 재외국민을 포함한 관련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채 선발시에도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배경·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인사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잉가님, krista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6
블로그, SNS 등 수익과세 및 관리

제안자 **민재맘 / Hg / 프리지아 / 하늘보리**님

주요내용 인스타, 블로그 마켓의 무등록(사업자등록) 영업행위 만연, 현금결제(계좌이체 등) 유도 등에 대한 탈세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

제안내용

민재맘 블로그마켓, 인스타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억단위의 매출을 올리더라도 일반 직장인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됨.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통한 판매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주길 바람

Hg 온라인 상에서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파는 물건들에 계좌이체로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함

프리지아 요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개인 마켓하는 사람들 세금도 안내고 돈은 많이 벌어들임. 뭔가 법적조치가 필요한 것 같음

하늘보리 블로그나 인스타 등 SNS를 통에서 물건 판매하는 업자들의 세금탈루가 심각함

국정과제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부처추진계획 국세청

6개 지방청 별로 편성된 모니터링 전담반을 통해 파워블로그, 대표카페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 신고접수 내용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탈세 제보가 접수된 사업자의 매출신고 적정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17년 내로 국세청이 국세 부과·징수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제안자 **민서아빠**님

주요내용 코스닥 공매도 제도 폐지 또는 확실한 제한 설정

제안내용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인 카카오가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전하는줄 아시죠? 바로 불법공매도 때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등 증권시장의 목적은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기업이 성장하는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신생벤처기업에서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시작하여 이제 막 싹을 피우려는 회사들이 자본을 조달받기 위해 상장되는 보육시설 이구요. 한마디로 유치원생같은 회사들이 보살핌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 훌륭한 어른이 되게 양육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치원생 같은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돕기는 커녕 갖가지 루머와 찌라시를 퍼트리고 엄청난 자본력으로 없는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일삼아 새싹마저 꺾어버리는 불법들이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코스닥 시장에서 만큼은 공매도 제도 폐지나 확실한 limit를 정해서 기업이 경영실패가 아니라 공매도로 인해 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과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부처추진계획 금융위원회
공매도는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거래방식입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체 거래대금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별도의 과태료 기준 적용', '공매도 잔고 보고 기한 단축' 등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위한님, 마로니에님, 지연동욱아빠님, 태권극진님, 머킬티오님, 공매폐지요청소액주주님, 상워니님, 인당장군님, 우현0416님,관우장군님 외 230여분이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8
화물차 지입제도 전면 개편

제안자 **그러게말이오**님

주요내용 화물차 지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화물차주의 권익 보호

제안내용 화물차지입회사가 화물차주에 대하여 불법증차, 개별사업자에 대한 중량 제한 등 불공정행위를 하게 되는 현 화물차 지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주기 바람.

국정과제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부처추진계획 국토교통부
향후 신규허가 차량은 직영을 전제로 허가하고 기존 차량에 대하해서는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 일방적 계약해지 방지 등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업계 등과 합의하여 지입차주 보호방안을 추진하고 화물업계, 차주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18년 12월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세빛관관여협님, 문정배님, 김기선님, 똘배75님, 예수님처럼님, BreaDho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9
주민주도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추진

제안자 **전희복**님

주요내용 소상공인 활성화 관련 일원화된 정책 추진 및 주민 주도의 지역거점 상권 육성

제안내용 소상공인 활성화 관련 기관별 중복정책을 일원화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거점 상권을 통합 육성 요청

국정과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부처추진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17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및 '19년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17년) 등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108님, 행복하는중님, 채만수님, 중복확인완료님, 치우님, 영진님, 여름빛님, 대갈공주님, 까끄리님, 열심히살래님, 리릭님, 요정님, 대구호빵맨님, 더불어행복한나라님 외 300여분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20
면세품 현장인도 상품의 문제점 개선

제안자 **실망입니다앙**님

주요내용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이 현장인도를 통해 국내에 불법 유출되어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

제안내용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외국인들은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현장인도가 가능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 중국 여행객이나 여행사들이 조직적으로 화장품, 정관장 등을 대량 구매하여 국내 시장에 면세 가격 이하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보따리상 또는 EMS 발송하여 외국으로 불법 방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인 여권 소지자 팀들이 면세점 오픈시간에 맞춰, 각 팀별로 맡은(?) 브랜드로 뛰어가 구매 한도 내에 선착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매일 아침, 서울 시내 면세점 오픈시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도 없는 자들이 불법으로 외환송금, 돈세탁, 수출신고 누락, 부가세 누락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한국 사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화장품 유통업체나 수출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을 잃어 폐업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조직과 조선족이 고스란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소규모 자영업자는 다 죽이는 일부 면세점 정책, 정말 후퇴하는 창조 경제입니다. 해당 부처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제발 개선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추진계획

관세청
우범구매자 선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축적된 외국인의 국산품 구매 및 현장인도 내역과 출국사실을 분석하여 우범구매자를 선별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할

058

계획입니다.
또한 그 동안 법적용의 사각지대였던 면세점내 국산품 판매의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가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벨라벨라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21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의 소비자기금 출연요청

제안자 **젠틀맨사공**님

주요내용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일부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조성하여 소비자재단에 출연해 줄 것을 요청

제안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업체에 과징금 부과액이 1년에 1조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과징금을 모두 정부가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징금의 성격상 정부가 재원으로 가져가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징금의 성격의 일부는 소비자이익입니다. 공공사업의 발주(예컨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국가 SOC사업 등)에서 기업끼리 담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세금에서 가져가는 것이므로 국가재정으로 수입을 잡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를 상대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위반 과징금은 소비자이익(소비자로부터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일정부분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현재 소비자재단)에 출연하여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는 소비자가, 이익은 정부가, 부당이득은 기업이 가져가는 매우 불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소비자이익을 침해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 그 과징금의 일정비율(예 30%)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으로 소비자재단에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기본법(공정위 소관) 및 국가재정법(기재부 소관)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비자권익증진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18년)을 추진하겠습니다.

완윤파님, 제공님, 궈니님, 빨간당무님, Mitch님, manson76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060

22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과 가맹점주들의 생존권 보장

제안자 **라온의기사**님

주요내용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으로 발생한 가맹점주 손해를 가맹본부가 비용 부담하도록 여러가지 방안 제시

제안내용

이번 *** 피자, 피자**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 처벌하고 그들의 잘못에 적절한 조치(처벌)가 가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 각지의 동네마다 있는 가맹점주는 우리네 이웃이고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인 평범한 소상공인들인데, 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생계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분들의 생존권이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는 갑질을 한 프랜차이즈 회사 본사 혹은 회장이나 오너 일가 등 사태에 가장 책임이 깊은 측에서 비용 등을 부담하고 그 부담한 비용들을 가맹점주 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방식들은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겐 불매운동을 자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공익광고 혹은 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매출의 급락을 막으면서 그 매출들의 순이익을 1년 혹은 2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본사 쪽에서는 수익을 거의 못 가져가게 하고 가맹점들이 대부분 가져가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 또는 피해보상 차원에서 본사에서 그동안 불법 편법으로 쌓은 이익금을 가맹점주 들에게 지불하게 한다든지 하는 등 가해자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피해자인 가맹점주 들은 보상을 받고 나아가서는 생존권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부처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이 순이익 또는 이익잉여금을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는 것은 배상원칙에 어긋나고 집행상 어려움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061

다만, 가맹본부 또는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점주 손해는 배상될 필요가 있는 만큼, 해당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上 기재 의무화(예: 제11조제11호 추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동일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김관영·이양수 의원) 국회 계류중입니다. 2017년 12월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화니화니님, 우학님, 약산님, 희운당또님, 푸른산이조아요님, 이상23님, 행복합시다님, 거북파파님, 좋은동반자님, 광급님, sakhun님, honeybears님, phohyo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23
수출 물류비 지원 조건

제안자 **자연터**님

주요내용

aT에서 수출 물류비 지원조건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을 요구, 첫 수출에 도전하는 농가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개선 필요

제안내용

직장생활 15년간 식품회사에 근무하면서, 식품유통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농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자 2004년부터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해 왔습니다. 10여년 국내 농업의 현실과 해외선진국의 농식품(농산물)과 FTA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농산물들을 보면서, 이에 맞서 이들과의 경쟁하고자 7년여의 노력으로 칼라화된 대추토마토를(주황,노랑,흑색,녹색등) 상품화에 성공하여, 2016년 국내에서 6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7년에는 동아시아 시장(일본,홍콩,싱가폴 등)을 직접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저의 생산 기술로 충분히 통한다는 믿음으로 수차례 방문으로 5월부터 홍콩에 첫 수출을 시작했고 일본은 검역기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있어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보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수출하는 농업단체 및 개인에게는 너무 힘든 조건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출실적이 지자체에서는 10만불, aT유통공사 기준으로는 20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어야 이 물류비 보존 제도에 해당되는 현실입니다. 항상 처음이 힘든데, 일정 이상이 되어야 물류비 보조가 진행되다 보니,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당 공무원들은 친절한 대응은 해주고 있지만, 이런 제도 문제로 일선에서 일을 하는 농업인으로서는 농식품 수출에 애로점이 크니 이런 문제를 반드시 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WTO DDA 농업 협상 타결에 따른 수출 보조금 폐지('23년)에 대응하여 수출 물류 효율화 방안 등 물류비 지원 조건을 세분화 하여 추진합니다.

063

품목별 특성을 분석 후, 품목별로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여 수출사업 지원 방안(물류비 지원 방식, 대체사업 발굴 등)을 마련(11월), '18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닭발은세개님, 문통소통님, 포도장인님, 비타민나무농부님, 턍군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24
전자금융거래 제도 개편 필요

제안자 **핫자바**님

주요내용

금융사가 고객에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고 시 금융사가 입증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

제안내용

전자금융거래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전자금융거래에서의 보안 원칙은 사용자가 보안을 책임지고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그렇기에 Active X, exe 파일을 사용해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설치해야 하며, 금융사고가 나는 경우 사용자가 보안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보안 사고들은 업체 내부에서 보안이 허술해서 대량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피해자 수가 훨씬 광범위합니다. 금융기관이 복잡한 보안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금융기관의 보안 의무가 면책된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입니다.

해외의 경우 보안의무 및 입증 책임은 업체쪽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금융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상당수 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에 해외의 경우 Active X, exe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인증기관이 각종 카드사, 금융 공기업, 정부 낙하산의 온상이 되어 본질적인 부분을 절대 바꾸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개혁 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부처추진계획

금융위원회

'자율보안 원칙'에 기초하여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책임을 지는 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생체인증 등을 통해 금융고객의 전자금융거래 불편사항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리셋님, 치우천왕님, jh28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25
해외 동포의 한국 체류 권리 개선

제안자 **신미향**님

주요내용 고려인4세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희망함

제안내용 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고려인4세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국정과제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부처추진계획 외교부
재외동포 대상 한국 언어 · 역사 · 문화 교육 및 모국 초청교류 등 정체성함양 및 역량강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님, Weko님, KLO님도 유사한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26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인권 존중

제안자 **영현아빠 / 김용곤**님

주요내용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요청

제안내용

영현아빠 현재 당사자로서 국제결혼을 해보니 가장 어려운것이 "의사소통"임. 성격, 가치관, 문화, 교육, 등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란 각자가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니 너무나 어려움. 물론 주위에서 민간이나, YMCA, 사회복지관 등에서 주관하는 한글교실이 더러 있지만 교재나 운영방식이 너무 현실에 동떨어짐. 그러다 보니 한국에 온지 10년이 지나도 체계적인 교육이 아닌 주먹구구식 교육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대화마저 어려워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너무 많음 그래서 제안하는 바는 결혼이주여성들과 초등학교 1~3년 정도의 과정을 1개의 학급에 2~3명 정도씩 섞어서 우리나라 정규 초등학교과정을 배우게 했으면 함 지금의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한글교육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국가와 인종을 접하면서 글로벌한 접촉이 가능한 1석2조의 효과가 되고 이주여성들은 차후에 자신의 자녀들이 다닐 한국의 초등학교 문화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 함) 그 후 각종단체에서 취업과 연계해서 도와주고 또 언어소통단절로 인한 배우자와 시댁 이웃 사회의 고립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될 것임.

김용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인만큼 이들의 기본권 보장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정과제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부처추진계획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찰청 다문화가정 등 체류외국인 대상 치안서비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범죄피해 신고를 기피하는 체류외국인들의 치안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운영중인 '외국인 도움센터'를 확대·내실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체류외국인 등 대상 운전면허 교실' 교육수요 확대를 반영, 추가운영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교육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 협력단체 활성화로 치안공동체 참여기회 확대해 결혼이민·귀화자들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공동체 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적 연결망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임을 알게 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피해외국인 구제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조아긋님, 다같이님, 무한창조님, 무예흔님, 마부하이님, 이유꾸님, Mi운오리님, gagcon7님, elance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27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지원 강화 필요

제안자 **모카매니아**님

주요내용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조직화 등이 필요

제안내용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함. 그리고 각 단체들 간의 경험이 공유되고 조직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워낙 적고 경쟁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예산의 중복사용이나 효과적인 집행이 불가능함. 현재의 공무원들에게만 맡기기 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해야 함 공무원 통해 수집하는 목소리는 한계가 있음.

부처추진계획 통일부

UN 인권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 실무공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인권법 연구 및 경험 공유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의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자유누리기님, sunss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28

외국인들의 국내에서의 폭행 범죄, 인종간 혐오 범죄 엄정 대처

제안자 **sksnrnrp12**님

주요내용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폭행 범죄, 인종간 혐오 범죄 등 각종 범죄에 엄중 대처하여 국민안전 확보

제안내용

국내거주 외국인 140만명을 12년에 넘기고 현재 엄청난 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저는 원주민과 외지인 사이에 마찰이 생길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문화는 다인종과 원천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가에 문화가 여럿이 생기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집단화하면 우리 한국인들과 마찰이 생길거라 생각하고 그것이 현재진행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외국인과 원주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국민의 권리를 우선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들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 이민법 개정. 다문화 정책 전면 재검토. 외국인폭행 방지법 제정. 국가 공권력 강화 및 외국인 처벌 및 대응개선. 자국민 우선보호(법안을 통해서도 가능), 혐오범죄방지법 제정.

물론 이 모든 것에 외교적 마찰이 존재함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외국인 범죄나 외국인들이 그들의 문화를 고집함에 따라 생기는 여러 마찰, 반대로 외국인들에 대한 원주민의 차별적 행동 등을 막기 위해 꼭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정과제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경찰청) 금융위원회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성가족부)

부처추진계획

법무부 외국인들의 국내에서의 폭력행위, 인종간 혐오를 범행동기로 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처벌법규의 공백 등을 검토한 결과 '혐오범죄'라는 표현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현행 형사법 체계상 범행의 동기는 양형조건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 특별법 제정은 신중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하여 인종 간 혐오를 동기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하기 위해 불법체류(취업) 등 법위반 외국인 단속 강화하고 경찰 등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 강화 등 법질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세체납 외국인에 대해 체류허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불허함으로써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17. 3. 14.)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기초 법질서 및 국가간 법률·문화차이 등을 교육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 강화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지자체 공무원 등 외국인과 접촉이 많은 공직자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제도, 다문화사회 이해 등 다문화 수용성 교육(연 2회)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블랙이글님, 관망거사님, yeonfan6님, saeya님, nonamei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29
장애인 운동 편의시설 증대

제안자 **제노니아**님

주요내용 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 확충 및 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 확대

제안내용 현재 대한민국에는 장애인 체육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비장애인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은 신체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더 비만일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운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1. 장애인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적게는 하나 많아도 두세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도 적습니다.
2. 그리고 장애인이 시설로 편히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택시나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버스들도 많이 확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년까지 각 시도에 1개소씩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검토 중입니다.
시설 이용을 위한 접근성 개선은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른말님, 나옹님, 에쁜여우님, 해물누룽지탕님, 달개비2님, 어니스트림님, 박지우님, 줏대있는촛불하나님, 하쵸미님, 소이화답님, 돌멩이77님, 연지미카엘님, 마일건님도 유사한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30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제안자 **꽃향기**님

주요내용 현재 가석방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가 필요함

제안내용 저는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를 현재보다 좀더 넓은 방향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석방 허가요건에 따르면 개전의 현저한 성상, 형기의 3분의1이상 경과, 벌과금 완납 등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2016년 한해 가석방이 신청, 허가된 경우는 단 1건도 없다고 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제도는 있으나 좁고 작게만 운영된다고 볼 수 있지요.

법률 선진국들은 수용자에게 가석방은 꼭 필요한제도이며 되도록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혹한 형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며, 또한 법의 처분에 따른 형기를 다 채워야만 그 죗값을 다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과자란 낙인은 그들이 사회에 복귀하여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가장 낮은 단계의 사회적 약자' 이자 평생동안 감수해야 될 또 다른 2중처벌인 셈입니다.

인면수심의 흉악범이 아니며 초범이거나 징벌을 통하여 충분히 교화 가능한 수형자가 반성과 참회에 따른 개선의 여지가 분명하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했을 때 가석방기회가 주어진다면 용서를 받았다는 따뜻한 온정을 느끼게 함은 물론 사회로 복귀, 새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됨은 물론 재범률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추진계획 법무부

사회적 약자 및 생계형 범죄자, 모범 수형자에 대해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고자합니다.

국정과제 14번「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과제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하며 '17.8.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세부실행계획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님도 유사한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31
급식카드 디자인 개선

제안자 **따끈**님

주요내용

결식아동의 급식카드가 주위로부터 낙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

제안내용

'급식카드 사용시 창피함'의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급식카드는 일반신용카드처럼 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단말기를 통해야 하는데요. 계산 과정에서 각종 사건이 벌어집니다. 점원이 결제 승인을 할 줄 몰라 헤매거나, 주인이 격려해준다고 건넨 말에 아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편의점 업체들은 급식카드 이벤트까지 하는데요. 바나나우유 등을 선물로 증정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때마침 편의점에서 주변 친구들이라도 만날 수도 있겠죠? '급식카드'가 아이에게 낙인이 되는 순간들입니다.

급식카드 이용시 심리적 거리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 디자인을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만들고 단말기도 일단 카드와 똑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꿉시다. 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세심하게 다시 디자인합시다.

법무부 : 사회적 약자 및 생계형 범죄자, 모범 수형자에 대해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고자합니다. 국정과제 14번「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과제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하며 '17.8.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세부실행계획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별로 지역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에 설치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 급식지원 방법, 소요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이러한 결제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안님, silvia0320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32
공무원 시험시 저소득층 자리 구분 폐지

제안자 **빵글**님

주요내용

공무원 시험시 저소득층 자리배치를 구분하여 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저소득층의 박탈감을 느끼게 함으로 폐지 요청

제안내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의 말씀과 같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구성원들 중 한명이 되어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기를 꿈꾸는 예비 공무원입니다. 또한 저는 사회적 배려자로 구분이 되는 저소득층 국민이기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4월에 시행되었던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저소득층 자리 배치 안내를 보고 느낀 것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직접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지원자들과 저소득층 지원자들이 한 교실에서 시험을 볼 경우 저소득층 지원자들의 자리가 눈에 띄게 다른 색깔로 구분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따로 구분된" 저소득층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이 되었고 저희를 바라보는 일반 지원자 분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그대로 느끼며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악의없이 자리를 헷갈리지 않게 배려해주신 뜻은 이해하지만 배려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 역시 보통의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의 벽이라고 느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시행될 공무원 시험에서는 다른 저소득층 지원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진정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추진계획

인사혁신처

이번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8.26)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좌석 표기를 폐지하여 시험 운영할 계획입니다.

3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마련

제안자 **한끼두끼세끼네끼 / 하늘반짝이**님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 문화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

제안내용

한끼두끼세끼네끼 회사에서 성추행이나 희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보낸 카톡이나 문자를 회사 입구에 게시하게 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은 회사도 처벌받게 해야 함. 회사에서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경우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게 해야 함.

하늘반짝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람. 이 규칙은 학교, 기업, 직장 등 모든 사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임.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임.

부처추진계획 고용노동부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위험한 근로환경 노출, 폭언 등 근로자 인격 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괴롭힘의 개념 및 유형, 실태확인, 헌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확인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거, 사용자의 조치사항, 근로자의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 정리 등 관련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강제근로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금지 등을 입법화하는 "알바존중법"을 도입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 있는 바, 이를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확대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문찬성님도 유사한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34

장병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군 인권교육 시행

제안자 **그날이기다렸다**님

주요내용

장병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시행하여 군대에서부터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가 꽃피고 사회도 인권중시 문화가 확산되면 강한군대, 강한나라가 될 것임

제안내용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군대에 가면 고생만 하고 군대 가서 나쁜 권위주의를 배움에 따라 제대 후잘못된 군대문화를 사회에 전염시켜 인권을 천대하는 사회가 된 면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군대하면 가기 싫고 고생만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음.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인권이 몸에 배도록 군대 훈련소나 자대 배치 후 군기부터 잡을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는 적응기간을 두고 그동안 인권 체험교육을 철저히 하면 인권침해가 사라질 것임.
군대부터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가 꽃핀다면 사회도 인권중시 문화가 확산되고 강한군대 강한나라가 될 것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구타, 기합, 군기잡기,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고참, 하사관, 장교들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사병과 하사관을 별도로 인권위에서 지정한 인권담당을 지정하여 함께 막사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함.

부처추진계획

국방부
입영 전 인권 체험교육으로 입영자들에게 현재 훈련소 또는 교육기관에서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인권교관, 인권상담관(법무관)을 통한 인권·군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병·간부 대상 인권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으며 병영 내 인권담당 장병 운용, 국방헬프콜(24시간전화·인터넷 신고시스템) 및 군인권 지키미(인터넷/인트라넷 인권침해 신고·상담 시스템)도 운영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병 인권보호·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권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35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실질적 지원 방안

제안자 **등대**님

주요내용 재정 및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실질적 지원 방안 추진

제안내용 통일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할 탈북민과 그리고 특히 그들의 자녀에 대해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탈북민 자녀 중 많은 아이들이 중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으로 부모님을 따라 들어옴. 그 아이들은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함. 또한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하려고 해도, 학벌이 중요한 이 나라에서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 갈 수 있는 기반이 전무.

탈북민 전형에도 해당되지 않고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이어서 탈북민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 이 아이들과 통일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검토 바람.

부처추진계획 통일부

탈북민들은 하나원 수료 후 정착이 이뤄진 뒤 2~3년 내에 제3국 출생 자녀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들 자녀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국회 협조를 통해 향후 소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학생)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들이 남한 학교 및 생활에 조기 적응토록 이중 언어가 가능한 교사(강사)를 매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임님, 남강민님, 코알라님도 유사한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36

일감 네트워크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제안자 **하랑**님

주요내용

탁월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과 이들의 재능·기술을 원하는 이들이 손쉽게 연결되는 일자리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온라인 협업 플랫폼 도입을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인재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둘 다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업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창업을 하려면 여러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패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려고 하면 패션 쪽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웹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하죠. 패션 쪽의 전문가와 컴퓨터 쪽의 전문가를 쉽게 연결해줄 수 있는 다리가 놓아진다면 훨씬 더 경쟁력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해줄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국민들은 어느 쪽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지를 프로필에 적어놓습니다. 플랫폼의 다른 한편에는 국민들이 창업 아이디어들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창업을 원하는 사람은 제안된 창업 아이디어들 중 하나를 고르고, 자신과 협업할 인재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찾아냅니다. 온라인 협업 플랫폼을 통해 이렇게 창업을 활성화시킨다면 일자리난은 저절로 해결되고 경제 또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과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부처추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으로 확대 추세인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퇴직과기인·소공인과 창업자 간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비)창업자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일감)과 파트너를 매칭하는 민간

플랫폼과 공동으로 '일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17~), 또한, 효과적 일감 연계 및 파트너 매칭을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극대화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3님, 한별컴퍼니님, 공주님, 위드케이님, 코드시바님, aik805님, losgodn님 도 유사한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37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추진계획

제안자 **구상**님

주요내용

자본금 요건 폐지 등 허가기준 완화로 물류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조속통과

제안내용

2016년 11월에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325)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바랍니다.
관련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개정안은 기존의 가맹사업과 달리 자본금 요건의 폐지 등 허가기준을 완화할 경우 현행법상 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화물정보망 업체들이 개정안에 따른 물류네트워크사업의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동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특히 소규모의 IT기반 스타트업 기업들을 포함한 신규기업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창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을 올리는 저 주변의 다수 사람들도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창업을 하여 본 사업에 도전해 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관련 일자리와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부처추진계획

국토교통부
현재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반영된 「화물자동차법」개정안에 표준운임제를 반영하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화물운임제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시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18.12월 말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초사님, 김왕국님, 독일병정님도 유사한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38
사회복지 인력 처우개선 방안 마련

제안자 **이수현**님

주요내용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제안내용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인식개선, 교육강화, 소통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과제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우선 '17년 12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사회복지 인력의 보수·근로시간 등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과 소통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이고, 교대 근무제도 개선과 대체인력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돌봄서비스 인력 등에 대한 직무·인권 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뽀리님, 제스님, 아이사랑12님, 테무진님, 보건복지님, 코람데오1님, 민생정책님, sona님, king9님 외에 160여분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39
인턴, 레지던트 처우 개선

제안자 **한우리 / yirose**님

주요내용 인턴, 레지던트에게도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정상적인 근로 보장

제안내용

한우리 인턴,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의사들은 여름 휴가 7일을 제외하곤 1년 내내 공휴일, 휴일 등 전혀 휴식을 취할 수 없음. 물론 근로자로서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연. 월차 휴가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1년 내내 휴식없는 업무 폭주 속에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긴 어려움. 인턴, 레지던트에게도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정상적인 근로 상태에서 환자를 돌 볼 수 있도록 대학 병원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람. 의사를 추가고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봄.

yirose 의사 즉 인턴 레지던트는 수련의란 이름으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없으면 환자 진료 등 병원운영을 할 수 없는 노동자이며 당직 등 24시간 풀 노동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결핵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의료인의 안전이 곧 환자들의 안전인 것입니다. 인턴 레지던트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하고 8시간 근무 외에는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의 결핵 등 감염병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 등 의료인이 아픈 경우 곧바로 무료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인들이 아픈 것을 참아가며 진료할 경우 결핵 등 많은 감염병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환자안전 및 수련의 질 개선을 위해 '15년 12월 전공의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16년 12월 법 시행 이후 '17년 1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17년 3월 수련규칙 표준안 마련 등 수련환경 개선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4주 평균 주 1일 휴일 부여, 출산전휴가, 모성 보호 등 전공의의 근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너지님, 인턴님, suyeon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40
노인 일자리 품질 제고

제안자 **성빈의삶**님

주요내용

연령주의로 인해 '노인'일자리나 '고령자' 일자리는 경비나 청소와 같은 단순노무직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개선해 고령자들도 좋은 일자리, 자아성취 등 할 수 있도록 지원

제안내용

현재 노인일자리나 사회프로그램을 보면 65세 이상은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될 때가 많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오히려 어떤 분야는 젊은이 보다 연륜이나 글씨나 일처리나 이런 것들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를 보면 전공이나 능력은 무시하고 뭉텅이로 노인으로 본다는 것이 현실이다. 좀 더 생각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연령주의)은 과학적 사실과도 크게 다르고 과장된 단순한 판단임에도 우리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연령주의로 인해 "노인" 일자리나 '고령자' 일자리는 경비나 청소, 식당보조 같은 단순노무. 기술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고령자를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거나 꺼리고 있는가 하면 고용하더라도 부정적 선입견으로 단순 노무. 기술직에 한정하고 소규모 고용에 그치고 있어 안타깝다.

국정과제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17년 43.7만개에서 '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등)하는 등 노인 빈곤 완화 및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18년~)하여 은퇴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겠습니다.

풍신수굴님, 염소님, 크롱앤롱롱님, 여수시니어님, 도시재생주거시민연대님, 응원합니다ggsla, 찐감자님, Japcho님, mago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41
공공일자리 노인층 확대 공급

제안자 **장복산**님

주요내용

주차관리 및 하천·공원 청소업무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층에게 공급해 주세요.

제안내용

노인과 장애인에게 일방적·시혜적인 연금을 주는 것보다는 자존감을 주면서 경제적인 보탬을 주는 정책 필요

1. 주차관리 안내 요원 : 주차문제가 심각한 현실임, 불법 주차를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 정책 추진 필요(효율적인 도로관리, 이웃과 분쟁방지 등)하며, 우선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주차비(월 20,000원정도)징수하면 노인일자리(월 20만원) 몇 만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인구밀집지역 빈집 활용 및 주차타워 건립하여 노인일자리 확보하고 도로변 주차선 구획 필요(무질서한 주차로 소방차 왕래와 교행시 운행자간 분쟁 불식)
2. 하천 및 공원 주변 청소 월 2회 정도 정기적인 청소와 환경지킴이 제도를 운영하여 소속감 속에 일도 하고 월 10만원 정도 수입 보장했으면 함(어려운 노인층의 월 잡비 지출이 십만원 내외라고 함)

국정과제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17년 43.7만개에서 '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등)하는 등 노인 빈곤 완화 및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18년~)하여 은퇴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겠습니다.

로그아웃님, 사막의별, 박제현님, tmakdlf00님, 염소님, Japcho님, 더블린님, 우수의사냥꾼님, 김앤윤님, dusiman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42
비정규직 실태조사 시 직접 조사

제안자 **권율**님

주요내용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자 실태조사 시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고용주를 통하지 않고 직접 조사 요청

제안내용 철도공사 용역업체 종사자,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후 비정규직, 간접고용자 실태조사는 형식에 불과, 노동자에게 직접 조사하지 않고 형식만 갖춘 실태조사 이런 것을 왜 하고 있는가?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작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국정과제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비정규직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부처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올해부터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여건 실태조사 시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해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4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개정

제안자 **기서지**님

주요내용

고용한 근로자가 많을수록 법인세를 낮게 책정하여 일자리 창출

제안내용

수익이 같으면 법인세를 다 똑같이 낸다. 공평한가?
회사 A와 회사 B의 수익이 200으로 동일하지만 근로자 수가 각각 10명, 20명이라면 사회에 기여하는 수준은 다르다. A 회사가 일자리 늘린 수도 많고, 근로소득세, 소비세를 증가시켰고, 회사의 4대 보험료 부담액수도 두 배이다. 이처럼 회사A와 회사B가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다른데 소득이 같다고 법인세를 똑같이 낸다면 과연 공평한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제도를 고칠 것을 제안함
- 고용한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소득대비 법인세율이 낮게 책정함
a. 세율표준 산출 = 과세표준 / 고용근로자 수
b. 법인세율 설정 = 세율표준이 클수록 법인세율이 높게 설정
c. 세액산출 = 과세표준 X 법인세율

이 개선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a.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 고용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법인세 인하효과
b. 기업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기여분에 대한 보상
c. 기업 불평등 해소기여

부처추진계획

기획재정부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현재 다양한 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9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양질의 일자리 증가 시 다양한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제안자 **복지진제**님

주요내용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어 처우개선 필요

제안내용

보건복지부가 마련하여 매년 지자체로 하달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빛 좋은 개살구. 지역마다 준수여부가 상이하고, 복지부조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호봉체계조차 없는 상태이며,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아동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의 노동환경을 살피는 것은,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위해, 정부를 대신하여 이웃을 챙기는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향후 진정한 복지국가로 전환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473만원/월) 인상 추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반영을 위한 연도별 운영비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바다다님, 김해련님, 정희리님, 승아리님, okmori님, 김금분님, 이이지지연연님, 하나님, 김은기님, 준이맘님, 김미녀님, 수비님, 안산광림지역아동센터님, happy-Na님, 융짱님, 쩡이맘님, 정재철철님, 고구마3985님, 민천사님, fjqn4832님, 이미철님, 아이가살기좋은세상님, 김민선님, 하따구리님, happy-영님, 희망2015님, 주선경님, 현시리님, tatatara님, fk2020님, 해바라기1님, 치와와님, 김진아님, 한태일님, 모두모두님, 와동주사랑님, 장재희님, 아카시아2sla, 가로수031sla, 주순옥님, 한정희님, 꿈이있는사모님, 안산지역아동센터공익님, bluemom님, 살포시님, 주흥별이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45

농촌지역 간호사 인력 부족, 간호사 처우 개선

제안자 **점보**님

주요내용

· 농촌지역 간호사 인력난 해소
· 병실개수 당 의사, 간호사 인력 법적으로 명시

제안내용

농촌지역 병원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여 응급 구조사로 땜질을 하고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실렸습니다. 매년 임금을 6-7%씩 올려도 간호사 구하기가 어렵다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요양병원과 간병간호 통합서비스가 대학병원까지 확대되고 있어 그 쪽으로 나가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님은 본질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지방병원의 주된 인력은 병원장의 친, 인척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개인병원 비리의 주범...병원 사무장... 개인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임금올리면 뭐합니까. 잘못한 것, 병원에 무슨일 생기면 의사, 간호사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의사,간호사들 누구에게도 말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옮기는 것입니다.

병원인사 상황 확인해 보세요.. 사실입니다. 병실갯수 당 의사, 간호사 인력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병원운영실태 최소한 반기별로 감찰해야 합니다. 위반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및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을 통해 활동 간호인력을 늘리고, 유연근무 활성화 지 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별표 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규정을 두어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수에 따라 의료인의 정원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6
보육시설 시간연장반 운영 여건 개선

제안자 **포도원**님

주요내용 보육시간 조정, 지원 단가 현실화, 보조교사 배치를 통하여 보육 교사들의 부담을 해소.

제안내용 보육시설 교사들이 초과근무를 원치 않는데다, 초과 근무 시 근무 수당은 도저히 늦은 시간, 아침 일찍 운영하는 대가로 지급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오롯이 작은 가정어린이집 원장인 제 역할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 개인 사생활을 가진다는 것은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은 아이를 새벽 5시 혹은 6시 반에 맡깁니다. 또 다른 가정은 저녁9시 가까이 되어서야 옵니다. 원장 혼자서 15시간 이상 중노동에 가정생활 포기 지경에 이르러 이 업을 사명감 가지고 해온 세월이 야속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정책을 만드신 분들이 너무 너무 원망스럽고 야속합니다.
시간 연장반에 보조 교사를 반드시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연장반 보육료가 한 시간에 3천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경우 입니까? 5명 이용해야 일만 오천원 인데 한명이 이용하던 5명이 이용하던 어린이집 교사는 그 시간 오롯이 근무해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어야 하기에 비용은 숫자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왜 cctv를 설치해도 평가 인증을 받아도 아이들 학대 뉴스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영아 3명당 교사 1명 비율(0세아) 영아5명당(0-1세반) 교사 1명은 극한의 직업조건입니다. 보조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상적이고 착한 선생님들도 지쳐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보육시간 조정은 어린이집의 운영의 기본 틀로써 맞벌이 가정 등 보육수요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등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 중이며 시간 연장 어린이집 지정 확대와 지원단가는 다른 보육서비스 단가 적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및 보조교사 배치 관련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대체 교사 지원 등 교사-아동 비율 감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ekdi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47
사서보조에서 사서실무사로 불리는 사람

제안자 **도쟁이**님

주요내용 사서보조, 사서실무사 명칭을 사서로 바꾸고 방학에도 급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안

제안내용 저는 12년째 초등학교 도서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공부했고 사서 자격증과 교사자격증이 있음에도 사서보조로 불리다 요즘은 사서실무사로 불립니다. 왜 사서를 사서라 부르지 못하고 보조나 실무사라는 이름을 붙여 불릴까요? 일반 사서직군과 일은 똑같이 시키고 싶고 대우는 낮춰주고 싶기 때문이겠죠!
사서직공무원이나 사서교사의 정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 교육청 구인 공고를 보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해 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엔 연180일 근무를 시작으로 이제 275일 근무를 합니다. 방학엔 기본급여도 없이 알바도 못하고 원치 않은 실업자입니다 그나마 생긴 몇 가지 수당도 방학 하는 달엔 날짜로 계산해서 받거나 못 받기도 하고 마치 하루하루 계산하는 일용직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사서교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직업을 갖는 젊은이들이 사서라 당당히 불리고 방학에도 급여 걱정 없이 일하고 받은 급여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식구들 생계를 유지 하고픈 바램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대통령님 저는 사서공무원도 아니고 사서교사는 더욱 아니고 그냥 학교도서실 사서이고 싶습니다.

부처추진계획 교육부
학교회계직원의 직종구분 및 처우개선 등은 시·도교육청 훈령,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교육감의 관장 사무('14.2.18. 대법원 2013두22666판결)이나 시·도교육청과 직종구분 개편 및 처우개선 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8
과학기술인 육성 및 연구 지원

제안자 **김인영**님

주요내용 이공계 연구가들의 연구환경 개선 및 제도 보완

제안내용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국정과제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부처추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기업과 대학원이 프로젝트 기반의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 후 연구인력으로 활용 중입니다. 동 사업에 석·박사 과정의 연구인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대학간 컨소시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신진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실무형 R&D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진출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9
ICT와 공공산업의 전면적 융합

제안자 **정승호**님

주요내용 우리 문화·역사 관련 자료의 DB화

제안내용 우리 문화·역사 관련 자료를 한글 및 영문으로 DB화해서 외국인 등이 우리 문화·역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부처추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년 12월까지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통해 인공지능이 고전문헌을 자동번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18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고전문헌의 한글번역 및 영문번역, DB 구축 등을 위해 '지식정보자원 DB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효율적 운영방안

제안자 **kist92**님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경제성(B/C)가 아닌 기술성 평가로 전환하고 정부지원 타당성(공익성)만 평가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제안내용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해당됨

문제점

1. 국가연구개발사업(R&D)은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장기 개발기간이 소요되며, 성공여부 또한 불확실한 미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심사에서는 기술적 타당성 뿐 아니라 경제성을 입증해야 함. 지능정보기술, 미세먼지 제거기술, 양자통신기술 등은 최신 기술로 성공 가능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나 B/C분석을 우선하는 현재 예비타당성 제도로 인해 기술개발 시기가 최소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음. 경제전문가가 첨단기술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봄. R&D는 경제성(B/C)이 아닌, 기술성 평가로 전환하고, 정부지원 타당성(공익성)으로 평가기준 변경
2. 전부처의 R&D사업이 2022년까지 일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부처에서 예비타당성 준비를 하게 됨, 따라서 실질적인 연구개발 대신 대규모 R&D사업에 몰두할 것임. 범용기술에 대해서는 일몰 예외를 인정하고, 별도 예타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국정과제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부처추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17.5~9)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추진(`17.9)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몰대상 사업의 계속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과심 전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일몰 제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심사를 거쳐 일몰제 적용 예외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51

연구비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제안자 **kjmin5**님

주요내용 정부 연구 개발비 인건비 계상 등 연구개발비 전반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제안내용 일자리 창출 관련 작은 생각을 담아 봤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연구소를 운용하며, '연구 관련 정부과제업무'와 본연의 '회사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1. 회사 프로젝트를 민간이 아닌 정부기관에서 수주하는 경우 제안서에 언급한 투입인력 확인 및 관리가 사업종료까지 유지되지 않고 처음 입찰 평가시만 형식적인 차원에서 유지되며
2. 투입 인력 산정시 중소기업인 경우 1인당 2~3개 프로젝트에 중복 투입되어, 직원들은 업무 과중, 납기, 품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반면 회사는 최소 투입으로 이익을 더 창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안서 투입인력에 대해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정부연구과제 인력투입 관리를 정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중복투입을 막도록 관리만 하더라도 민간 회사들이 중복투입 하지 않고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부처추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말까지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R&D 과제의 참여율과 관련, 과제마다 중복으로 과다 계상하여 실제 연구 수행인력과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의미덕님도 같은 의견 을 제출해주셨습니다.

52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제안자 **lllilillll1**님

주요내용 광역시도별 1개 구에 전기차 허브를 구축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

제안내용 광역시도별 1개 구에 전기차 허브 구축 필요, 21세기를 정보기술시대로 선도한 빌 게이츠가 자신의 20대를 회고하며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에게 인공지능(AI), 에너지, 생명공학을 세상을 바꿀 업종으로 지목. 미래 신성장동력을 즉각 현실로 준비해야 함

국정과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 육성)

부처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대기오염 저감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전기차 국내 보급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22년까지 전기차 국내 보급 누적 35만대, 공용급속충전기 1만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 가격저감 등 전기차 핵심부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광역시도별 1개 구마다 전기자동차 태양광충전소 및 홍보관을 설치해 전기자동차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uniflower님, 충북예비공무원님, 바람없는바다님, 이슬방울님, 올님, 도현맘님, 환경지킴이님, SYS님, 크레브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53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제안자 **DK**님

주요내용 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제안내용 대한민국의 장점은 삼성과 엘지 현대 등 글로벌 브랜드(대기업)의 보유와 높은 교육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미래 산업은 제조업과는 다르게 한 기업이 전 세계를 독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브랜드(대기업)의 자본력과 수준 높은 교육열을 통해 시장 선점이 필요합니다.

정책 :

1. 국가적 컨소시움을 만듭니다.(대기업 그룹, 중소기업 그룹, 대학 그룹)
2. 국가에서 미래 핵심 기술 목록을 작성합니다. (예 인공지능, 미래 대체 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기술 등) 대기업을 모아놓고 각 기술별 경매를 시작합니다.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실제로 지불할 금액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3. 기업에서 지출하기로 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국가에서도 지원합니다. (금액을 그룹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구 개발에 필요한 외부의 인재등을 데려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 각종 법률문제 해결, 세금 면제, 특허관련 문제 등에 지원)
4. 대학교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기술 개발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함 (현재 대학교 교수들은 국가사업이나, 대기업의 사업을 하기위해 연구나 교육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 중 이 사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교수들이 교육과 개발에만 힘쓸 수 있도록 함)
5. 컨소시움 종사자는 법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근로 기준을 반드시 이행.
6. 실제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제대로 된 지적 재산권 인정.
7. 이 컨소시움을 통해 얻은 특허는 모두 크로스 라이센싱

국정과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청년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	
부처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대기오염 저감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전기차 국내 보급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22년까지 전기차 국내 보급 누적 35만대, 공용급속충전기 1만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 가격저감 등 전기차 핵심부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광역시도별 1개 구마다 전기자동차 태양광충전소 및 홍보관을 설치해 전기자동차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직무발명의 범위를 확대하여 종업원의 보상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 승계 절차 개선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난 6월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관리 표준메뉴얼' 개정을 통해 R&D 참여기관이 사전에 직무발명 승계·보상규정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지침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새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
국가연구비 지원체계 선진화

제안자 **선임연구원**님

주요내용 R&D 관리규정 및 시스템 일원화·간소화를 통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현재의 국가연구비 지원체계에 관해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점들을 토대로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지원 받은 연구비의 회계처리 관련하여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부처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짜 놓은 사업계획서상의 예산 항목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비 정산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연구의 경우 그 특성상 미리 예산 상세항목을 정해놓기가 매우 힘든 측면이 있고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예산에 미리 잡혀있지 않은 10만원 미만의 소액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번 예산변경신청을 해서 승인받아야 해서 막대한 행정낭비가 초래됩니다.

이에 제안하는 것은 연구비로 사기에 부적절할 수 있어 승인을 득해야 하는 물품들만 리스트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고, 사업계획서 예산에는 일정액 이상의 물품만 따로 기재한다던지 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예산관리에 연구원들의 귀중한 시간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전관리보다는 적발될 경우 큰 패널티를 부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정과제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부처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연구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R&D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적용되는 물품구매 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소액물품 등 구입은 연구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비를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상 소액품목을 제외한 일정금액 이상의 주요 품목만 기재토록 하여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17.11월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선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머엉하니님, 국민한사람7님, 꿈많은공순이님, 동그리3님, 공간사랑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55
Plant 산업 활성화

제안자 **알렉스정**님

주요내용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Plant 산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확충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제안내용 본인은 석유화학, 산업설비 및 발전 Plant 해외 건설 총 30년 이력을 가진 시람으로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정부 주도형으로 창출함으로써 노동자 개인 및 국가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 도모
2. 지식기반 산업의 고부가가치 일자리인 Plant 산업의 다수의 EPC Contractor 및 Plant 운영 보수 분야에 근무한 많은 유능한 인재를 활용

30년 이상의 Plant 건설 및 운영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수많은 기술인들을 퇴물 취급하지 말고 이들을 활용하여 국가주도 PMC(인도의 EIL이 대표적)회사를 만들어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부가가치 있는 수조원 단위 대형 Plant Project를 PMC와 국내 EPC Contractor가 수주하고, 그 사업의 종속적인 회사들이 생산 활동을 하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중소 Plant도 더불어 수출이 된다면 국가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 이 증대되며, 기술 또한 대한민국의 자본으로 남을 것 입니다.

국정과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부처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주도의 PM 기업 신설은 이미 관련 공기업이 존재하여, 우리 PM 산업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PM산업 역량은 선진국의 75%내외 수준으로 고급인재와 해외 네트워킹, 기술역량 등 핵심적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간 상세설계, 시공 등을 주로

수행하여 PM역량이 글로벌 수준과 괴리가 있고, 국제적 인증을 받은 인력도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17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PM 교육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18년에 글로벌 인증기관 도입을 추진하여 인증 받은 해외인재를 양산하고자합니다.

56
우수 기술을 활용한 창업활동 촉진

제안자 **수퍼에디슨**님

주요내용 우수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개선

제안내용 저는 충남 부여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발명가임. 현실에서의 창업지원 규제는 저와 같은 개발자에게는 넘기 어려운 규제임. 특히 관련 종사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그런 역사가 있는 회사여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기관에서 지원 결정을 할 때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평가점수로 사업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를 희망함.

국정과제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부처추진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초기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별로 IP 창업 촉진 거점을 마련하여 예비 창업자가 손쉽게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화 할 수 있도록 'IP 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900억원 규모의 창업 초기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및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7
중소기업 계측기술 지원 정책

제안자 **인생상담**님

주요내용 전기전자 생산 중소기업체에 필수적인 계측장비 구입 및 기술인력 육성 지원

제안내용 중소기업계측-기술지원 정책

1. 인력 지원: 전기전자 생산업체의 제품연구개발 및 품질 보증,생산에 필수적인 장비 (일명: 계측장비)들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계측장비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체는 계측장비를 다루는 유능한 경험많은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거,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숙련된 계측 엔지니어링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설부서를 창설하여 기술인력자 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시설장비 구축 : 중소기업에 필요한 계측장비는 국가 지원금으로 장비 구매 또는 국가 산하에 보유한 계측기를 이용하여 문제점 해결했으면 합니다.
3. 기술인력 국가적 차원 양성 : 일정기간 동안 숙련된 계측기술자를 육성하고, 육성된 기술 인력은 중소기업 분야만을 지원하는데 활용

부처추진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신규 개설할 시 수요조사를 통해 계측시설장비 관련 전문학과 등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바우처(구매비용의 60~70%, 최대 7천 만원 지원)로 운영기관(대학·연구기관)의 계측장비 이용 가능하고 기업의 장비구매 지원은 정책자금 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지원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8

정보격차 해소지원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제안자 **천공태자**님

주요내용 장애인 학습, 생활 관련 필요한 기기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 필요

제안내용 저는 1급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미국이나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장애인용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고가의 제품일 경우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1년에 1번 특정기간에 신청하여 몇명 밖에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정보 접근을 위해서는 점자가 필수적입니다 음성 위주로 녹음도서나 스크린리더 등등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발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e와 모음의 ㅣ 숫자 2는 모두 이로 발음 됩니다. e편안 세상인지 2편안 세상인지 이편안 세상인지 음성으로 구별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점자가 필요합니다.
점자정보 단말기는 고가여서 기초 수급자 계층에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면 맹학교에서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반납해야 합니다. 복지관이나 각 지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조공학센터를 통해 대여 받아야하지만 대여비도 만만치 않고 1년이 지나면 역시 반납해야 합니다. 저 같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미국과 스위스처럼 필요한 기기가 있다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부처추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장애로 인하여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 대비 보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적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9
살고 싶은 농산어촌 공간 조성

제안자 **이재철**님

주요내용 범정부차원의 깨끗한 농산어촌 만들기 캠페인 추진

제안내용 범정부차원의 깨끗한 농산어촌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어주세요.

국정과제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부처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의 157개 시·군(1,413개 읍면, 36,836개 행정리)에 깨끗한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깨끗한 농촌환경, 깨끗한 농축산물, 깨끗한 농업인 달성을 위한 30대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17년 11월 농촌계획대전, 경관사진전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60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방안

제안자 **아름다운세상**님

주요내용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귀농 관련 농지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맞춤형 one-stop 정보제공 필요

제안내용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농촌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행착오가 많음. 농촌에서 잘 되고 많이 하는 작물과 임대 및 매매농지 현황, 지자체 지원내역 등 귀농을 선택하려는 예비 귀농인들이 활용하고 문의 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후계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부처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먼저 '17년 9월까지 귀농·귀촌 희망자의 현 상태(자산, 희망지역, 작목, 기대소득 등)를 자가진단하고 필요 정보를 매칭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컨설팅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7년 11월까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수요자 맞춤형 One-stop 지원체제로 개편하겠습니다.

61
아동그룹홈의 운영환경 개선

제안자 **한소리**님

주요내용 아동그룹홈의 예산편성 등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운영환경을 개선 요구

제안내용 그룹홈(전국500여개)은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사업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예산을 일반 복지예산이 아닌 복권기금에서 잘못 편성되고 있고, 다른 아동양육시설 대비 차별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1. 그룹홈입소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양육비전액지원에 비해 다양한 내용의 차별적 지원이나 비지원으로 차별이 심각합니다.
2. 그룹홈 종사자는 기재부 복권기금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30년간 일한 시설장이나 초임종사자 모두 월 150여만원의 실질급여를 받고 있고, 업무를 24시간 지속적으로 하는 등 노동법 위반이며 다른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룹홈의 운영비는 월 28만원으로 비현실적이며, 타 체계에 모두 설치된 운영지원단도 미설치되었고, 아동자립지원요원도 아동의 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룹홈의 경우 단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정과제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호봉제 실시를 통해 종사자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단계적으로 종사자 배치를 확대하여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할 예정이며 시설운영비 지원단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한규님, 김마르코님, 순님, 희망의예표님, 사와디카님, gkdis님, lmy4523님, 떡잎알아보자님, mama1016님, dreamhouse님, 감사쟁이님, 사랑하기님, 라임엄마님, 예수님사랑해요님, 다원이님, 사랑하는사람님, 백합겅쥬님, Kunique님, 사랑의집님, 연지사랑님, 독수리7형제님, 밝은님, hon7788님, 베타니아님, 하늘빛님, 꿈자람그룹홈님, mari님, 참빛미소님, 평화로운집천사님, 푸른 달빛님, 큰나무입니다님, wkakfm님, 수아천사님, 동화1님, 마야의집님, mcgregor님, mahanna님, 그룹홈처우개선님, 연하리님, 모퉁이님, 동미5님, 지니지니님, 양재님, 자헤그룹홈님, 다솔동산님, hopehouse님, 샬랄라님, 떡잎알아보자님, 최열무맘님, 소나무지팡이님, 박현진님, 잔잔한호수님, 구루미님, 희조님, 온유와겸손님, 경천님, 파란들님, 행복한하루님, 파더스하우스님, 아름다운향기님, 행복거북님, 백합화님, 분홍바람님, 아미고의집그룹홈님, rkd2393님, 돌아애몽님, 자일리톨님, 아이리스파랑새님, 꽃장미님, 해피펜스님, 푸른숲동산님, 문정인님, 햇님님, 행복의뜰님, 두물머리님, 아이리스천사님, 돌깡패님, t h a l f k s님, 007가이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님, 코뚱아살려죠님, 비목인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62
농어촌지역 아동복지 개선 필요

제안자 **하늘과 / 웃는딸기(109)**님

주요내용 아동그룹홈의 예산편성 등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운영환경을 개선 요구

제안내용

하늘과 농어촌 어린이집은 산골에 흩어져 있어서 차량운행시간만 하루 6시간 이상 소요되는데도 차량 2대가 운전기사도 없어 원장 부부가 차량 운행에만 매달리고 원장 월급도 나오지 않는데다 임대료 내기도 어려운 등 폐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농촌 시설을 우선으로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여 농촌에도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현실화 해주셔서 지역아동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후원금이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시설의 월세를 운영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센터장 월급에서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복지사 등 월급을 나라에서 직접 지급하고 운영비에서 월세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면 아동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웃는딸기(109) 저는 농촌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박**입니다. 시골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보육의 정책에서 어린이집 유형이 너무 많습니다.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 저희 어린이집이 민간운영 형태이다 보니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아 무척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교사채용에서 최저임금을 줄 수 밖에 없고 최저 임금을 받고는 어떤 교사라도 1년 이상을 시골로 출퇴근하며 근무하시는 교사가 없다보니 교사이동이 잦고, 그러다 보니 유아반(만3세~5세) 아동들은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이라 영유아들은 더더욱 없을 뿐더러 최저임금은 자꾸만 오르는데 보육료는 몇년째 동결이고 면지역을 차량운행하며 아이들을 등하원시키다 보니 1명을 태우기 위해 10분을 가는 곳도 허다합니다. 차량유지비(유류대 및 차량정비대금)는 한달에 100만원씩 지출되고 몇년째 원장인 저는 제 급여를 가져 가지 못해 제 신용은 바닥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처럼 농촌에 있는 어린이집은 저 개인이 보육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힘든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더욱 부담이 크구요.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그 시점부터 농촌의 어린이집 운영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보다 더 심각한 운영이 되었기에 농촌 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농림수산부에서 20명 미만의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민간은 해당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국의 농어촌 시설에 해당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정과제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보장 ' 공약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기존 민간어린이집 매입, 장기임차 방식을 통한 국공립 전환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63

노인 공동생활가정 (소규모요양원) 지원 확대

제안자 **로제**님

주요내용 공동생활가정(소규모요양원) 활성화와 지원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노인복지 강화 필요

제안내용 9인공동생활가정(소규모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여 집 가까이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소규모요양원을 장려하였고 사랑과 헌신으로 모시고자 하는 일꾼들이 빚내어 공생을 시작하였음
그러나 현재 수가인상에 개인재산 인정하지 않는 공공복지시설 회계를 적용하려고 하여 억울함. 1개의 공동생활가정은 적어도 지역의 6~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 수를 더하면 수천개소가 넘음. 이렇게 힘들게 키워온 요양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 현실화를 요청하며 일자리사업도 유연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함

국정과제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은퇴 세대를 위한 적정한 공적연금 및 일자리 지원, 치매 국가책임제, 여가·사회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여,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는 복지국가 근본정신을 실현하겠습니다.

64

어르신의 경험·노하우 확산을 위한 시니어멘토단 구축

제안자 **굿가이수니**님

주요내용 어르신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사회에 환원되고 자립도 지원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니어멘토단을 만들어 지원·운영

제안내용

· (주요내용) 청년 스타트업 창업자 20만명 양성 지원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 멘토단 10만명 구성

· (추진배경) 인구 고령화 심화 속에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30~40년에 걸쳐 쌓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고급 인적자원임

· (기본방향) 행정, 법률, 통역, 전기, 교통, 건축, ICT, 제빵, 요리 등 전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60세 이상의 은퇴자들로 '전문가시니어멘토단'을 구성 청년들의 창업지원

- (조직) 전국의 '신중년 재충전 센터'에 '시니어 멘토단'과 '재능기부전문가봉사단' 설치 / (인력) 전담 멘토단 4만명, 재능기부봉사단 6만명

· (기대효과) 성공적 벤처 신화 재현을 위한 튼튼한 창업생태계 조성 및 당당하고 명예로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청년층 창업 활성화, 세대 간 대화와 협업을 통해 세대갈등 해소

국정과제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부처추진계획 중소벤처기업부
고경력 퇴직인력 기술창업자 육성, 지역산업 특화형 '시니어 특화창업센터('17. 25개)'를 운영하고, 장년인재 서포터즈 활성화로 시니어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세대간 갈등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멀리서님, 피콜레드님, redionne님, 소사동여명님, 공주님, 벤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65
경로당 와이파이(WIFI) 설치

제안자 **광명이다**님

주요내용 '어르신 SNS강사 양성을 통한 소셜경로당' 사업의 효과 제고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로당에 와이파이 설치 요청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 정권을 인수합니다'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고 설레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어르신 SNS강사 양성을 통한 소셜경로당' 이라는 사업을 6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광명시 50세 이상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카톡 등의 SNS 활용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어르신SNS강사' 로 양성,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또한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하여 손주들과 카톡으로 소통하는 즐거운 '소셜경로당'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어르신 SNS강사들에게는 생활임금제(시간당 7320원)을 적용하여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은 지자체별로 대학생 일자리, 중장년층 일자리 등과 연계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와이파이가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면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없고 실습도 할 수 없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나올 것을 생각해 사용을 주저한 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손주와 어르신들이 모여 세대 공감하는 새로운 '소셜경로당'으로 발전시켜 주세요. 전국의 모든 경로당이 힘들면 우선 광명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전국으로 확대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기존의 경로당을 '소셜경로당' 잘 만들어 주세요~

부처추진계획 지방자치단체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공 Wi-Fi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행복날개님, 공간시N님, 카라반님, Hanji님, Wayne님, 달봉님, 과대포장짜증남님, 빅벨님, 대찌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66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 노인분 복지정책

제안자 **국민이 주인인 나라**님

주요내용

· 치매환자가 장기요양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등급 체계를 현행보다 세분화 하여 대상자 확대
· 건강보험공단에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기관 다양화

제안내용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출산율은 줄고 부양할 노인분들은 많아서, 가족이 노인 부양 및 치매관리에 경제적 부담과 인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출산, 무노동으로 인해 더 부모봉양이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선 치매판정범위 확대 및 판정단체 다원화를 요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치매환자 등급 받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건강보험이나, 의료비, 요양원 등 치매환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치매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등급부여 심사는 너무 형식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못움직이는 분이나, 아무 기억을 못하는 분들만 치매환자로 분류하여 지원을 해주는것 같은데, 등급을 나누어 관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건강보험공단 치매등급 받으려면 안들리는 척, 못보는 척, 모르는 척, 움직이지 못하는 척 하라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교육을 시킨 후 등급을 받으려고들 합니다.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환자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는 판정결과의 전문성, 객관성, 일관성, 공정성 유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의 업무 특성 상 판정기관을 다양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67
노인복지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제안자 **울진군노인요양원**님

주요내용 노인복지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하고 기타 직종은 강제성 부여 법률에 반영

제안내용 노인복지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시설장, 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하고 기타 직종은 강제성 부여 점진적 법률에 반영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라 노인학 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 추진하도록 기 운영 중입니다.

향후 노인학대를 포함한 인권내용을 포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행 후 실적을 보건복지부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둥이 워킹맘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68
요양원 및 노인관련시설 CCTV 설치

제안자 **당당장군**님

주요내용 시설내 입소노인의 안전예방과 학대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90대 노모를 모시고 있는 손녀입니다. 그리고 2,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구요. 일전에 인천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에는 모두 CCTV 설치 및 부모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녹화된 영상을 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에는 기본 방범관련 된 CCTV만 있고 어린이집처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CCTV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 제대로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어르신들의 안전예방과 학대에 관련해서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름과 다니는 연령층만 다를 뿐, 어르신들이 계신 곳도 학대가 안 보이는 곳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병으로 인해서 또는 치매로 인해 자기표현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다 그런 병으로 인해서 어르신이 진짜 학대를 받고 있는데도 치매로 인해 오해다 라는 식으로 보호자들이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어르신들의 시설에도 CCTV설치를 모두 해서 안전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설치의무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입소노인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은 있으나, 요양시설(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해 계신 노인들은 거동만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입소노인과 종사자의 사생활과 자유 등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사전에 입소 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여 설치토록하고 있습니다.

보스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69
수유실 설치 확대

제안자 **이니사랑아둘맘**님

주요내용 관공서 및 주요기관에 필수적으로 수유실을 설치

제안내용 어린 아이와 엄마들이 집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적어도 관공서와 주요기관 등에는 필수로 수유실을 설치하게 해주세요. **구청의 수유실을 보셨나요?
식당 안에 매점 안에 구석진 곳에 자바라로 쳐진 곳에 다리조차 펼 수 없는 소파 하나 두고 온갖 짐들로 꽉 차서 기저귀는 갈 수 조차 없는 그런 곳이 수유실이랍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공간이 없어서 확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면 서울시가 관리한다는 광화문역의 해치 수유실은 회의실처럼 깔끔하게 만들어 놨네요.
수유부들끼리 아무리 친해도 자기 가슴 내놓고 저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수유하지 않습니다. 수유실을 만들더라도 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적어도 기저귀 가는 곳과 수유하는 곳의 공간은 떨어뜨려 놓고, 수유하는 공간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만들어져야지요.
엄마가 아닌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있으니 기저귀를 가는 공간은 아빠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아빠가 분유를 먹일 수 있도록 남자용 수유공간도 필요합니다. 그것까진 안된다면 수유부와 아이가 저처럼 급해서 화장실에서 수유하는 일은 없도록 수유실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제대로 된 수유실이 곳곳에 만들어지길 바래봅니다.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모유수유시설(수유 및 착유) 설치 및 관리기준 권고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이나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사업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및 직장 내 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인식전환 등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0

검정둘리님, 룰루맘님, meadow18님, 쑤쑤님, 바로미마미님, 로잔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70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제안자 **고촌피스톨**님

주요내용 검사, 시술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들에게 의료보험 적용 필요

제안내용 저는 36살에 1살 많은 와이프와 결혼을 한 지금은 41살의 가장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결혼 후 2년차가 되면서 저희 부부는 난임센타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습니다. 인공수정은 보통 100만원 정도하고 국가지원금 3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엔 시험관 시술을 권하더라구요..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시술을 합니다. 약 3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1백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공수정 2회 그리고 시험관 3회가 지원금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 안에서 해결이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임이라는 것과 끝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원이 끝난 시기부터 정말 문제입니다. 저희 부부는 임신준비를 하면서 와이프의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외벌이를 시작했습니다. 시술을 하면 일단 병원에서만 2~3백만원 정도가 우습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처방해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의료보험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약국에서 사먹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와이프는 인터넷 카페에서 먹다 남은 약을 거래해서 먹더군요.. 안타깝지만 뭐라 할 순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외벌이로 3백정도 벌어도 시술이라도 한번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사정인데 먹다 남은 약이 좀 싸다고 그걸 먹는 와이프를 보면 가슴이 아프네요..
난임센터를 한번 가면요.. 대기시간이 3시간은 기본입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아이 하나를 가지기위하여 지금도 끝없는 싸움을 하죠.. 시험관을 하며 억 단위의 빚을 지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출산문제다 낳아라 하면서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들은 왜 의료보험조차 적용을 못받고 돈에 허덕여야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시술을 하고 착상이 되었는지 피검사를 합니다. 난임으로

피검사를 하면 의료보험이 안됩니다. 근데 가서 그냥 피검사하러왔다고 하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올해를 끝으로 포기할까합니다.. 나이도 있고 돈도 없구요.. 하지만 저희 같은 난임부부들이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수 있게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난임 시술 및 검사 마취 등의 시술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17년 9월까지 수가 및 세부기준안을 마련한 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해 '17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님, 김명규님, 김영길님, 이재영님, 박혜진님, 김하균님, 천경미님, 최대위님, 3시15분 밀크티님, 나라를 위하여님, 엄마곰님, 개따맘되자님, 재롱이님, 만땅이님, 데자뷰님, gnw1982님, 간절히 바래봅니다님, 지나찡님, 토토맘님, 어질인님, 질러맨님, 가오님, ssongi님, 청계사랑님, 힘찬수민이엄마님, 바람칼님, 몽실이님, 방법님, wiseqhdud님, 상가님, 행복한 날님, young5998님, 구공삼님, 결혼앞둔신부님, 간절한바램님, 로이로아님, 스벅님, 크림이님, 흉쓰s님, 한가지소원님, 네잎크로버님, 나에게로와주렴님, kobing님, 놀라브르님, 온마크님, 행복숙이님, 강낭자님, 아가야꼭와주렴님, 행복그것님, 초코팡팡님, 마음이님, Boo82님, 헛된정책님, baby1004님, 아자아자화이팅님, 언제나힘내님, 꼭꼭붙어라님, 참깨들깨님, hepi3님, kabigon님, 다오니님, 단감님, 별이랑님, 활동남님, 사랑큐티님, 행복해지고싶다님, sand 님, 게이름탈출님, 충만님, 꼬꼬바램님, 곰냥이님, 하하둥이님, 아기만나고싶어요님, 앨리스윤님, 내꺼용님, 사람은 사랑합니다님, 최성묵님, 바람에 실려님, wlstnr nnab님, wwjdo0330님, 지우사랑님, 대박꼬맹이님, 개띠아가주세요님, 샘이님, 희망을주세요님, seebora님, 감자연두님, 소망사랑희망님, 해리언니님, 이뿌니님, 찬찬님, 체리토리벼리님, sun2님, ckdqun8님, 짱아님, 초콜릿상자님, 이코이지님, 창공78님, Miso님, 해피아이님, GINA KIM님, 소망해님, 나무100님, 문긍정님, 우짜짜짜짜님, 콤콤있님, 바부탱이님, 동이엄마76님, 미래의 엄마님, 잠이들면님, 상담사랑님, 핑핑님, 좋은달님, 엄마가되고싶어요님, horny0711님, 뭘해도되는남자님, 드디어엄마님, 찐장님, supia님, 오순도순님, 메이짱님, 가가니님, 난임부부님, 라떼마마님, 해피쏭님, 금요일님, backgroung님, 오뚜기꿈님, 자황고비님, 아리랑1님, 아랑전설님, taeungrim님, 좋은날이오겠지요님, 리디아님,

봉봉떵깡님, 밝은미래1님, 까꿍님, 강해님, 영일만복음님, 꼭다시만나자님, 이라님, 엄마되고싶어요님, 아름대운세상님, kimmy님, 무력쑥쑤기님, happygirl님, 굳세어라님, 신똘끼님, 또또엄마님, 껭스님, 쏘쏘야님, kes99님, 장안구보안관님, Luktpion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71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제안자 **인천시도 광역시답게**님

주요내용 유치원 방과 후 운영과정 내실화, 어린이 돌봄시설 확충 및 돌봄시간 확장 등 제도 개선

제안내용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맞벌이로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맞벌이 육아에 대한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면 돌봄시설 확충 및 돌봄시간 확장입니다. 우선 아침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내고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퇴근시간이 늦어지면 데리고 올 수도 없습니다. 학원으로 돌릴 형편이라도 되면 그나마 나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2교대로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늦은 시간에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확충해 2교대로 선생님을 두게 된다면 고용도 늘어날 수 있고 맞벌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세수 확장이 동반되어야 하겠지만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더 문제가 커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 기준 등교시간 8시반~하교시간 1시입니다. 방과 후 학교가 있지만 학교별 편차도 심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근무할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군데나 되겠습니까?

부처추진계획 교육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 원칙, 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 운영 적극 권장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돌봄교실 역시 저소득층·맞벌이·취업 중인 한부모 가정 자녀 등에게 연중 아침부터 저녁까지(07:00~22:00) 추가 돌봄서비스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여건 및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한 돌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초등완전돌봄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happymisy님, 제이님, 이희정님, 이단직님, 김효선님, 김드림님, 신재철님, 가은마밍님, 푸가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72
로또 온라인 판매 금지

제안자 **복권판매인**님

주요내용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인 오프라인 판매점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로또 온라인 판매 재검토

제안내용 로또를 판매한지 14년째인 판매점주 입장에서 로또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인당 5000원의 구매한도를 정해서 전체 매출의 5%를 넘지 않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엔 지켜질지 몰라도 전체 매출의 5%만 팔아도 매주 1등이 7~8명이 나오는 상황에선 격주로 인터넷 판매로 1등이 나오게됩니다.
그러면 결국 인터넷 판매가 대세가 되고 온라인매출이 늘어나 오프라인 판매점은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2004년 4,500곳의 판매점자격을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족 세대주에게 배정하였고, 2015년부터 3년동안 새로 늘어난 2000여개의 판매점 역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세대주들에게 그 자격을 준것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판매야 말로 지금까지 취지와 정반대로 사회취약계층을 거리로 내 는 정책이며, 영세상인의 피를 빨아 대기업의 배를 채우는 정책입니다. 몇몇 로또명당이라고 불리는 판매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판매점은 한달에 150만원 수익도 힘든 현실에서 온라인판매는 절대 안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인 본권판매점들의 생계를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과제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부처추진계획 기획재정부
우선 로또 온라인 판매는 판매비중을 5.83% 미만으로 제한할 시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의 매출비중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연구용역 결과와 '17년 4월 복권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우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실명인증을 거친 회원만 1회 5천원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둘째, 온라인 판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세·취약 판매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명당님, 팬더님, 듬직이님, 살기좋은 세상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73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내실화

제안자 **전희복**님

주요내용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제안내용 소상공인 활성화 관련 기관별 중복정책을 일원화해 주시고, 특히 카드수수료를 꼭 인하해 주세요.

국정과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부처추진계획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의 확대를 위해 '17년 8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시행을 추진하고 '19년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각종 중복정책을 일원화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제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원아빠님, Momo1013님, 만근님, 유토피아7님, 몬스터님, eunmi mun님, terry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74
메이커(1인 제조업) 교육 활성화 추진

제안자 **골프로재미 / 뚜벅이메이커**님

주요내용 청년들의 창업도전 분위기 조성이 필요, 1인 제조기업 창출기반 마련, 제4차 산업혁명 대비해 메이커교육촉진법 제정

제안내용

골프로재미 젊은 인재들이 직접 창업에 도전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우리나라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음.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분위기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메이커스 문화가 활발해야 할 것임. 국가가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메이커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 것임

뚜벅이메이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각급 학교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메이커교육 전담 교사 양성 등을 제도화시키는 메이커교육 촉진법 제정 제안.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적인 교육에는 미흡하기에 문제해결 기반 학습으로 3D 프린터, 로봇, SW 코딩교육 등이 융합된 메이커교육이 학교현장이 정착되는 것이 중요. 메이커교육촉진법을 새롭게 제정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교육을 학교현장에 확산시키면 창의적인 인재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국정과제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제고(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 추진)

부처추진계획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1인 제조기업 창출 기반 메이커 운동 확산과 인재양성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7년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을 수립하고 '18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2만개 보급·확산하겠습니다.

해원아빠님, Momo1013님, 만근님, 유토피아7님, 몬스터님, eunmi mun님, terry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75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학교 교육과정 변화

제안자 **달이떠오른다**님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현행 국·영·수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과학·기술·컴퓨터 중심으로 개편

제안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학교 교육과정 과목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과학, 기술, 컴퓨터 부분의 수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직업이 인공지능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코딩 교육 및 발명 교육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해와 창의성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무 상관없는 기술가정의 과목 통합을 다시 예전처럼 기술과 가정을 따로 분리하여 기술시간에 학생들의 미래의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고 컴퓨터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 명 선도 기반 구축

부처추진계획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내 SW교육은 초등학교는 17시간('19년~), 중학교는 34시간 이상('18년~) 실시될 예정(고등학교는 일반선택)입니다.

또한, 우수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SW교육 선도학교 선정·지원 확대 및 선도교육청(대구, 전남)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SW교육 담당교사(초등 5·6학년 담임, 중학교 '정보'교사)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학교관리자(교장) 연수를 통한 시수확대를 독려하겠습니다.

SW를 기본소양으로 체득하도록 SW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전학년 필수화'하고 교육시간 대폭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님, 전기정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76

밭 식량작물 생산확대 등을 통한 곡물자급률 제고

제안자 **늘푸른당**님

주요내용 청년 농업인 육성, 과학영농 지원 및 전국 농산물 총량 관리 시스템 운영 등 곡물 자급률을 제고

제안내용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가뭄과 국제사회의 저가 곡물의 수입으로 우리 농업이 빈사에 이를 정도로 어렵고, 곡물 자급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곡물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과 과학 영농의 지원 및 전국의 농산물 총량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 시스템으로 통한 가격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부처추진계획 농림수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4조)에 따라 곡물 등의 자급률 목표치를 5년 마다 재설정하고 자급률 제고 대책을 마련·추진 중에 있고, 주산지 중심의 밭 농업 조직화 및 가뭄 대책과 연계한 밭 기반 정비사업('94년~)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통해 미래농업 전문 인력 양성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학 영농지원을 위해 농림식품 R&D 예산을 지속 확대('17. 9,489억원)하여 농정현안과 농업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쌀 소재 개발 등 주요 중점 분야에 투자 지원('17. 122억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농업관측, 생산안정제 시행, 국내 농산물 수매비축·방출 등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농산물 수급종합정보시스템 개선('17. 7월)하여 관측정보, 도소매가격, 생산·출하·재고량, 기상자료, 생육정보 등 각

	기관 등에 산재된 수급정보를 통합하여 수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쌀 생산조정제 지원을 위한 품종개발, 재배기술 및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21년까지 사료용 벼 및 논 재배 적합 밭작물 품종개발과 가루 대체 쌀가루 전용 품종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이루고 표준재배 기술 개발·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 논-밭 전환 공동 경영체 육성 등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나미사부로님, Robbine님, Sjpak52님, 소이화답님, happig373님, 남스네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77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제안자 **ipowerpac**님

주요내용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 마블링 제도 폐지 및 수입사료 엄격 규제

제안내용 1.5년~2년 사육하여 식탁에 올라야 하는 소고기는 미국의 특수사료에 의한 1년 미만으로 도축(소는 초식 동물이지만 소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여 마블링화 및 조기 성장)하는 제도 개선 필요.
구제역, AI 병에 취약한 소, 돼지, 닭은 조밀하게 키워 운동부족 즉, 면역력 약화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립의 재검토 필요.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부처추진계획 농림수산식품부
쇠고기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마블링 기준을 하향하고 마블링 이외의 등급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올해 현장 시험적용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한 후 '18년 「축산법 시행규칙」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8

발효식품 퓨전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제안자 **어르신**님

주요내용 발효식품 퓨전화로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제안내용 우리나라 고유의 발효식품(장류, 장아찌 등)을 퓨전화하여 세계시장에 진출을 위한 일자리에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발효식품이 세계인의 식단에 오를 수 있는 자부심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권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위상을 중시하는 의미에서 도와 시,군이 주도하여 사회적기업, 소상공인과 공공기관이 협의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부처추진계획 농림수산식품부

전통주와 전통식품의 국가적 차원의 전통식품 홍보, 전통식품기업 제품개발, 박람회 참가지원 등 소비저변 확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도 단위로 플랫폼 구성 및 시범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지역별 퓨전 전통식품 개발 및 실증·사용화 지원 예산을 확보해 '18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선님, 향적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79
쌀 수급 안정

제안자 **ipowerpac**님

주요내용 장기 보관 정부양곡의 공업용 전분 공급

제안내용 장기 보관으로 예산낭비 등을 초래하는 정부양곡을 공업용 전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주세요.

국정과제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부처추진계획 농림수산식품부
'17년 하반기 정부양곡의 판매용도 관련규정인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여 용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 전분 상업화 관련 업계·협회 등의 의견수렴과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
택배 등 각종 배달료 현실화

제안자 **토토맘**님

주요내용 택배기사나 배달 청소년 등에 물건 값 이외에 별도의 배달료 지불을 제도화해 경제민주화 실현

제안내용 미국에 살아보았는데 배달료는 늘 물건이나 음식값과 별도로 지불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의 서비스료를 정당하게 내는 것에 대해 인색함. 그러니 택배기사, 배달오토바이 모는 청소년도 100원을 위해 밥도 굶고 아무리 일해도 생활이 어려운 것임.
물건 값 외에 별도의 배달료를 지불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국민 의식개선을 유도했으면 함

국정과제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화물운송 종사자 보호강화)

부처추진계획 국토교통부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화물운임제 개선에 대해 화물시장 내 이해관계 주체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 연구용역('17.6월~'18.2월)을 통해 '18년 12월까지 수용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별이는아가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81
효율적 물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안자 **조기영**님

주요내용 농업 진흥·환경 보호를 위한 효율적 물 관리

제안내용 물 절약 설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물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농업을 진흥하고 환경을 보호해 주기 바람. 또한 현재 부처별·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 체계를 통합·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개편해 주기를 바람.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부처추진계획

농림수산식품부	'17년 하반기 정부양곡의 판매용도 관련규정인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여 용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 전분 상업화 관련 업계·협회 등의 의견수렴과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 수요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님, 삼뚱이님, 한국빗물협회, 정운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82
스마트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안자 **위드케이**님

주요내용 복도형 스마트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미세먼지 저감

제안내용 역할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안함.

첫째, 스타트기업은 공기정화능력과 전통온실의 특징을 반영하여 학교 교실 복도 코너를 이용하여 복도형 스마트팜을 일자리플랫폼으로 설치.

둘째, 학생들은 복도형 스마트팜에 연구하고자 하는 작물과 재배환경을 셋팅하고 작물재배하고 S/W를 개발하여 접목.

셋째, 주부들은 복도형 스마트팜에 방문하여 학생들이 키운 수확물을 관리하고 S/W를 실증연구, 공유, 판매하면서 학습.

넷째, 노인들은 복도형 스마트팜을 통해 나오는 과정물을 보면서 즐기고 치유하면서 경험담을 알려줌.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소통문화형성, 미세먼지를 제거, 신재생에너지활용 등 다양한 효과 기대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부처추진계획 농촌진흥청

식물을 활용한 벽면녹화 식물-공기청정기 '바이오 월(Bio wall)' 개발 및 미세먼지에 우수한 실내식물 선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년까지 '바이오 월'을 학교 복도 현장에 적용하고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며 IoT 기반의 식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식물 관리 및 원예 교육이 가능한 원예치료사 또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제안자 **Ziin / 손근택**님

주요내용 부양의무자 가준 등을 개선하여 부당하게 기초생활 보장복지에서 누락되는 서민이 없길 바람

제안내용

Ziin 요즘 동네 마다 폐휴지를 줍는 어른들이 많아졌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들을 보면서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주도록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5호는 소위 "부양의무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노인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양의무자 조항이 빈곤층의 생계보장 책임을 직계가족에게 떠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생스러운 것은 직계가족인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주든 안주든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30%를 간주 부양비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3명이 있는 노인은 부양비를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비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손근택 연금보험수령자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삭감 후 지급하는 제도 개선과 도시지하층 거주자 복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지원을 강화해 주세요

국정과제 42.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혁신)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상자별·급여별 단계적 폐지'가 주요 공약에 포함(약속 8

생애맞춤형 소득보장체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약 이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마련 중에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 순위, 소요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는 기초연금 상향 지급과 함께 주요 10대 공약 중의 하나로, 현재 이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기초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및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4
학부모가 보육기관을 평가하는 방안 마련

제안자 **신지연**님

주요내용 학부모가 보육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제안내용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육기관 평가를 학부모 또는 어린이가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국정과제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육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 교육지원, 사후관리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85

초·중·고 교육에 헌법교육 지원 계획

제안자 **내코가석잔데나라걱정**님

주요내용 초중고교 정규교과과정에서 헌법교육을 강화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민주의식, 권리의식 등 제고

제안내용 초중고 교육에 우리 헌법을 실어 국민이 국민으로서 누리고 행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교육을 필수교육 단계인 초중고 교육에 편성하여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으로서 성인이 되었을 때 겪게 되고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세법과 생활법률에 대해서도 정규과정에 편성하여 교육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국민 법의식이 성숙하고 일부 기득권층만 법을 알고 법을 악용하는 일이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평생교육에도 헌법을 편성하여 국가에서 교육하도록 해주세요. 헌법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하고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과제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국조실)

부처추진계획 법무부
검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및 생활사례 중심의 '법교육 출장강연'을 '0 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초·중·고교에 헌법교육 포함 등 다양한 법교육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달콤이아빠님, 민주공화국님, 아티스트9712님, 친일수구적폐청산님, 현우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86
생계형 장애인 트럭 환경개선부담금

제안자 **전어**님

주요내용

장애인의 생업활동용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제안내용

1톤 트럭으로 장사하는 장애인입니다. 생계형으로 장사를 하지만 장사가 안됩니다 그런데도 매번 환경개선부담금이 상반기, 하반기에 80.000원씩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기름값 자동차 유지비를 빼면 한 달에 버는 돈이 백만이 못됩니다.

장애인생계형트럭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좀 감면해 주세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처추진계획

환경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대상)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타 세법의 유사 감면조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17년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87
자궁외 임신 진료비용 지원

제안자 **nam**님

주요내용 자궁외임신과 관련된 초음파비용 및 진료비용은 임신부 혜택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 요청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 자궁외 임신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회복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이번에 자궁외 임신을 겪으면서 다른 이들도 겪었을 고충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궁외 임신은 임신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궁외 임신으로 판단되기까지의 초음파비용 및 진료 비용 등이 임산부가 아닌 부인과 진료로 들어가게 되어 비급여로 본인부담이 됩니다. (1회당 약 4-5만원)
자궁외 임신으로 진단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급해질 수 있는 응급 수술임에도 보험 상으로는 자궁외임신은 임신관련 병명코드로 분리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모두. 실제 진료를 받을때는 임신이 아니라 혜택을 못받고 수술 후에는 보험회사에서 임신으로 분류돼 혜택을 못받으니 아이러니 합니다. (설령, 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훗날 정상 임신되어 태아 보험 가입시 불이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직장여성의 경우, 유산-보호휴가로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연차휴가 소진으로 수술입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안 순간 행복감도 잠시 정상임신이 아닌 경우, 고스란히 이 모든 게 환자 개인의 부담으로 이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궁외 임신은 전체임신의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일부 지원 제도가 존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상 임신 이외 이렇게 소외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었으면 합니다.

부처추진계획 법무부
산전진찰 초음파는 모든 임신부 대상으로 2016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이며, 2018년부터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외 임신 및 부인과 초음파(예: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등에 관하여 건강보험 적용 예정입니다.

88
아동생활시설 중앙 환원

제안자 **아동사랑나라**님

주요내용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소외아동에 대한 지원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외아동 지원 사업에 대한 중앙환원 요청과 소외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앙 차원의 지원 강화

제안내용

소외아동 지원 관련, 지자체 업무로 편성됨에 따라
1.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간 편차가 심하고
2. 지자체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그 책임을 시설장에게 책임을 지우고
3. 종사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직원증원, 휴가, 수당, 임산부 보육업무 제한 등)
4. 아이들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고
5. 아이들의 자립을 위한 예산지원이 없다.
6. 지자체의 입장을 반영해 아동입소가 지역에 편중된다.

이에 따라 소외된 아동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 태어나든 차별없이 존중받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소외아동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환원은 국가의 재정정책 방향, 국가·지자체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입니다.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간 편차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
장애인 전동휠체어 경광등 부착 지원

제안자 **JMIDAS**님

주요내용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는 전동휠체어를 인지하기 위한 경광등 설치 요구

제안내용

늦은 밤이나 새벽에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인도가 아닌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장애인 전동휠체어에 아무런 점등이 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거나 가로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급정거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는 일부 이면도로 구간에서는 더더욱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곤 합니다. 일부 골목길이나 주택 밀집지역 주변 도로는 인도가 따로 없고, 또 밤에는 물체의 식별이 잘 안돼 휠체어 장애인들의 사고 위험이 아주 높은 상태이며,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는 앉은 키 높이로 대략 1m 전후인데 주차된 차량 틈 사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 인지가 어렵고, 야간 주행 시에는 일부 휠체어 후면에 반사판이 있으나, 야광판과 야광조끼는 가로등이나 차량의 라이트가 있어야 보이는 것이므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없고, 전면이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지가 어려운 상태여서 장애인 본인은 물론, 운전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인지가 가능하도록 휠체어 후면에 높이 0.5~1.0m 가량의 수직봉을 설치하고 그 위에 경광등처럼 깜빡이거나 회전하는 LED를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여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야간운행 및 시안성 확보 등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의료기기 인증은 식약처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전동휠체어 경광등 설치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인증기준에 포함가능한지 여부 등을 식약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입니다.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간 편차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
재활 지원 정책 강화

제안자 **당당장군**님

주요내용

현재 재활시간이 짧고 재활시설이 부족하여 재활환자들이 병원을 자주 옮겨 다니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 해결

제안내용

할머님께서 뇌출혈과 뇌경색 등 그 외에 심장,신장 등의 여러 질환이 있으신데요, 재활치료 때문에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다니는 병원 난민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뇌졸증이나 뇌신경등의 병명으로 인해서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은 2년 이내에는 재활치료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 판단되어 재활시간을 많이 받을 수 있으나 2년이 경과되면 병원입원도 안되는 경우도 많고, 입원은 가능해도 재활시간이 예를 들어 1년 이내는 4시간이라고 한다면, 2년 이내는 2시간, 2년 이상이 되면 30분 정도로 줄어들어 병원에서는 돈이 되는 환자부터 받다보니 뇌 관련 질환이 발생이 언제되었냐 부터 묻고 환자를 받느냐 안받느냐를 결정합니다.
재활시설 수준도 편차가 커서 재활이 잘되는 곳은 대기자들이 1년씩 기다리는 상황도 많고, 입원해도 2-3개월이면 퇴원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퇴원 권고를 합니다. 처음 온 입원환자가 3개월 이상 있는 환자보다 병원비 지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너무 환자를 오래 있게 하면 병원에 70-80%로 병원비를 적게 준다고 합니다.

1. 재활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 재정비 해주세요. 정말 오래 받아야 하는 환자들 유지를 위해서 치료가 계속 필요한 환자들을 고려해 주셔서 재활시간이 적다고 병원에서 홀대 받고 입원거절이나 퇴원권고를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2. 재활이나 장기요양으로 인해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병원난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재활이 가능한 병원들이 많이 확충되어서 의료진의 수가 적절히 배치되고, 대학병원 급의 병실 수처럼 시설이 큰 재활병원들이 건립되어서 지금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주세요.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회복기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치료를 통한 장애 최소화 및 조기 사회복귀 유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거친 후에 본 사업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망거사님, sodong님, 동자마카미니짱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91
치매환자도 산정 특례 적용

제안자 **라일락향기good**님

주요내용 치매환자도 치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산정특례제도 적용

제안내용 치매환자도 산정특례제도를 적용해주세요. 저희 남편은 알츠하이머 환자입니다. 진단 받은 지 3년 되었으며 현재 나이 56세입니다. 딸아이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한창 돈을 벌어야 할 나이에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앓다보니 생계가 정말 막막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므로 향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소 시 비용이 정말 부담이 됩니다.

현재 산정특례 적용되는 질병들(예를 들어 파킨슨, 암,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소 시 산정특례적용을 받아 해당질병과 해당질병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부담률이 할인이 된다합니다. 그러나 치매환자는 산정특례제도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할인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오니 잘 살펴보시고 꼭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조기진단·치료를 통한 중증화 방지를 위해 치매 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경인지검사 등 고가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타 질환과의 형평성(질환의 중증도, 의료비 부담수준 등)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중증치매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92
건선환자 보험적용

제안자 **웅이맘**님

주요내용 보험적용이 안 되는 건선치료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안내용 생각보다 숨어 지내는 건선환자가 많습니다. 전신으로 3번 왔고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와 있지만 보험적용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건선에 대한 관심과 보험적용 부탁드립니다.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현재 피부레이저 광선치료,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등은 건강 보험 적용 중이며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보통건선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신의료 기술 등은 항목별로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사안입니다.

93
학교총량제 폐지

제안자 **아연파파**님

주요내용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 폐기 요구

제안내용

교육부는 2015년 5월부터 이른바 “학교 총량제”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를 축약하여 설명한다면 신도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려면 먼저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하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학교 총량제의 실시로 인하여 과밀학급발생 , 원거리 통학,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민들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아이들의 학교 문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여 교육문제를 “돈”문제로 인식하고 각 지역에 특수성에 눈을 감고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기 광주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은 광주 **동 지역의 과밀 및 통학 안전을 이유로 **1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총량제”를 이유로 탈락하였습니다. 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육청 및 도교육청의 의견을 교육부는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묵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아이는 집에서 1km 떨어진 ㅇㅇ초등학교로 입학을 하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와 시속 80km 이상의 덤프트럭과 화물차 운행이 빈번한 3번 국도를 건너 어른도 올라가다 지치는 경사로를 올라서 왕복 1시간의 거리를 이동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초등학교 입학은 곧 아이들에 대한 학대와 다름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각 지자체 의회와 교육감들은 일제히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를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31조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학교 총량제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추진계획 교육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문기관(KEDI) 및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추진('17 하반기)예정입니다.

구름정거장님, 바이엘사님, 수림하린태양대디님, 소은재림님, 부들유님, 나야나1님, 히트맨님, 냐하하님, 단대단대님, 러빙윤님, 학교없는곳엔아이없다님, 주니맘님, 선희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94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경계성지능장애아동 교육지원 방안

제안자 **블루마린**님

주요내용 특수학교에 가기 애매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경계성지능 장애아동에 대해서 교육지원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지적장애3급 아동의 엄마입니다 IQ가 60~70사이 정도, 겉보기엔 멀쩡합니다 6학년이지만 하는 행동은 1~2학년 수준? 그래서 도움반이 있는 학교에 진학했어요. 교과 과정 따라가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특수학교 진학도 애매하고(특수학교는 워낙 중증 아이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경계에 있는 아이들은 케어가 거의 안된다고 해요) 거리 또한 멉니다.
저희 애처럼 특수학교 가기도 일반학교 가기도 애매한 경계선상에 놓인 아이들이 맘 놓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생겼으면 했지만 현실적으론 무리일 것 같구요. 그래서 각 학교에 있는 도움반 기능을 좀 강화했으면 합니다. 현재 장애아동 5명 정도에 특수교사 1명입니다. 물론 도우미 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말 그대로 도우미세요. 선생님 혼자서 행정적 업무에, 교육에, 너무 힘드세요. 출장도 자주 가셔서 자리 비우실 때도 많구요.
이번에 공적일자리 창출에 교원도 포함된 걸로 압니다. 특수교사 채용과 처우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애아동 부모들은 사설치료 기관에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50~100만원 이상씩 나갑니다. 학교와 정부차원에서 치료에 도움되는 활동이 있다면 저는 공적기관인 학교에 비용을 더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에 저희 아이같은 경계성 아동이 참가할 만한 활동은 없어요. 훌륭한 치료 선생님을 모셔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장애부모들 부담도 약간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처추진계획 교육부
특수교사 확대 및 통합교육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를 이번 정부 국정과제(51-2)로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22년까지 특수교사 연차적 증원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90% 이상 수준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도별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치료지원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랑해아들님, 탱탱님, narani78님, 써니아뵤님, 줌마님, 한글사랑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95
초등학교부터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제안자 **봄길0509**님

주요내용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과정 필수과정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

제안내용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국민의 의식과 가치의 방향을 미래사회로 가기위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자녀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시켜야 함.

유럽의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는 어려서부터 다름을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자란다는 점에서 이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회의 주류가 되었을 때, 그들이 경쟁과 반목과 대립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여 공생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생존수업처럼 초등학교부터 의무적으로 정의, 배려, 다름, 존중, 공공재, 공동체, 절차적 민주주의, 합리성, 부당함과 불합리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절차적 방법 등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사례를 들어가며 가르치고 이를 자치회의를 통해 몸소 실천하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의무적인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다름을 존중받아봐야 존중도 할 수 있으며 이런 가치관이 체득되었을 때 아이들이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비교하며 서열을 나누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봄. 다름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절차성을 배우는 것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며 민주시민이 되었을 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음. 교육과정 필수과정으로 의무교육으로 포함되길 바람

부처추진계획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협업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을 활용 지원 중입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운영 시 민주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

등 개발·보급하여,사회, 도덕 등 교과 및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 시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폭넓게 학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일건님, 보람있게살고싶다님, 김봉구님, mull96님, 폭풍님, 아침님, 캔디위님, 민주시민교육님, cicipink11님, 향맑은옥돌님, 추야님, 장민호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96
소득분위경계값 안정적 설정

제안자 **만세만세만만세에**님

주요내용 국가장학금 수급의 안정성 보장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득분위경계값의 현실적인 조정 필요

제안내용 국가장학재단에서는 소득분위경계값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정하고 그 소득분위에 맞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매 학기마다 달라지는 경계값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번 1학기는 4분위였다가 2학기는 5분위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소득분위 경계값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2학기때는 약 590만원선까지 4분위였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혼란을 줄이겠다며 1년 단위로 경계값을 고정하겠다면서 오히려 소득분위를 낮췄습니다.
적어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소득분위 경계값이라면 물가를 반영해서 증가하지 못할망정 낮아지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작년에 1000원짜리 식품을 카드할인으로 500원이면 살수 있던 식품이 갑자기 카드할인이 월별로 상이하니까 할인 정도를 고정으로 하겠다면서 50%하던 할인을 30%으로 줄어버리면 결국에는 대학교 소수의 이사진들만 배부르고 저희들은 힘듭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라 제 꿈을 찾을 기회도 꿈을 찾기 위한 다른 외부활동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디 제가 학교에서 제 미래를 찾고 돈걱정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게 소득분위경계값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주세요

부처추진계획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객관적인 지표인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17년 1학기부터 소득분위의 경계값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하였습니다.
'18년 소득분위 경계값은 보건복지부의 '18년 기준중위소득 발표 후 설정 및 공표 예정입니다.
또한 새정부의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국가 지원예산 규모 확대를 통한 실질적 반값등록금 추진으로 정책 수혜자 체감도 제고하고, 저소득층은 현재 수준 이상 지원하고, 8분위 이하 학생은 추가 지원을 통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달성 추진 계획입니다.

97

특수교사의 연차적 증원을 통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제안자 **특수 화이팅**님

주요내용 특수교사 증원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증대

제안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 4명 당 1명이 배치되고,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가 유치원은 4명, 초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급은 이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장애아동은 다른 일반아동과는 달리 개별 학생의 요구에 초점을 둔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급에 6명이 있으면 서로 다른 6개의 교육계획을 짜서 6개의 서로다른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도 매 수업시간마다요.

예를 들어 a에게 필요한 것이 의사사통 능력인데, b에게 필요한 것은 자조기술 확립이고, c에게 우선되는 것이 사회성 향상이라면 교사는 매 수업시간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말 체계적인 교수설계와 학습자료 준비가 되어야 하구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렵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학급이 7~8명으로 과원 상태인데 어떻게 학생 한명 한명에게 개별화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겠습니까?

교사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학급에 아이들만 둔 채 자리를 비워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화장실도 맘 놓고 가지 못해 방광염에 걸리는 일도 대다수 입니다. 급식시간에는 전쟁입니다. 한명은 음식을 가위로 잘게 잘라 떠먹이고, 한명은 제 시간에 밥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주의시켜야 하며, 한명은 자리 이탈하지 않도록 옆에 달라붙어 밥을 먹여야 합니다.

현재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해주세요.

부처추진계획 교육부

‘22년까지 특수교사 5,300명의 연차적 증원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9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교육 순회교사의 연차적 증원으로 통합교육 지원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특수교사 증원은 교육부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간 협의 및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특수교사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기간제특수교사님, 어등산바람님, 참세상열기님, 윤빛돌이님, 어떤이님, dpsk9696님, 꿈꾸는희망~님, eplower82님, kipini00님, 큠님, JJJEY님, 능력과자격님, 무릎냐옹님, 더블주님, 화담님, hoho0743님, 행복가득한나라님, 뽀이뽀이님, guswn0428님, 파도타는촤촤님, 소수가 사라진 세상님, 바르다좋다님, 망고하다님, ㅎㅅㅎ님, 쨍이님, ckor4124님, 박지희님, 2018특수교사님, 기운내서님, 열정은 패션님, 기준이뭘까요?님 아사라모님, 김규연님, 특별한교사님, 연경님, 아메리카노 림님, 모찌모찌님, 특수교사짱님, 반짝반짝님, 김꿀단지님, gesell333님, 김현처리님, 탐탐님, 해바라기로사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98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을 위한 소형주택 제안

제안자 **깻잎치킨**님

주요내용 공공기관 청사 여유부지 및 증축을 통해 대학생 및 근로 청소년에게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제안내용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들이 숙소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복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땅이 필요하고 많은 건축비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대학생은 기숙사비를 벌기위해 밤늦게 까지 알바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학업도 게을리 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의 빈 공공기관의 건물과 공공기관 건물을 증축하여 건물 당 3~4곳 정도의 원,투룸을 조성하여 대학생 및 근로 청소년들에게 소액으로 임대를 해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건축 경기가 활성화 되는 효과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생의 알바 시간이 조정되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하거나 또한 근로 청소년의 경우 저축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꿈을 심어 줄 수 있어 좋은 정책이라 사료되어 제안합니다.

부처추진계획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17.7.25)'을 통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예산은 공공임대주택 2만호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부기관, 지자체 협의·공모 등을 통해 '17년부터 1차로 1만호 공급에 착수하고, 이후 성과확산을 통해 추가 1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99

층간소음 건설기준 강화를 통한 생활불편 해소

제안자 **밀**님

주요내용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분쟁이 범죄화 되기까지 하는 현실에서 층간 슬라브 두께 300mm로 건설기준 강화로 생활불편 해소

제안내용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분쟁이 범죄화 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210mm로 되어있는 층간 슬라브 두께를 300mm로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300mm 기준은 아파트 뿐 아니라 신축되는 다가구·다세대 다중주택·단독주택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층간 슬라브 두께 300mm로 강화해도 세대 당 공사비는 높게 잡아도 몇백만원인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장수명 주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층간 슬라브 두께를 300밀리미터로 강화하여 품질좋고 편안한 주택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범죄들이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부처추진계획

국토교통부

'14.5월에 기준을 강화한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차음성능을 실측하고, 이를 토대로 기준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차단기술을 개발·실증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0
동결진공건조 식품을 학교급식으로 제공

제안자 **sydney2701**님

주요내용

학교급식 과일후식의무화가 현실화되면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으로 생과·건과와 더불어 동결건조 식품도 포함 희망

제안내용

<동결진공건조 식품을 학교급식으로> **대형마트 PB상품 중 동결건조 과일(****해)을 눈여겨 봤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발의한 학교급식 과일후식의무화가 현실화되면 학교급식으로 생과, 건과에서 나아가 동결건조 식품도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부처추진계획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학교급식법(과일후식의무화)은 교육부, 학교급식 기본계획(학교급식에 동결건조 식품 포함)은 각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급식법이 개정되어 과일 후식이 의무화되어도 그 안에 동결건조 과일을 포함시키는 것은 개별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개정 추진하여 건강한 식생활 교육 차원에서 과일을 포함한 학교 간식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
유산 검사 의료비 지원

제안자 **축복만땅**님

주요내용

3번째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유산검사 지원을 2번째부터 적용하도록 확대, 확실한 유산 진료비 지원 정책 마련

제안내용

저출산 시대이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난임이나 반복유산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산시 습관성유산 검사비용이 140만원 보험처리 전혀 안되구요. 그럼에도 반복유산이 무서워 검사를 받지만 추후 임신 시에 들어가는 병원비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3번째 유산부터 검사 시 보험이 적용된다는데 2번 유산하고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지 몸도 마음도 다치면서 누가 3번 유산까지 버틸까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산 후 다니던 직장도 잃고 남편은 비정규직 연구원이지만 그나마 계약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아이를 원치 않은 사람을 위해 저출산 정책을 펴기에 앞서,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희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하반기부터 유산 시 진료비 지원해준다는 기사를 봤지만 그것이 수술비 지원인건지 앞으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검사비 지원인건지 확실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현재 3번째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유산검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확대적용이 필요한 유산 관련 검사가 확인될 경우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대상을 현행 '임신중인 자'에서 '유산, 출산한 자'까지 확대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입니다.

102
CCTV 등 비무장지대 첨단화

제안자 **돈먹는송아지**님

주요내용 CCTV 설치 등 비무장 지대를 완전히 첨단화하고, 군인들도 첨단화 시키는 작업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 필요

제안내용 비무장지대에 왜 군인이 안으로 들어갈까. 전에 지뢰 폭발로 병사가 다쳤습니다. 비무장 지대를 완전히 첨단화 시키고 군인도 첨단화 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비무장 지대에 적외선 드론 감시 조종사를 키우고 대기업, 과학단체하고 연계해서 감시로봇을 비무장지대에 배치해야 합니다.
굳이 추위, 더위에 벌벌 떨면서 감시할 필요 없이 실내에서 cctv, 로봇, 드론병을 띠워서 감시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비무장지대 서로 갈려고 지원 할 것입니다. 군과 무기를 시대에 맞게 vr,ar, 게임하고 접목을 시키면 지원자들 넘쳐 날 것입니다. 비무장 지대에서 첨단 무기를 실험할 수 있어 과학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선진국은 군을 첨단화 시키는 데 우리나라 국방장성들은 아직도 70~80년대 사고 방식에 머물려 있는 듯 아직도 병사 숫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독일에서 걸어다니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비무장 지대가 있어 실험장소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것을 과학기술에 잘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경제, 내수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요.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 명 선도 기반 구축

부처추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군경계 근무를 지능화하기 위한 '지능형 경계시스템'을 개발 중(~`21년)이며, 향후 군 적용에 대한

실증사업을 거쳐, 해안선· DMZ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22~23년)입니다. 실전 적용 이후에는 위험 지역에 대한 경계근무를 '지능형 경계시스템'이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군 생활과 국방력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103
병사들의 개인장비 개선 방안

제안자 **SDT707**님

주요내용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헬멧, 방탄복 등 개인장비류 개선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군사에 관심이 매우 많은 학생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2017년 기준 11위로 분단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자주포K9, 세계 3위권 내외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등 우리나라는 다양한 첨단 무기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11위에 걸맞지 않게 보병의 개인장비류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아직도 나일론 구형 방탄헬멧을 쓰는 부대가 많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사는데 가끔씩 훈련하는 군인들을 보면 나일론 구형 방탄헬멧을 씁니다. 심지어는 방탄복도 없는 경우도 많고 K2소총에 아무런 부가장착장비도 없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도 좋지만 보병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적으로 KHB2000신형 방탄헬멧, 다목적 방탄복, K2C1 차기소총과 PVS11K 조준경, 수직그립, 전술장갑 등을 2018년까지 전군에 보급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추진계획 국방부
신형 방탄복은 '20년까지, 신형 방탄헬멧은 '24년까지 정수만큼 확보하기 위해 사업이 지속 진행 중이며 현재 GP·GOP 사단 전투부대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신형방탄복과 방탄헬멧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18년까지 신형 방탄복과 신형 방탄헬멧을 전군에 보급하는 것은 재원의 제약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연간 생산능력 한계로 인해 제한사항이 있음을 양해드립니다. 국방부는 신형 장구류 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증액 반영하고, 해당 품목을 장기계속계약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해 연도별 조달물량을 확대하여 목표연도까지는 정수대비 100% 확보할 예정입니다.

104
해외실종자 수사를 위한 원스톱 프로세스 확립

제안자 **솔바람이솔솔**님

주요내용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될 경우 공관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원스톱 프로세스를 확립

제안내용 우리국민의 해외출국이 보편화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위급상황 및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경우 현재의 해외영사관의 콜센터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실종된 경우 현지경찰의 수사협조를 얻는 것이 힘들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온전히 실종자수색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기도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실종이 한 해 50명에 달하지만 현재 영사관의 이러한 사건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나 현지경찰과의 수사협조 및 공조에 관한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 실종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지난 5월 22일 제 친구가 라오스 유명관광지에 낮에 방문했다 그 뒤로 실종되었지만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였고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지경찰은 돈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과 영사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경찰파견 등을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누구나 이런 범죄와 사건에 휘말렸을 때 경찰 및 영사관으로 신고가 될 경우 원스톱으로 수사/수색/수사 공조가 이루어져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외교공관이 있는 곳에는 모두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안팎으로 국민이 보호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처추진계획 외교부

'18년도에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립하고 사건사고 전담 영사를 증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하여 협의 중입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5
병원 진료정보 교류 추진

제안자 **바람의아들 / 하늘에서 정의가**님

주요내용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국민의료 데이터베이스화 신속 추진

제안내용

바람의아들 잇몸질환으로 동네 A치과를 방문했습니다 XRAY촬영후 치주염으로 3개 발치를 권고받고 복용약(고혈압) 확인을 위해 다니던 내과의사의 의견서가 필요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대학병원 방문, XRAY 재촬영 다시 내과 방문. 그리고 보철을 위해 B치과에서 또 XRAY 촬영...
사실 이런 치료 과정 중 치료 자료가 데이타화 되어있고, 또 새로이 받는 자료가 바로바로 공유된다면 한번의 XRAY 촬영으로 끝났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또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불필요한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하늘에서 정의가 대통령님, 저는 의료원에서 사회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가만히 보다 보면 타 병원기록지를 발급받아 가는 사람이 많은데, 타 병원에 의뢰하다 보면 계속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그 양이 많을 경우 엄청난 비급여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간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언제 구축되며, 타병원 기록지의 표준양식 개설여부는 언제 결정될 예정이며, 표준화 가능성은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부처추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년까지 거점병원 중심의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추진하였고 '17년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복지부 협업)
	보건복지부	위의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거점병원,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확대 방안을 검토(`18)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6
AI 방역 개선대책 추진

제안자 **comet**님

주요내용 AI 확진농가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 거리·권역을 고려한 그 외 농가는 예찰 강화로 AI 방역 및 관리 체계 개선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2016년 11월 16일에 발생한 ai는 올해 4월까지 총 383호 농장에서 발병하여 예방적 살처분 포함 946농가 3,787만수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이 중 산란계는 2,518만수(사육대비 36%) 산란종계는 43.7만수(사육대비 51%)가 살처분되어 그 피해가 막심하며, 이에 따른 계란값 상승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고 살처분된 산란계 농가는 재입식의 어려움(병아리 물량부족, 가격상승(평소의 3배 내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에 ai가 발생했지만 완벽한 초동조치로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ai확진 농가만 살처분을 24시간 내에 완료하고, 주변 농가는 철저한 예찰을 통해 2차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서류상으론 살처분이 24시간 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인력/장비 문제로 수일에 걸쳐 작업을 함으로써 ai가 2차,3차로 계속하여 확산된 것입니다.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처분다운 살처분 정책 펼쳐주십시요. 확진받은 농가 지역의 모든 인력/장비를 총 투입하여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거리와 지역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그 외에 농가는 예찰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부처추진계획 농림수산식품부
현재 가축방역 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동대응)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 민·관·군 합동 총력 대응체계 가동,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 추진

· (사전예방) AI 발생 위험농장 공수의 전담제 도입, 간이 진단 킷트 사용자 확대*, 특별방역대책기간 가금류 도축장 정밀검사

· (재발방지) 중첩 방역지역 해제 기준* 및 발생농가 등에 대한 입식시험 방법, 교육 의무화 등 가금 재입식 승인 요건 강화

* (현행) 순차적 해제 → (개선) 마지막 지정 방역지역 해제일에 일괄 해제 앞으로도 AI 긴급 행동지침 및 AI 방역실시요령(고시)

개정('17.9월)을 통해 AI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부흥님, 해설사님, cool wind님, 25시님, yhs4724님, vetnara님, 파랑새마을님, 시군말단공무원님, 김홍철님, 구름과해님, 도시락1님, 프라즈마님, c4321w님, 오메가3님, 듀나미스님, 시군수의직공무원님, 연두우님, 당당한국가님, 수학음악천재님, 수월님, 아자개님, hongqiao님, ishmael님, 차별없는 세상님, wings0808님, 주전골사내님, 이천기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07
안전관리자 고용 관련 규제합리화 추진

제안자 **안전한 대한민국**님

주요내용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국민안전 강화

제안내용

1. 현재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거나 줄폐업하고 있음.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창업하는 중소기업 에게는 완화기준을 보다 대폭 완화,제외 시켜 주거나 법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 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주어 신규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함

2. 반면 최근 대기업 사내 유보금은 사상최대인데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안전, 보건관리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음. 최근 화학공장, 대형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완화하고 있음. (예: 보건관리자 100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초대형 사업장도 1명만 선임하면 나머지 99명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음.) 기업경영에 충분한 사내유보금이 있는 대기업에는 국민의 생명과 관계된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완화 기준을 제외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선임기준을 정하여 산업재해예방활동 및 감독 실시로 관리를 강화하라고 하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완화를 하고 있어 정부부처마다 다른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음. 일관성 필요

국정과제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부처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안전관리자 관련 규제특례 사항의 운용현황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 관리자 고용 관련 규제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관련 법령 간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08
지하철 객차 내 치안 강화

제안자 **정론직필**님

주요내용

지하철 내 객차정보 표시, 상시 순찰인력 도입, 이동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한 지하철 승객 안전 강화

제안내용

지하철 내에서 범죄,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안전 대책이 필요함.
먼저 지하철 객차 내 출입문에 부착된 스티커에 객차의 개별 칸 내용을 알리는 내용을 함께 기재할 것. 또한, 운행하는 객차 내에서 상시 순찰을 담당하는 '보안관(가칭)'을 최소 2인 투입할 것.
마지막으로 신고자가 이동전화를 통한 신고시, 이동통신사 기지국과 연동하여 즉각적으로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 바람.

국정과제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노후 SOC 고도화 및 안전강화)

부처추진계획

국토교통부
현재 객차 내에 차량번호 이외에도 열차번호, 객차번호 등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 부착 방안을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철도운영기관이 1~4호선 약 180여 명 등 보안관을 운영 중에 있으나 탑승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민원인이 범죄 등 신고 시에 운행 중인 지하철의 위치, 객차정보 등을 확인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할루바루님, 엘리사랑님, kimjh님, 장산도님, 해물누룽지탕님, 카우떡볶이님, 한만호님, 충2님, 임네닉님, 평화롭고 자유로운님, 꿩꿩꿩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09
항공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제안자 **backpacker**님

주요내용

조종사의 비행시간 기준 개선을 통한 항공분야 일자리 창출 제안, 일자리 나누기 효과 및 국민 항공안전성 제고

제안내용

**항공은 매년 기장, 부기장 부족으로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법적 제한시간까지 배당하고 있으며 이는 항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연 900시간, 중국은 연 85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연 1000시간 가량 비행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조종사에게 많은 워크로드가 가해짐은 물론이고 신규 조종사 채용규모도 작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항공 조종사의 경우 최근 보잉777기종 조종사들은 매월 100시간가량의 비행을 소화하고, 미주/유럽 등 장거리 비행에 외국 항공사들은 기장/부기장 조종사를 2세트(기장2명 부기장2명) 배정하여 비행피로를 줄이고 해외스테이션에서 이틀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여 복귀비행시 비행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항공의 경우 기장2명/부기장1명 3명으로 장거리 비행을 시키고 해외스테이션에서 24시간만의 휴식을 제공하여 복귀비행시 조종사들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종사들의 법정 연간비행시간을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인 900시간으로 하향하고, 장거리 비행시 조종사를 기장/부기장 2세트 배정하여 항공안전을 도모한다면 항공사는 늘어나는 조종사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조종사를 더 고용하게 될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살아나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 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부처추진계획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조종사 피로관리 관련 국제기준이 개정('12.11.)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국내기준을 개선 추진 중입니다.

정부의 기준개선안을 '18년 6월까지 업계 의견청취 및 시범운영을 실시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18년 7월 항공안전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2년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PILOT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10
수돗물을 안전하게

제안자 **카레라**님

주요내용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제안내용 저수조업체 등록을 허가제로 전환, 수도시설전용 세척·소독제의 규격기준(안) 마련·검증평가 제도 도입 등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어 주기 바람.

국정과제 국정과제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부처추진계획 환경부
현재 동 주제와 연관하여 급수설비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저수조업체와 관련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허가제 전환방식의 효과를 면밀히 비교 검토할 예정입니다.

차미설님, 명길님, 소이화답님, 노랑개구리님, 그엄마님, 1230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11

독성 화학물질 구입·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

제안자 **Bakmi29n**님

주요내용 염산·황산과 같은 독성 화학물질 구입·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

제안내용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묻지마 테러에 관한 정책을 제안. 염산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약국에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며 쉽게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화학과 학생이라며 공장에서도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 쉽게 구매 가능.
10%이상의 산은 시중에서 유통될 수 없는데 유명 쇼핑몰 **에서는 35%의 황산을 판매한 경우도 있음. 염산이나 황산 등의 유해물질의 구입, 유통에는 제발 제재를 가해주기 바람.

국정과제 32.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부처추진계획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판매·유통 관리를 강화하여 우편뿐만 아니라 택배로도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통신판매 시 구매자에 대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운영을 통하여 온라인상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써니워니님, 안자춘추님, 김갱수의원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12

희귀병에 대한 연구기관 신설 등 국가적 지원 대책 강구

제안자 **김임용**님

주요내용 파킨슨증후군 등 각종 희귀병에 대한 연구기관 신설 및 국가적 지원 대책 강구

제안내용 파킨슨증후군 등 각종 희귀병에 대한 연구기관을 신설하고, 국가적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의료 공공성 강화)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기술·치료제 개발 목표를 위해 추진전략 실시, 제1차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희귀질환관리 위원회 개최 및 종합계획을 발표('17년)한 바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추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겠습니다.

부산사는50대사람님, 빛바라기님, wader9님, quakey님, 수건댁님, 걱정없이살고싶어요님, 슈미님, 진아맘지현님, 까망설탕님, 동화나라공주님, 자비를베푸소서님, 써니샘님, 긴병에효자없다님, 통도사님, 구삼이엄마님, 부산태생님, 선우엄마님, 오다님, 김그래님, 작은꼬맹이님, gu5님, 74tg님, 사람풍경^^님, 가이버서님, 이웃집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13

아동복지시설 중도 퇴소자 보호체계 강화

제안자 **임성권**님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중도 퇴소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제안내용 아동복지시설(보육원, 그룹 룸 등) 중도퇴소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해 주세요

국정과제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보호처분 종료 아동이 원래 생활 시설로 복귀 희망할 경우, 아동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자체의 개입을 독려하고, 원 시설 복귀가 어려운 아동은 '청소년중장기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선고 시, 처분기간 종료 후 원시설로 복귀해야 하는 병과처분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꿈꾸미님, hite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12
단순 의료사고 사망 예방 강화

제안자 **신태영**님

주요내용 매년 단순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환자는 최대 5만명인데, 환자 안전법 보완, 관련 R&D 강화 등 요청함

제안내용 매년 단순의료사고로 사망하는 환자는 최대 5만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집계됨(2013 국민건강통계연보 통계)
2016년 발효된 일명 '종현이법'-'환자안전법'은 병원내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순의료사고를 예방하고자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사고발생을 보고하는 제도임.
기관의 '자율적인 보고' 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환자안전위원회' 및 '관련 교육'이 추가되었으나 실효성 의문임. 실질적인 환자안전사고의 감소는 첫째, 의료인력 피로도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둘째, 정확한 환자, 약물, 시술절차 의 '더블체킹의 반복'이 필요함.
모순되는 것은 '더블체킹의 반복'이 의료인력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것임.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더블체킹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나 제도적 장치'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봄. 자동화, 기계화 환경에서 바코드, RFID시스템은 효자노릇을 하였지만, 현재 더블체킹을 위해 병원에 도입하였더니, 노동집약 환경의 병원에서 오히려 업무로딩을 가중시킴. 관련 부서의 진지한 관심을 부탁드림

국정과제 42.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전공의·간호사 등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alvinchoi님, 짱구샘님, 노르우드님, 안산댁입니다님, 라니야님, 권력분산님, sntowns님, 의료사고적폐청산님,
피눈물로호소님, 혜민승우맘님, 레지나님, 고통없는세상님, 까치복어님, 불발탄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15
자살예방센터 및 건강증진센터 확충

제안자 **괜찮니**님

주요내용 국민들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해 권역별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확충해 주기를 바람

제안내용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비롯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유가족 면담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은 민간위탁이라는 구조 하에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음. 유가족들은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 그중 하나가 담당 실무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것에 있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고용안정 및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일자리 확충을 희망함

국정과제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 근무조건 개선 등을 통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바다다님, 포켓몬님, 쏭휘님, 딸맘님, 나낭냥님, 트리집사님, 냥탱이님, 어름치님, gomgom2님, 나율맘님, 나는자연인이다님 kkang4478님, 할만한생명지킴이님, 생명보듬이님, 신돌산님, duddls님, danmug님, 딸기분홍이님, 정신건강지키자님, 푸르나님, 맘챙김님, 잠시만안녕님, 꿀짱구님, 국민한대한강건님, 핀카나님, 최미영님, 백종우님, 김혜정님, 심평호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16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방안

제안자 **게을탱이**님

주요내용 학교 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이전, 피해자와의 접촉점 제한 등 개선

제안내용 학교 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보통 학생이거나, 처벌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가해자의 이전 : 전학이나 부서 이동 등 (피해자가 피하는 게 아닌 가해자가 움직여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접촉점 제한 : 문자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보복 방지 (회사 성희롱의 경우 고발자/피해자 보호 등 - 2년 동안 해고 금지 및 평가에 대한 정당성 확보)

국정과제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성가족부)

부처추진계획

법무부 「소년사건 처리지침」의 준수를 통해 소년의 학교폭력 사범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소년사범의 교화·선도에 적합한 실효적 처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방지 및 예방활동 적극 전개하여 검사의 일선학교 학생들 대상 준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한 범죄예방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부 학교 폭력 관련 중앙단위 핵심전문가 양성 및 시도별 전달 연수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도 교육청 단위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 점검·지원단을 활성화하여 단위학교의 공정한 사안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대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역량강화를 통해 자치위원회 조치의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디어넷님, 여름나무7님, 변호인님, 기분좋은날님, suelysueyl님, gesell333님, donggl33님, goals1122님, 털보샘님,
달님응원님, 안전교육님, 소이화답님, 게을탱이님, 윌리엄석스피어님, 겨울바다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17
아동학대 범죄 관련 양형 기준 강화

제안자 **죠스맘**님

주요내용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강화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서 여섯 살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 6년만에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는 제게 생명의 가치와 인권의 존중이라는, 추상적이기만 했던 가치들을 온몸과 마음으로 체득하게 해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아동학대 관련 기사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추이를 더욱 관심있게 지켜보게 되었지요. 학대 당한 아이들의 아픔에 너무 깊이 감정이입이 되어 밤잠을 설친 날도 많았구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밤잠을 설치는 날이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수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후안무치함과 가학의 정도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범죄자들에게 선고되는 어처구니 없는 형량입니다. 십 년도 살지 못한 자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인 사람들이 채 십 년도 안되는 형량을 받는 어이 없는 상황을 볼 때마다, 한국에서의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은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좌절감에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판결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양형 기준에 대한 설명들 역시 황당합니다. 살인자에 대한 형량은 죽은 자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섯살 짜리 어린이를 죽인 부모는 그 어린이의 남은 인생 95년을 함께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식을 제 손으로 죽인 자에 대한 도덕적 단죄 역시 가장 극한 형벌로 다스려져야하는 것은 물론이구요.

부처추진계획 법무부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구형을 강화하였습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구형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yunyun님, 시리님, 미니01님, 고주연님, 힐링캠프님, sysra40님, 정책제안님, ppippi님, 더블에스님, 나달님, 박지영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18

친족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제안자 **헤슈 / 당당**님

주요내용

· 친족에 의한 성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제안내용

헤슈

저는 친족성폭행 범죄 피해자입니다. 10살 무렵부터 고등학생이 되어 가출하게 될 때까지 오랜 시간 성폭행을 당했지만 제게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 엄마가 없던 제게 유일한 보호자가 그 악마였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자 처벌 너무 약합니다. 10년이 지나 사람 사는게 사는게 아니라 어렵게 용기 내어 경찰서에 갔지만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은 기각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어려움이 많았고 오히려 무고죄로 몰려가며 그 악마는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온갖 모욕에 재판에서는 가해자의 변호사까지 온갖 잡소리로 사람 목을 조였지만 끝내 불리해지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치소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중이다 라며 선처를 요구하고 뒤로는 저의 집에 사람을 보내 합의해주라고 협박하고 온갖 협박편지를 보내왔지만 결국 재판에서는 형량이 감형되더군요. 친족성범죄 피해자는 너무도 쉽게 노출되어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금방 주소지며 연락처며 알아내기 쉽습니다. 용기 내어 도움요청하기도 어려운 게 친족성폭행 피해자에요. 물론 모든 성범죄 피해자들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더더욱 끔찍합니다. 나에게는 범죄자인 악마가 내 동생에게는 그냥 아빠니까요.
제발 친족성폭행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다시 살아보려 하는 제가 매일 그 악마가 감옥에서 출소해서 해코지하는 꿈을 꾸며 괴로워합니다. 제발 친족성폭행 피해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도 가해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가 원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개명(성까지)이 쉽게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주소지와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출소후에 어떤 해코지를 한다면 감옥에서 다신 못나오게 해야만 합니다. 제발 이런 소수의견도 경청해주세요. 아무도 이런정책을 제안하지 않는 사회에서 목소리라도 내볼수있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당 안녕하세요. 데이트 폭력 사건 경험자입니다. 최근 데이트폭력 관련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사건이 점차 늘어나는 것도 맞지만,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직접 당하고 나서야 기사에 나올만한 수많은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제 친구, 그리고 직장동료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비 살인, 예비 가정폭력이라 할 수 있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에 관한 처벌이 10만원도 안되는 경범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처벌조차 쉽지 않습니다. 수천통의 전화 녹음과 문자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협박이 아니라는 사실로 증거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지경까지 가야 협박인 것이고 협박이 아닌 것인지요. 법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형량 또한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이 문제를 더이상 가벼운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상해를 당하고 나서야 형벌이 내려지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법이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 현재 의안 정보: 진전이 없음 -> 스토킹 법안 및 데이트 폭력 관련 의안이 전부 폐기되거나 철회됨. 2016년 6월, 9월에 올라온 법안 모두 제안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음.

* 현 우리나라 법 상황 :

1. 선예방이 아닌, 범죄 후 형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신청을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리 하는 방향. 접근 금지 신청을 무시하고 찾아와 폭력이나 살해 가능성이 큽니다. 살겠다고 요청한 것인데, 죽고 나서 벌 내려주는 꼴. (참고로 보복이 두려워 이조차 신청하기가 두렵습니다.) 곧 맞아죽을 마당에 스토킹과 폭력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2. 법의 기준이 비현실적임 피해자로서는 증거가 충분한데, 법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아이러니한 상황. 협박죄로 적용하자니 "죽이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정도의 협박이 어느 기준 이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극적인 표현이 아니어도 충분히 스토킹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증거물인데도 법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가해자는 그조차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겠죠.
3. 경범죄처벌, 협박, 사이버폭력 중 하나로 치부. 예비 살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이 경범죄, 게다가 처벌도 쉽지 않음. 실제 겪은 일로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곧 풀려날 걸 알기에, 법이 약한 걸 알기에 보복이 두려워 경찰서로 가지 않았습니다. 법을 강화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외 사례: 독일에서는 이미 가까이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자체를 스토킹으로 처리하고 있음. 일본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중형을 선고하고 있음.

* 제안:

1. 해외사례 참고하여 형벌 강화 및 예방에 초점 맞추기
2. 늘 미완결인 스토킹, 데이트폭력 발안 처리
3. 스토킹, 데이트 폭력을 경범죄처벌에 속하는 게 아닌 개별적인 사건으로 처리
4. 보이스피싱 예방처럼 "스토킹, 데이트폭력" 문제 대대적 홍보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헤어지기가 참 무섭습니다. 잠재적 살인에서 지켜주세요.

부처추진계획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구형 강화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정과제 66-5 '젠터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와 연계, '17.하반기 성폭력 처벌규정 재정비를 위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정 위원회도 같은 시기에 운영할 예정이며, 위원회 운영을 바탕으로 '18년 중 관계부처 및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정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다현님, 김해영님, 임정수님, 임정민님, 박슬기님, 유혜림님, 정나래님, 최성준님, hotline님, 신종마녀사냥범죄님, 당당님, 민주구님, 루키루님, 인간의권리님, 대한민국주권은 국민님, 충성충성님, 건의자님, 우유12님, 정상적인세상님, 귀염둥이님, 콘도르님, Yyyyyyy님, stop!갱스토킹님, 문벅님, 지가르데님,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싶어요님, coals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19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확보

제안자 **문폭탄**님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처벌을 강화하고, 무인 단속 장비를 확충, 신호등 설치 의무화, 횡단보고 확대 설치

제안내용

1. 스쿨존 교통사고를 해결해 주세요. - 학교 앞에서 사고가 날 경우 어린 생명이 다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보호를 위해 학교 앞에서 과속할 경우, 지금보다 더 무거운 벌금을 매겨 주세요. 학교 앞은 횡단본도의 너비를 넓혀 주세요. 감시카메라(CCTV)를 더 설치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학교 주변에는 신호등을 필수로 설치해 주세요. 골목길에는 반사경을 설치해서 운전자가 아이를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 강화 -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탈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 학교 앞에 CCTV 설치하고 자전거 보호판을 의무화해 주세요. 자전거와 일반도로를 표지판과 고유한 색깔 등으로 확실하게 구분해주세요. 창원외동초등학교 문** 올림
   P.S.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추진계획

경찰청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일반도로 2배 수준의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고정식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7.8월 도심형 구간단속 장비 시험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12월에 현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석재님, 오가은님, 최종숙님, 전초롱님, 구자도님, 김준호님, 김영진님, 임은선님, 엔지니어님, 베가님, 희정이마미님, 마카롱님, 법진님, 안전나라님, 지니~님, 행복이두배님, happyseohyun님, Jager님, 엄마멘토님, 고재영빵집님, 하트강님, 유단자님, 나도자유인님, 탑모터스님, YN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20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차량 운영 실태 개선

제안자 **유니버스가디언**님

주요내용

쓰레기 수거차량 뒤쪽에 환경미화원이 매달린 채 운영되는데, 안전장치가 없어 상당히 위험해 보임

제안내용

새벽에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영하는데 2인 1조입니다. 1명은 운전하고, 1명은 뒤에 차 난간에 매달려 가다가 쓰레기 주워서 차에 싣고 갑니다.
문제는 뒤에 있는 사람은 난간에 올라타 차를 잡고 가는데 뒤에 안전장치(안전띠 등)가 없어 자칫하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도에서 우연히 본 것인데 ... 담당자분보고 챙겨보시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추진계획

환경부
안전을 고려하여 청소차 등 화물차량에 발판을 설치하고 탑승하는 것을 다수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청소차의 발판설치 등 불법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작업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저상차 개발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윤재준님, 김종석님, 선별장님, 더나은내일을위해님, 삼촌팬태연님, 태아빠님, kig1929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21

견인차량 폭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요구

제안자 **새강자**님

주요내용 견인차의 역주행, 횡단보도 주행, 신호 무시, 폭주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필요

제안내용

1. 사고발생시 견인차량의 경찰 무전 도청 및 감청은 과연 합법적인건가요??경찰청은 이를 모르는 건지, 아님 알고도 묵인하는 건지.
2. 견인차량의 역주행, 횡단보도주행, 신호무시, 인도주행, 불법주정차, 폭주 등은 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부처추진계획 경찰청

견인차량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제시된 견인차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7.8월 '고속도로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견인차량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ezuuny님, 기쁨으로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22
어린이집 앞 금연구역 지정 필요

제안자 **yshown**님

주요내용 어린이집 시설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필요

제안내용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학생들이며 어른이며 어린이집 앞에서 담배를 피는걸 제가 봤는데요... 아직 어린이집은 금연구역이 안된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피는거라... 담배냄새가 다 들어오는데...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담배냄새에 다 노출이 됩니다... 근처 피씨방에서 나오는 학생들이며... 군인들까지...
아이들이 무슨 죄일까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인재가 될아이들입니다...ㅠ.ㅠ 제발... 어린이집 앞을 금연구역으로 만들어주세요..ㅠ.ㅠ 부탁드립니다..ㅠ.ㅠ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초중고, 의료기관 등의 출입구 또는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까지 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이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지오맘님, smoki76님, 보리보리차님, 미찬님, 권나윤님, ㅇㅅㅇ얼굴모양님, 성재"s님, 김동환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23
신생아 병원 관리 및 규정 강화

제안자 **sssunn**님

주요내용 병원 내 감염발생·확산(결핵 집단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 필요

제안내용 최근 서울 **동 **여성병원에서 출산 후 아이가 결핵에 감염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병원 간호사 채용시 건강검진이 없었고 가벼운 기침만으로도 의료진이기에 과잉 진료를 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생아실 근무자를 호흡기 관련 검사도 없이 채용했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근무시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역시 일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직원들도 엑스레이 검사만 받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병원의 직원 감염 여부 확인 결과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반복되는 신생아 감염사례에도 늘 조치는 한결 같으며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사태로 신생아실 뿐만 아니라 병원 감염 관리에 더욱더 철저한 규제 및 관리 감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식적인 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마음놓고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장기이식병동 등 감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 분야 종사자는 배치 전에 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 외에도 질병관리본부가 결핵역학조사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역학조사 시 검사 일정 및 방법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왕방울님, 똘비님, 으뉴량님, 윈터드림님, 협이맘님, 서은서우빠님, SHHSSH님, 예건아빠님, 제발...님, inee0412님, 콩일맘님, 미정v님, 곰블리님, 얼떨나린님, 스카디님, 지안빠님, 신통유즈맘님, cloudking님, kei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24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

제안자 **푸른마음1213**님

주요내용 유아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처벌을 강화, 권고 대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의 신속한 처리

제안내용 저는 12개월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1. 제안 경위

(주)보니코리아 (대표이사 홍성우)에서 아웃라스트 제품을 구입 후, 소비자들은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제품 하자와 제품을 사용한 영유아들의 호흡기 질환 및 피부 질환 등의 증상으로 인해 업체에 환불 및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극히 소수의 구매 내역에 한해 환불 처리했으며, 대부분의 구매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환불 처리를 하지 않고 국가기술표준원의 결과 발표에 따라 의사 결정할 것임을 공식홈페이지 상에 공지 게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2. 제안하는 정책

1)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들의 인증비용 부담을 줄이고, 대신 꼼꼼히 인증을 받아 부모들이 마음 편히 유아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미준수 시, 현 법령보다 강화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6월 29일 오전, 이낙연 총리님께서 심의, 확정하신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의 신속한 처리 바랍니다.

3) 유아용품으로 인한 인체의 유해 증상 발현 및 사건 발생 시, 해당 제품의 리콜과 환불을 "권고"가 아닌 "명령"이 가능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처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미인증 제품에 대하여 제품 사전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타법 사례와 유사한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7.6월, 국무조정실)에서 심의·확정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적용대상 확대,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 리콜 제도를 신속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자에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리맘님, 로로맘님, 드니드니님, 305님, 엉아사탕사조님, 지완이맘, 시윤맘, 서아지한맘, pbijou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25
선박검사 예외대상 변경

제안자 **포리포리**님

주요내용 바지선 등이 선박검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선박검사의 예외대상 축소 필요

제안내용 저는 2016년 11월 11일에 송도신항에서 발생한 크레인 침몰 사고 유족(딸)입니다. 사고 시간은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로, 맑은 날씨에 바닷물이 고요한 정조시간대였고 크레인이 무거운 물건을 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지선위에 있던 크레인이 기울어져 크레인기사가 바다로 빠져 사망하였습니다. 6개월이 넘는 지금까지도 사건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 유족은 바지선의 하자로 인하여 크레인이 침몰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을 표하고, 선박의 안전성의 의구심을 제기해왔었습니다만, 감식결과에서 원인불명으로 나와 정확하게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사과정을 진행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바지선이 선박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조한 지 30년이 가까이 된 선박이었는데,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조한 선박으로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선박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 번도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통상 바지선은 무거운 물건을 싣고, 크레인 등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안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선박검사의 예외대상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추진계획 해양수산부
항만건설작업선 안전을 위하여 「선박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7.4.28~'17.6.13) 하여 이제까지 안전검사에서 제외되어 왔던 '07.11.4 전에 건조된 크레인 부선 등도 앞으로는 선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시크서방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26
농·어촌 주민 위한 인도 조성

제안자 **콩나물장사**님

주요내용 농·어촌에도 인도가 잘 정비되어 안전한 길 조성

제안내용 저는 시골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는 맞벌이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어촌에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내려와 보니 도로의 문제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인근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 산업용 차량(대형트럭 등)이 매우 많이 다니고 있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인도 건설은 되어 있지 않고 시골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1차선 편도 좁은 길에서 큰 차들 사이 가까스로 비켜다니며 매우 위태롭게 다니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면 자동차공장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으로 차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급하게 달리는 자동차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고 또 교통사고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내 거리는 매년 자전거 도로니, 보도블럭 교체공사니 하면서 인도 정비를 해마다 합니다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 지역은 인도조차 없으니 차별에 화가 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인접 지역에서도 어느 구간은 인도가 정비되어 있고, 또 어느 구간은 인도가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농산어촌에도 인도가 잘 정비된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처추진계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농·어촌의 도로를 포함한 일반국도 상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 보도 단절구간, 사고발생지점 등에 단계적으로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 외에 지자체 관리 도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도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보도 설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유리플(뷰리플)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27
자동차 유리 선팅 제한

제안자 **Andrew**님

주요내용 다양한 범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차량 선팅 제한

제안내용 요즘 거리에 다니는 차들을 보면 자동차 4면을 짙은 틴팅 필름으로 부착하여 운전자 및 차량 안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차들이 많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범죄의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일정 수준 이상의 틴팅 필름은 예전과 같이 규제하여 운전자들이 어둠속에 숨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처추진계획 국토교통부
틴팅의 가시광선투과율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는 차량 운행 중 단속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거에는 차량검사 시 과도한 틴팅 여부를 검사하였으나, 검사 후 다시 선팅을 하는 등으로 이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낮고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이를 다시 차량검사에 추가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부활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드립니다.

초자연님, 빛의예술님, 신늪님, 복세번님, 양사나이님, 라하브라님, younauto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28
소중한 인명 달린 대중교통 관련 정책

제안자 **pmg**님

주요내용

졸음운전 예방 및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에 2명의 기사가 1대의 차량을 같이 운행

제안내용

안전운전을 위해 대중교통 운전 2인 1개조 정책을 제안드려봅니다.
2인 1개조란 한대의 차량에 두명의 기사가 종사하는것을 말합니다. 일을 겪어보니 차량 한대에 기사가 업무를 수행 할 시 확인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량 내·외부 점검 및 상황파악, 교통상황파악, 승객 안전 유무 파악, 노선 및 정류장 주변상황 파악, 승객 민원 응대...
비교적 간단한 수행목록이라 생각되실지 모르겠으나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워가며 이 모든 것을 신경 쓰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수시로 난폭운전이 자행되고 있는 마당에 맡은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명의 기사가 한대의 차량을 같이 운행하게 된다면 수시로 교대하가며 피로를 줄여가며 운전 할 수 있고 서로서로 업무를 부담하여 일을 수행하가며 협동심을 증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옛날 버스안내양이 있었던 것 처럼 버스기사의 업무를 같이 부담해줄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중교통은 매일같이 빠르고 빈틈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움직여야하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빡빡하고 무거운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다면 일의 부담을 줄이는 위와 같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부처추진계획

국토교통부
장거리 노선 기·종점에 운전자 쉼터 설치 시 최초 운행에 운전자 2인이 동승, 쉼터에서 1인은 다음 차량 운전자와 교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으므로 향후 지자체와 협의 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으로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 도입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의 안전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호동이2님, 날아라오딧세이님, 재능나누리님, 메롱이님, 파파호파님, 어린왕자77님, 다함께잘살자님, 네신비라님, 맨날머하노님, 회강투게더님, 속초바다님, 애국지사님, ieunjung님, seo65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29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제안자 **ecolady**님

주요내용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화기 위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및 육성 필요

제안내용 최근에 독일 국민이 직접 참여했던 독일의 [2050년 기후보호계획 수행방안] 97개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 효율법 개선이다. 여러가지 개선안이 있으나 본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리바운드 이펙트(Rebound effect)를 고려한 법안을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농구에서 리바운드가 있듯이 에너지를 다시 많이 쓰게 되는 현상이다. 학술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으나, '리바운드'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는 힘은 그리 크지 않다.
본인은 이에 대해 제언한다. 우선적으로 이 리바운드 이펙트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에너지 요요 현상]이라고 명명하자. 요요현상, 즉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저 열량인줄 알고 마음 놓고 많이 먹어 결국은 다시 찌는 것을 잘 표현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경각심이 들게하는 힘 있는 용어이다. 이 요요현상을 에너지에 접목시켜서, 에너지도 싼 줄 알고 일부러 더 펑펑 쓴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자는 것이다. 사실, 소비자들은 전력이 싸면 많이 쓰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가 나와도 사용을 더 많이 한다. 한마디로, 에어컨 한 시간 틀 것을 두 시간 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정과제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 육성

부처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에너지의 날'행사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17년에는 6월·12월 '에너지절약' 캠페인, 11월에 '에너지 대전' 등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진행합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책 추진 시 리바운드 효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연구용역 및 민간 전문

연구사례도 정책 반영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열정쟁이님, 찰리신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30
친환경 자연에너지 비중 확대

제안자 **jsong**님

주요내용 원자력 대신 태양광·조력·풍력 등 친환경 자연에너지 비중을 확대

제안내용 에너지 포트폴리오 재정립(환경안보적 관점 강조) - 원자력 대신 태양광 · 조력 등 친환경 자연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

국정과제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부처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3년 이후 10%로 고정된 RPS(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 위해 '17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태양광 등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여건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지킴님, 자랑님, 소다님, 오렌지머핀님, wjdwls님, 해설사님, 공생의의미님, 지은동님, 시원75님, 나대로요님, 아빠곰곰돌이님, 메카트로닉스80님, 큰걸음님, 태양광1번지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31
재생에너지 뉴딜일자리 추진 계획

제안자 **융태환**님

주요내용 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재양성, 투자확대, 시민 참여의 의무화 추진

제안내용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일자리는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그 중 1.5만명으로 0.15% 정도밖에 안되는 수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20%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시고, 2030년까지 매년 10조원씩, 총 140조원을 투자하시겠다고 했지만,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 유연한 규제", "비독점적 시장 구조", "인재 양성"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한국은 절대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기술력을 가지고도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 건전한 시장 생태계"가 없었고, 규제와 독점 구조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나 신규로 창업되는 기업들이 거의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학과 다양한 교육기관에선 인재를 양성해도 그들이 갖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었고, 현재는 새로운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문 인력들이 거의 양성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3가지 제안은 1) 무엇보다 첫번째는 " 인재양성" 2) 제도 개선과 병행하는 투자 확대 3) 시민 참여의 의무화(시장 생태계 강화)입니다.

국정과제 국정과제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부처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력양성을 추진 중이며, 신재생에너지 기술 관련 석·박사 양성 및 재직자 대상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년 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신재생 발전 사업에 대해 세제감면 일몰연장 등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고자합니다.

또한 신재생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사업에 대해 주민 투자 지분비율에 따라 기존 풍력발전 대비 최대 20%까지 가중치를 우대하고 시설자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무한에너지님, 김지란님, 나무는좋다님, 공생의의미님, big4751님, 비타맨님, 바다와하늘님, fssp님, 태양광1번지님, 널곰님, 지표님, 신재생에너지님, 그림자작가님, 분당골님, 미린님, 바람아비님, 둥글레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32
정부차원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제안자 **엄대유 / 황병봉 / 인성**님

주요내용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제안내용

엄대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서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기 바람.

황병봉 식물을 활용한 생활 속 미세먼지 제거기술 개발 및 활용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람.

인성 현재 환경부가 제시하는 초미세먼지 기준은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WTO 기준에 의거하여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 주기 바람.

국정과제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부처추진계획

환경부 첫째, 노후 석탄발전 조기폐기 및 일시 가동중단, 대형사업장 배출허용 총량 관리 등을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감축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중 대기질 정보공유 대상 확대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 제공 등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둘째, 현재 '대기환경기준 선진화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국가의 입법례, 대기질 개선추이 및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 식물이 도입된 스마트 그린 오피스, 도시 빌딩 식생시스템 조성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도시 농업 활동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식물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 분석 및 제거 메커니즘을 구명하고 21년까지 IoT 기반 식물 관리 및 식생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빛맑음이님, 아르테님, 탱탱님, 이니사랑아둘맘님, 앞산도안보여님, 여름엄마님, 여름엄마님, 보유아빠님, 동동이마마님, 행복만세님, 뚜벅이님, 용기02님, 어린농부님, 똘똘이엄마님, lauren님, 미세먼지싫어님, 숨쉬고싶다님, 내사람MJ님, 여니맘80님, Treetree님, 미세먼지out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33
냉매 감축방안의 제도화

제안자 **황병봉**님

주요내용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냉매 감축방안의 제도화

제안내용 미세먼지·오존층 파괴 및 온난화 주범인 염소계 또는 불소계 온실가스인 냉매 감축방안을 제도화해 주기 바람.

국정과제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부처추진계획 환경부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냉매의 적정한 인수·인계 의무를 부여하는 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폐차업자가 회수·보관한 폐냉매를 적정한 처리시설을 갖춘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또한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재생가능 냉매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칙치기붐님, 온실가스관리자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34
공단 인근지역 악취 문제 해결

제안자 **왕사과**님

주요내용 시화공단·반월공단 등 공단 인근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

제안내용 공단 근처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람. 악취필터를 설치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함.

국정과제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부처추진계획 환경부

시화·반월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일반 지역보다 엄격한 악취관리기준 적용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와 시흥시에서는 악취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악취 발생시 알람문자를 전송, 지도점검 강화와 자율적 악취관리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을 위해 필터를 이용한 흡착, 물을 이용한 흡수시설 등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악취방지조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불타는스님님, 비슬산1번가님, 우아한날님, 콤파르크님, 골든킹님, 순호리님, 혁이님, 윤똘사랑님, 고집불통님, 동의보감님, 아이들맘, 예스남매마미님, 검단시민님, ddorj님, 비전2017님, 안담사리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35
남북 생태통로 개설

제안자 **날숨**님

주요내용 남북 야생동물이 교류할 수 있는 남북간 생태통로 개설을 통해 남북평화, 관광활성화 기여

제안내용 남북의 야생동물이 교류할 수 있는 남북간에 생태통로개설을 제안하고자 하며, 통로의 형태는 지상, 지하, 고가 어떤 것이든 관계없지만, 어느 정도 넓은 폭(약 0.5km)으로 DMZ를 통과 하면 좋겠습니다. 남북교류 강화 및 긴장완화 기여, 상품화에 따라,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도모, 건설경기가 향상 기대되며, 통로에 인간 통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다수의 감시 장치를 하여 관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국정과제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 협력 활성화)

부처추진계획 통일부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보전의 근간인 백두대간, DMZ 일원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로드맵을 '17년 11월까지 관계부처와 합동해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의 주요 단절구역을 연결·복원하여 한반도 내 야생동물의 남북간 이동성 및 연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2day님, 고3소녀님, 친구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36
폐의약품 수거처리법안

제안자 **겸손하고 당당하게 / 이****님

주요내용 폐의약품 무단 폐기로 인간과 자연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제안내용

겸손하고 당당하게 1학년 *반 양**입니다. 교내 자율동아리 "'프로젝트 기획봉사동아리, 메아리"' 활동으로 "폐의약품 분리수거"'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처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약회사, 의료기관 기업형 축산,양어 ,양돈 농가, 약국,가정등을 폐의약품 발생처로 볼수 있는데요. 동일한 폐의약품이 발생장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배출, 수거, 처리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폐의약품 발생처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폐의약품 무단 폐기로 인한 인간과 자연의 훼손을 막아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중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반 이** 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폐의약품 분리수거의 실태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폐의약품 분리수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실천되고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을 분리수거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면, 가루약과 알약은 매립되어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물약은 지속적인 수질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약국에서 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실천을 못하고 있을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귀찮아서' 가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약국에서 아파트 혹은 주택별로 조그마한 수거함을 돌아가며 수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뿐더러, 사람들도 집 앞에서 의약품을 버려 편리하게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대형마트, 편의점, 직장 등에 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익광고도 만들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부처추진계획 환경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자치단체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관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자치단체별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배출하고 배출장소로 지정된 약국, 보건소 등으로 배출하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는 등 폐의약품을 적정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손예원님, 정사라님, 이준민님, 정단열님, 김성지님, 덴님, 인권존중님, Hunstar님, 하늘아래님, 꼬마과학자님, 겸손하고당당하게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37
물절약과 새로운 화장실 문화

제안자 **물사랑**님

주요내용 화장실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절수형 또는 무수형 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 도입 제안

제안내용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물 절약과 새로운 화장실 문화를 제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인구행동단체(PAI)에 의해 '물 부족 국가(Water-stressed)'로 지정되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로 인한 도서, 산간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인구 1명당 하루 물 소비량이 275리터로 국제 평균을 훨씬 상회하여 물 절약을 정책적으로 적극 시행하지 않고는 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루 물 소비량의 상당 부분이 화장실의 양변기와 소변기에서 소비됩니다. 일반 가정과 공중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양변기는 1회 6~13리터를 사용하고, 남성 소변기는 2~4리터의 물을 소비합니다. 즉, 화장실에서 국민 1명당 하루 최소 30리터 이상의 물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세식 남성 소변기는 한번에 최대 4리터의 물을 사용하고도 악취 등 위생, 환경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는 수세식 소변기가 구조적으로 배수관 악취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고, 과도한 물 사용으로 인한 습한 환경이 세균, 박테리아 증식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물 안 쓰는 무수 소변기를 적극 장려하여 건식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적이며 물 절약 효과까지 누리는 친환경 제품을 적극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양변기, 소변기 한대가 가져오는 환경적, 사회적 이익은 지금의 세대 뿐만 아니라 후세대에도 적지 않은 혜택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물 낭비의 주요 원인인 화장실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절수형 또는 무수(無水)형 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도입해 주길 바랍니다.

부처추진계획 환경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 등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꼭지와 변기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수설비의 물사용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변기 절수설비 기준(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별표2))

-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
-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
-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

또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는 환경마크 및 KS마크를 통해 인증하고 있고 그 외 절수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 및 부품은 수도법의 절수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설치 가능합니다. 향후 절수형 장치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사람2000님, 파발마통신님, jhc82님, 김진홍님, smpitis님, 백조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38
언론 오보 방지 등을 위한 처벌 강화

제안자 **오주현**님

주요내용 언론 오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한 언론 책임성 강화

제안내용 언론이 오보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 벌점제 등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해 주기 바람.

국정과제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부처추진계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재 방송사의 오보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경고·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기속하여 제재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이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시 반영되거나 '방송평가규칙'에 따른 방송평가 시 감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방통위는 '16년도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방송심의 관련 공정성·객관성 위반 시 감점 강화 및 언론 오보 관련 평가 항목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인 제도 강화, '침해배제청구권'·'알림표시 의무'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오보 등의 책임 언론사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처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검토하겠습니다.

우리하나되어님, 마리오네트님, 집현전님, 낙원의토모에님, 미릭님, 강봉래님, 찡아님, 달봉님, 하마리엘님, 한글누리님, 조군님, 광화문하늘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39
가짜뉴스 처벌제도 도입

제안자 **변소영 / 하리얌**님

주요내용

가짜뉴스에 대해 해당언론,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하기를 희망함

제안내용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가짜뉴스, 왜곡뉴스, 편파뉴스 등으로 인해 어떤 뉴스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국민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지경임 언론사에서는 가짜뉴스를 쓰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니 관심만 받을 수 있다면 추측으로 이루어진 기사를 내는 것도 서슴지 않음.
국민들은 양질의 정보를 얻고 싶고 그 정보는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쓰여져야 함. 기자들도 자신의 기사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제도가 필요함

국정과제

국정과제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국정과제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방송통신위원회)

부처추진계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및 보도·제작·편성의 자유보장,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 및 자율 규제로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찰청 악의적 가짜뉴스 제작·유포 행위 엄단, 특히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 반복적 명예훼손·모욕 등은 처벌 대상입니다. 사회적 이슈 발생시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 내 '가짜뉴스 전담반' 편성·운영하고 각 지방청별 전담반 편성, 모니터링·수사체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거 등 사회적 이슈 예상 또는 발생으로 언론·포털·SNS 등에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대응이 필요·판단시 전담반 운영하고 피해자 등이 신고하거나 팩트체크 서비스

등에서 가짜뉴스로 판단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자 발견 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르덴님, 희망사람포용님, 맨스필드파크님, 나라좋다님, 14번째오아시스님, 개혁과진보님, 손바닥님, joyo님, 대구시민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40
영화관 상영 전 광고 개선

제안자 **대한민국대박**님

주요내용 영화 상영 전 관객의 의무적인 광고 관람 개선 필요

제안내용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주말에 가끔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매표소에서 티켓을 발권받아 입장전에 팝콘과 음료를 구입해서 상영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부랴부랴 입장을 합니다만 광고 상영시간이 거의 10분이상입니다.
정말 보기 싫어도 봐야하는 광고까지 보는 관람료를 내어가며 보아야하는지...꼭 필요한 공영 광고를 본다면 약간 이해 할 수 있지만 모처럼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려 했는데 화가 납니다.

부처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영산산업의 특성 및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자합니다. 광고를 추가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방송, 신문 등 모든 매체의 공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영화산업 선진국의 경우도 상영관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화상영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광고 상영시간'과 '본영화 상영시간'을 함께 안내하여 관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1
영화관 배급구조 개선

제안자 **wlalsl87**님

주요내용 영화관객의 다양한 볼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영화 배급의 독과점 실태를 개선할 필요 있음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영화업계 5년차 종사자입니다. 영화로 접하는 다양한 경험과 배움이 좋아 업계에까지 발을 들이게 되었지만, 실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4대 주요 배급사와 극장을 보유하고 있는 배급사들, 대기업 독과점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는 있었으나 최근 들어 더욱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2-3년 전만 해도 극장에서 한 영화가 개봉하면 흥행성적이 다소 저조하다고 해도 2주 정도는 극장에서 상영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봉 첫째날(보통 목요일 개봉)과 둘째날(금요일) 관객수(스코어 성적)에 따라 극장들이 주말 시간표를 정합니다. 많은 관객들이 볼 시간을 아예 안 주는 거죠. 이렇다보니 독립영화나 저예산영화들은 극장에서 설 자리가 없고 관객들에게 선보일 기회조차 가지지 못 합니다. 보통 목요일에 영화가 개봉하는데 멀티 극장들(CGV, 롯데, 메가박스)로부터 월요일에 개봉주 목요일과 금요일 상영시간표를 받습니다. 얼마 전 개봉했던 저희 영화는 월요일에 한 멀티극장으로부터 시간표를 받았는데 배정해 준 극장들 중 온관(한 상영관에서 온전히 한 영화만 상영하는 것, 영화가 2시간이라고 하면 7회차 정도 나옴)은 배정한 극장들 중 10% 내외고, 나머지 상영관들은 모두 3회차 정도로(일명 퐁당퐁당) 다른 영화와 교차 상영으로 배정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극장의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갑질"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목표인 극장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극장 사이트 별, 결국 극장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예매율 1위, 2위하는 영화로 상영 배정을 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평등하고 편협적인 배급 구조로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영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관객들의 권리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관객들은 대기업 또는 직배사가 배급하는

블록버스터, 할리우드, 대작 영화들만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불평등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한 극장에서 한 작품은 전체 상영관들 중 20-25%까지만 상영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한 극장에서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로 관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게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다른 방안은 현재 영화표 중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분배하는 것처럼 문체부나 영화진흥위원회 등 정부에서 극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이윤창출에 조금 덜 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계에서 영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공정한 배급구조 속에서 다양성을 지니며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대통령님께, 현 정부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부처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산업의 대기업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상영스크린 점유율 상한제와 같은 규제 장치를 '17년 하반기 공개토론회 등 면밀한 검토 후 도입하려고 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풍당당님, 원더랜드님, 보랏빛꿈님, 란비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42
휴관일 없는 도서관 희망

제안자 **얌전이**님

주요내용 박물관, 미술관 대상으로 휴관일을 없애듯이, 도서관도 휴관일 없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

제안내용 "또 문 닫았네"수요자 욕구 못 따라가는 공공도서관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충남 보령시 중앙도서관은 매주 금요일에 휴관하고, 죽정도서관은 매주 화요일에 휴관합니다.
문체부는 10월부터 휴관 없는 박물관·미술관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개선방안 수험생들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도서관 이용객들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휴관 없는 도서관"을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공공질서도 확립되었고 도서관이용객들의 시민의식이 참으로 높은 현 시점에서 실무보시는 분을 적게 하고서도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효과 맘 먹고 도서관에 갔을 때 " 휴관"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허탈감을 느끼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글로벌시대, 도서관에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처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운영 시간 및 휴관일 지정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 도서관 상황에 맞체 조례 및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람실 365일 24시간 개방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에 대해 각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각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각 도서관 운영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규제로 보일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테님, 슬지맘님, 그이름님, 사랑1104님, 딸콩맘님, 비를닮은아이님, 뜨리머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43
외모비하 예능프로 규제

제안자 **들꽃엔딩**님

주요내용 TV 예능프로, 인터넷 등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 수위 규제를 강화가 필요함

제안내용 외모지상주의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선진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지적해 비하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언어폭력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처벌도 엄격하고 특히, 다양한 인종이 사는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부터 피부색, 머리모양 등 신체특징을 지적하고 비하하는 일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친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초등학교부터 친구들 외모 지적해 놀리고 왕따시키고, 외모로 서열세우고, 화장하고, 심지어 선생님을 외모 평가하고..

뉴스에서 국내 청소년들 행복도가 OECD최하라는 보도를 봤는데 그 원인이 외모고민이라고 하네요. 이것이 비단 어린시절 문제가 아닌 것이 요즘은 대학생, 성인이 되어도 학교나 직장에서 외모 차별당하거나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TV예능프로, 인터넷 등 미디어의 영향이 큽니다. 외모비하, 여성비하, 특정 인종비하 등 엄연히 언어폭력인데, 우리 미디어는 도무지 규제가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오로지 자본논리에 따른 시청률위주 제작풍토만 만연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이 되겠지만, 언어폭력 수준의 표현도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100개 채널 TV, 인터넷, 스마트폰, SNS..미디어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만큼 미디어가 대중들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미디어 속 언어가 곧 국민들의 언어가 됩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했고, 사르트르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미디어 속 언어가 폭력적이면 국민들도 폭력적이게 되고, 미디어 속 언어가 존중과 배려의 언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화합하게 될 것입니다. 외모비하 예능포함 미디어 속 표현 수위 규제 제안합니다.

부처추진계획 방송통신위원회

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사가 외모·성별·인종 등에 대해 차별적인 내용 방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심의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를 의결합니다.

특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올 10월 외모비하 등 저품격 예능프로그램을 중점 심의할 예정입니다.

144
수어통역 화면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제안자 **행쇼**님

주요내용

장애인의 시청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수어통역방송의 화면크기확대, 수어통역·자막 방송 프로그램 다양화 요구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수어와 농인에 관심이 많은 특수교육전공 대학생입니다.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수어(수화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농문화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농인들에게 한국어는 외국어와 다름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농인들을 위한 수어통역화면이 너무 작아 정작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 뿐만아니라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음악방송, 한국 영화 등에서도 자막이나 수어통역을 폭넓게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간은 듣는 것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듣지 못함으로 인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수단이 차단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보의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처추진계획

방송통신위원회
수어화면이 작은 경우 청각장애인이 방송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일반시청자는 수어 화면으로 방송영상이 가려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수어화면의 크기·위치조정 및 제거가 가능한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를 개발하여 '18년 시범방송을 거쳐 '19년 상용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방송법(제4조)에서 방송사의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어 장애인방송의 편성의무를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방송사로 하여금 편성을 확대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데프스폰서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45
농인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제안자 **데프스폰서**님

주요내용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196개의 수화통역센터의 총괄기능을 담당할 "수화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설치·운영 필요

제안내용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의 조속한 설치 운영을 바랍니다.
농인(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 196개의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을 총괄할 기구가 없어 청각장애인들의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의 흐름에 맞춘 전문수어통역사(국제수어통역사 등)의 양성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위하여 본회는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설치·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본 회의 요구가 반영이 되어 2013년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중앙수어통역지원센터(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의 설치'가 명시되었습니다. 하지만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는 전국의 수어통역센터를 총괄 관리(수어통역센터 평가, 정책개발, 수어통역의 영역별 통계분석, 본부장 및 센터장 임면, 수어통역의 오역문제, 센터의 각종 민원 해결 등) 하고 농인(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서비스향상과 수어통역전문인(국제수어통역사 등) 양성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기구의 설치가 지연되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본부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처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센터의 업무표준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쇼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46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

제안자 **세상마음먹기나름**님

주요내용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어 발굴조사를 하는데 막대한 조사 비용이 발생하여 겪는 어려움을 해결

제안내용 공장부지허가를 받으려고 관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문화재관련부서에서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문화재관련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옛날 그릇조각 몇 개가 나오고 또 인근에 관을 매설했던 것처럼 관모양의 흔적이 나왔다
그런데 문화재관련업체에서는 조선시대 무덤 같다느니 삼국시대 도자기조각이라고 하느니 하면서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비용이 기천만은 예상된다고 한다.
지표조사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해서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발굴조사는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
심지어는 지자체에서 관공서를 짓는데 사업 예정부지가 당초 수십 미터가 낮아서 재활용 골재 등과 같은 것으로 성토를 해놓고선 한참 뒤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한다고 다시 장비를 투입해서 성토했던 토사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화재관련 일들이 어처구니없게 비일비재하다고 보여진다. 이런 상황은 정리가 되야 한다

부처추진계획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의 사업시행자 부담원칙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조사의 단계적 지원 확대 및 장기적으로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풍납동0934님, 깨씨님, jenny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47
문화유산 안내문 정비

제안자 **지니~**님

주요내용

관광객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각 지역의 문화재 유적지 안내문안, 가이드 방송 등에 대한 점검하여 잘못된 내용을 수정

제안내용

각 지역마다 유적지, 문화재에 보면 역사유래 안내문을 보고 알게 되는데요. 솔직히 역사에 대해 학교 다닐 때 핵심만 주입식으로 배우다보니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실정인데요. 현장에서 안내문을 보면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더라구요.

일례로 전에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낙화암에서 빠져죽은 삼천궁녀에 대해서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낙화암에서 안내방송을 들으니 기정사실화 해서 설명을 합니다. 국내 관광객, 해외관광객이든 역사를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문화제 유적지 안내문,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 다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사적 근거 없는 유래 내용이면 그렇다는 문구를 넣고 가이드 분들도 정확한 팩트만 알려 주셨음 좋겠어요. 꼭 점검해서 수정하고 불필요한 내용들은 빼주셔서 혼란을 안 주셨음 합니다.

부처추진계획

문화재청

문화재 안내문 오류 파악 등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안내문안의 명백한 오류, 문맥 또는 지정 가치 등의 세부내용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 안내판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안내문 바로쓰기와 관련하여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손성일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48

민간분야 액티브X 제거

제안자 **이스르기**님

주요내용 신속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정보화시대에 불필요한 인증으로 비효율을 양산하는 액티브X 제거

제안내용 저는 아일랜드라는 국가에 거주중인 유지혜 입니다. 외국에 살지만 저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한국의 웹사이트들이 얼마나 사용하기 불편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해외 웹사이트에서는 본인 인증의 절차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이메일 인증으로 대신하는데요
유독 한국은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인해 주민번호 대신 휴대폰, 아이핀 등으로 인증하게 된 듯 한데요 대부분은
휴대폰 인증을 요구합니다. 휴대폰 번호가 없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보안이라는 이름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액티브엑스,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의 그 어느 사이트를 이용해도 한국처럼
불필요한 인증과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 명 선도 기반 구축

부처추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액티브 X를 설치하지 않고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無설치) 등의 대체기술 개발·
보급 중('14~)이며,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21년까지 주요 500대 웹사이트(전체 이용의 약 80%
차지)의 액티브X 제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 등과 협력하여 이용자에게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최소화하여 추진하고, 중소·중견 웹사이트의 액티브X 제거 지원 및 관련업계 대상 캠페인을
추진하여 액티브X 제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울진중딩님, Earthiank님, 풍류검색, work662, thank you님 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49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제안자 **김경희 / SOYOON**님

주요내용 반려동물 생산·판매·입양 절차 개선

제안내용

김경희 반려동물 판매 금지를 신청합니다. 반려동물의 가정 분양은 정식 브리더에 한해서 지정하고, 반려동물의 분양은 정식 센터 (유기동물 센터 등) 을 통해서만 했으면 합니다. 분양받을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자격과 환경을 검사 했으면 합니다. 센터에서 분양 받을 때, 독일의 예처럼 1 번의 방문 뿐 아니라, 전 가족의 3회 이상 방문 및 전문 상담가에게 제대로 동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인터뷰 후 분양했으면 합니다. 입양 전 동물이 주는 기쁨과 슬픔, 힘듦도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단순히 아기때 예쁜 반려동물의 모습에 반해서, TV 에 나오는 모습에 반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만 분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SOYOON 안녕하세요, 저는 코코라는 강아지 1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상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강아지가 죽으면 폐기물로 지정되어 땅에 묻을 수도 없고, 화장 후 그대로 버려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화장하여 몇개월에서 혹은 몇년간 사람처럼 납골당에 데려다 놓을 수도 있는 곳이 있지만 그런 곳은 가격도 비쌀 뿐더러 일정시간이 지나면 납골함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람들과 물건, 폐기물이 아닌 가족, 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강아지 공장 폐쇄로 강아지를 입양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2. 반려동물들이 물건으로 취급받지 않도록 비행기 혹은 고속버스 등에서도 짐칸이 아닌 사람과 같이 앉아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세요.

국정과제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사람과 동물이 함께사는 문화 조성)

부처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18년 3월까지 동물생산업자의 시설·인력기준·준수사항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18년부터 예방접종, 중성화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호님, 이관성님, Michele Van Zeeland님, 곽현우님, 문선욱님, 최민경님, 송하나님, 김연수님 Audrey Muir님, 전국동물보호협회님, 김혜란님, Robert Strond님, Riocella Russooag님, Jeanne Lyke님, 김복희 외 30분님, 이은재님, 이가은님, 달나라토끼님, 정티거님, flying tig님, 씩씩한님, 보나맘님, 말솜살님, 김반장님, 감초감자님, 벨라안나언니님, 몽포님, arcana81님, 수박소다님, SpecialT님, 쿠키맘님, hideyori님, ziiiiiin님, moonshine님, vamana01님, 오직믿음뿐님, 셜록맘님, 냥이징사님, John Moffat님, Fat도 Sidhu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50
층간소음 문제 지원을 위한 실효적 제도 운영

제안자 **대나무헬리콥터**님

주요내용 현행 층간소음지원 사이트인 '이웃사이센터'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제안내용 오랜 시간 소음에 고통받으며 느낀 점은 어느 나라보다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이나 방지 또는 보호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
'이웃사이센터'라는 기관에서는 서신으로 가해가구에 연락을 취하고 방문에 응할시에 방문을 할 수 있을뿐 이마저도 윗집이 거부를 한다면 이분들은 해 줄수 있는게 없음. 또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려 해도 녹음, 증거수집을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
현재 존재하는 '이웃사이센터'가 이웃간의 중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면, 차라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증거수집에 도움을 주길 바람.

국정과제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부처추진계획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측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층간소음 주요 발생주체인 '유아·어린이 대상 교육' 및 '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층간소음 저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치훈님, 강규슈님, 박연하님, 리즈님, 히히님, 아낙수나문2님, 똑태엄마님, 물병자리님, 동해물과님, 유리연님, 이쁜이99님, 네이레인님, 행복한집, 층간소음강력처벌님, 낭만해적단님, 처음처럼님, 토방이님, gkwldms님, 량량님, 층간소음강력처벌님, fraise님, 상구형님, 층간소음스트레스님, stur369님, 일미야멩님, 이하님, 가을백작님, 달과별해님,

ooki55님, 김은재님, 후퍼맨님, 숨바꼭질님, 나나나난나님, 성우기님, superstar7님, 그리운 사람님, kokorie님, 국민을 위한 나라 대한민국님, ㅎㅎ님, 층간소음해결자님, 럭키7님, 보란복숭아님, 낭만 개님, coals님, 밀님, marooo114님, 맑은날밝은날님, 브라보님, 김기현님, 상식당연님, 사이닝보빌님, soojinnl님, 금쪽이맘님, 대나무헬리콥터님, 더쓰페인님, 늦깍이딸바보아빠님, 창주쟁이님, 까비갑님, 재채기님, 우리이니화이팅님, 팝핀타코님, valentina님, 하치님, violet님, kori님, 콩팥태권도님, 누리애기님, rony80님, 행복하고 평화로운세상님, 프리지아님, 맞물림님, 클로제님, 워킹맘을 꿈꾸는 사람님, adapterf18님, lilybeth님, betterstat님, 더 이상고통받기싫어요님, jjojjo님, pilee님, aroarich님, 파랑오렌지님, 나이즈조님, 함께걷는길님, 더나아질거야님, 변학도님, ksa1575님, 된사람님, pluie님, 랑그릿사님, 까비랑님, 쭈니뭉님, 사악한층간소음전자음소탕님, 양방장님, betterworld님, taeg99님, 백설기송편님, 김포엄마걱정님, 선율아빠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51
불법 국제결혼 근절

제안자 **최기동**님

주요내용 불법 국제결혼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제안내용 불법 국제결혼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국정과제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부처추진계획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대영님, 김은수님, 친촨팡님, 양희철님, 이로00sla, 까망이다님, 딱따구리님, 가을의전설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52

정신질환 관련 심리전문가 양성 필요

제안자 **물빛하늘**님

주요내용 교정기관 근무경력의 자격증 승급조건 인정 및 정신질환 관련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력채용 희망

제안내용 현재 한국심리학회 산하 '사회및성격심리학회'에서 '범죄심리사-범죄심리전문가'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학 전공자 및 교정학 전공자(교도소-교정직, 보호관찰소-보호직) 등이 훈련을 통해 양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자격이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현장실무자(교정직) 외에는 직접 범죄자를 접할 기회가 적고, 수련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심리학 전공자의 경우 협약을 맺은 경찰서에서 '소년범'의 심리평가를 통한 재범가능성 평가 제도에 참여하여 자격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교정시설에서 관련 자격을 수련할 수 있는 경우는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시행했던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1년과정)'이었으며, 범죄자 또는 정신장애(정신질환-우울장애,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 지적장애,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성범죄 등)에 대한 심리평가(심리검사), 심리치료(정신재활치료, 중독심리치료, 성범죄 인지행동치료 등)을 수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보안정책의 강화로 무급으로 운영하던 수련생을 '인턴 또는 레지던트,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하여 수련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정신장애, 범죄자 특성,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정신감정 대상자 심리평가 등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하고 교육하여 범죄자의 재활과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에 대한 재활을 배우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있고 교도소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나 직렬통합으로 교정업무를 하느라 개입(심리평가와 심리치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력인정을 통한 1급 승급과 교정시설의 수련기관 지정, 범죄심리사-범죄심리전문가의 국가자격화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교정-보호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인력 채용이 필요합니다.

부처추진계획 법무부

현재 범죄심리사 및 범죄심리전문가의 국가자격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법무연수원에 범죄심리사 과정을 신설하여 자체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정공무원의 현 정원을 고려할 때 결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바로 경력경쟁채용은 곤란하지만 추후 채용 확대 여부를 고려하겠습니다.

153

행정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 통합

제안자 **로이테드**님

주요내용

신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상 도시연담화로 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통합 필요

제안내용

최근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신도시 개발로 도시연담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는 서울(송파), 성남, 하남의 세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행정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 송파지역에 화재(또는 긴급환자) 발생 시 가까운 성남지역 소방서(5분 거리) 대신 20~30분 걸리는 송파쪽 소방서에서 출동하게 됩니다. 긴급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을 넘기기 십상입니다.
버스의 경우도 가급적 자기 지자체만 통과하도록 기형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흔한 마을버스조차 없고, 하남의 경우 버스차고지가 없어서 버스를 대로변(무려 유치원앞)에 세워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체국도 없어서 등기를 못받았을 경우 멀리있는(하남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걸림) 우체국으로 가서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일부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어렵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조정권한 및 지자체간 협조를 유도하여 행정서비스 통합만이라도 추진해주십시오.

부처추진계획

행정안전부
'17년 8월 제도개선계획을 수립하여 '17년 12월까지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법률상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협약 이행력을 확보함은 물론 분쟁 시 조정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기구의 조정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합니다.

154

정부기관 누리집(홈페이지) 가입 및 보안절차 간소화

제안자 **깨몽**님

주요내용

정부기관 누리집 가입을 쉽게 하거나 가입 없이 간단한 일은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보안절차 간소화 필요

제안내용

정부 기관 누리집에 볼일이 있거나 민원을 넣기 위해 들어가려면 무척 어렵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곳이 아닌 곳에서 간단한 민원이나 행정 제안을 하려면 일일이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할 정부 기관 누리집에 1. 가입을 쉽게 하거나 가입 없이 간단한 일은 볼 수 있도록 하고, 2. 보안절차도 간단히 하거나 대폭 줄여야 합니다.
오죽하면 "정부 3.0"이 정부 누리집에서 볼일을 보려면 3시간이 걸려도 아무 것(0)도 못 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비아냥이 있습니다. 특히나 딱히 보안절차가 필요치 않은 일-보기를 들어 행정에 대해 물어보거나 간단한 민원을 넣는 일 등-에도 똑같이 어렵고 복잡하며 에러도 많은 보안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처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사용자 접근 편의성을 위해 행정·공공기관 누리집의 액티브X 제거, 관리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티브X 프리 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 SW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공인인증절차 폐지에 따른 인증수단 적용방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자합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콘텐츠 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17년 10월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강수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55
정부세종청사 개방

제안자 **나라답게**님

주요내용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휴게공간 등을 개방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청사로 운영할 것을 요구

제안내용

· 정부세종청사는 참여정부 시절 민주성을 강조하는 컨셉으로 길게 늘어선 수평적 건물구조(길이 3.6㎞)로 건립
· 도로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연도형(連道形)으로 설계되어 시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정부청사의 모델임 - 특히, 세종청사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옥상정원, 다양한 휴식·녹지공간 등 각종 편익 시설을 갖추고 있음
· 그런데 세종청사 외곽을 10㎞에 달하는 철재 울타리로 차단,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폐쇄적 운영
· 세종, 공주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벨트화를 해야한다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음에도 정부청사 보안을 이유로 미온적
· 정부청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것이지, 공무원만의 전유물이 아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안을 강화할 곳(업무 공간)은 철저하게 보안을 강화하고, - 개방이 가능한 옥상정원이나 지상층 로비, 주변 휴게공간은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청사로 탈바꿈 시킬 필요 ⇨ 이것이야 말로 민주성을 강조한 노무현 정부의 세종청사 건립컨셉에 부합되고, 국민과 소통하는 올바른 청사 모습이라고 생각함
· 특히, 공무원은 회전문(쪽문)으로 출입하면서, 국민(민원인)은 철재울타리를 빙빙 돌아 정문으로 출입케 함으로, - 출입 단계부터 차별, 국민 감동행정을 편다는 것은 시작 단계부터 불가능
·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청사를 건립해 놓고 보수적 운영으로 세계인에게 각광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음 - 기네스북에 등재된 옥상정원과 세종·공주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벨트화를 추진할 경우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임

부처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는 국가중요시설로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며, 각종 외부 위협요소로부터 시설을 방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완전 개방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국민접근을 위한 개방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옥상정원 중 일부를 개방하였습니다. 또 올해 말 종합안내동을 개방하여 국민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은경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56
조달청 '우수제품'에 대한 선정기준 변경

제안자 **채부건**님

주요내용 가격·품질 등과 더불어, 상생 및 고용과 관련한 측면도 우수제품 선정에 고려할 필요 있음

제안내용 조달청 '우수제품'에 대한 선정기준 변경 - 저렴하고 질 좋고, 친환경적인 제품 등이 당연히 우수한 제품이어야 되지만, 현 시대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우수제품이 되어야만 여러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 예로, 전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은 소수의 사람만이 생산에 참여하여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구조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생산에 참여하고 질이 조금 떨어지고 가격이 조금 비싼 제품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질이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진정으로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아도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처추진계획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2017년 9월 개정 하고자합니다.

이 때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고용분야에 추가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고용·노동 분야의 사회적 책임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도해님, 세븐스타님, 물박사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57

입찰참가자격 벽을 낮추어 주십시오

제안자 **야성**님

주요내용

용역입찰 등에서 실적제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소규모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제안내용

저는 행사기획 업체를 운영합니다. 나라장터나 공공기관에 올라온 행사에 입찰을 하려해도 입찰참가자격에서 번번이 자격이 안되어 입찰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규제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행사나 축제 입찰 참가자격에서 행사대행실적 금액을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축소나 폐지해서 소규모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실력은 기획서와 발표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서류적인 입찰참가자격의 벽도 낮추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두 번째. 공공기관은 별로 없으나 간혹 산하 협회나 단체에서 올라온 입찰내용을 보면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의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다고도 적혀있는데 이것은 그 회사가 수일동안 기획한 아이디어를 아무런 댓가 없이 사용한다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입찰에 떨어진 업체의 아이디어는 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했으면 합니다.

부처추진계획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2.1억 미만의 소규모 물품제조 및 용역 입찰의 경우 실적제한 폐지를 검토하여 '17년 하반기 국가계약법령 개정 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왕현아님, 정동수님, 최봉혁님, 폴롱님, 순천사람님, 행정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58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국장 요청

제안자 **깨어있는 양심**님

주요내용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들 가슴에 남아있는 죄책감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세월호 희생자분에 대한 장례가 정부 차원의 국장으로 거행되도록 건의

제안내용

세월호는 많은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세월호가 올라오고 미수습자 분들이 한 분 두 분 돌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세월호 유가족들은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그건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만 떠올려도 눈물이 그냥 나오는 이유이지요.
이 국가적 트라우마는 그냥 둔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참사 원인을 밝히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 다음에 미수습자 분들이 모두 돌아오길 기다려야 하며,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세월호 희생자분들 모두를 국장으로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희생자들을 떠나보낼 때 비로소 국민들의 가슴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죄책감과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미수습자 분들이 모두 돌아오면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국장을 거행해주세요.

부처추진계획

국무조정실
미 수습자 수습, 선체조사, 진상조사 등의 상황과, 희생자 가족 의견 등을 토대로 합동 영결식 추진계획('17. 12)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승섭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59
임원을 제외한 임금통계 마련

제안자 **chace**님

주요내용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부장급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부터는 임원을 제외하고 사원부터 부장까지의 임금을 별도의 통계로 발표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임금 분배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것

제안내용

언론 기사를 보면 기업들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상당히 이해하지 못할 금액이 자주 나옵니다. 회장, 사장, 전무 등 임원들의 급여가 포함되어 계산된 결과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사원에서 시작해서 부장급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 통계 자료를 쓰심에 있어. 임원급의 급여를 제외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임금 분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통계청에서 중소기업부터는 임원의 급여를 제외한 사원부터 부장까지의 급여를 통계 내어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고 언론기사에도 언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처추진계획

통계청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부가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는 가구 대상 조사로 중소기업·대기업 구분 및 임원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조사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으며, 제안한 사항은 사업체 대상 조사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체 대상 고용통계 조사(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등)를 실시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양이가사는집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60
법령 의견 DB 구축

제안자 **바보당**님

주요내용

법령에 대한 의견 회신이 담당자가 바뀌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영불가를 제외한 사항을 DB로 구축하여 제·개정 시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 항상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제안내용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및 개정 그리고 제정을 소관 기관에 요청해 처리 회신 내용을 보면 반영 불가, 반영 고려, 반영검토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두 해당 민원이 완결처리 되기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모두 반영 불가와 같은 효과이기 때문이다. 제안합니다. 반영불가를 제외한 사항을 DB로 구축하여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이나 제정 시엔 반드시 구축된 DB를 확인해야만 다음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한다면 법령은 항상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법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추진계획

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에서는 각종 법령정비 의견을 DB로 구축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각 부처는 소관법령의 정비의견을 정부입법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법령의 제·개정 시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 부처에 법령정비의견을 정부입법시스템에 등록·활용하는 매뉴얼, 동영상 등을 배포하여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161
국가인재개발원 공무원강의 국민개방

제안자 **마천행**님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 콘텐츠를 국민들에게도 개방해 줄 것

제안내용

국가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위해 개설되는 다양한 강의 중 국민들에게 유익한 강좌들이 있습니다.
공개강의, 대학강의, 인문학강좌, 특강, 그리고 행정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공문서작성, 민원, 사회복지, 인사, 예결산, 회계, 조직관리, 리더십 등)이 많습니다.
이러한 강의와 강좌를 국민들도 수강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국가인재개발원의 강의를 국민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면 국민소통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공개가 되면서 다양한 컨텐츠 개발에 대한 접근도 용이할 것입니다.

부처추진계획

인사혁신처
'11년도부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제작 나라콘텐츠에 대해 대국민 공개로 운영 중입니다.
다만 우수 민간임차 콘텐츠(지식·어학분야)는 계약 대상 제한(저작권 등)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17년도 콘텐츠 개발 및 우수강의 동영상 제작시 공개 가능한 콘텐츠를 기관·저작자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62

연가, 병가 등 사용시 대면보고, 대면결재 금지

제안자 **다함께잘살자**님

주요내용 연가, 병가 등 사용시 대면보고 및 대면 결재 금지

제안내용 연가, 병가 등 사용 시 사전 대면보고 하지않고, 전산 상으로만 결재 올린 후 시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 휴가 등 사용 시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전 보고, 사후 보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간부 직원들에 찍히게 되고, 예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에 연,병가 등 사용 시 사전 보고, 사후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부처추진계획 인사혁신처
연가활성화를 위하여 연가 사용 시 사유기재란 삭제, 권장연가제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 중이며 2018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반영하여 각 기관 통보('18.3월) 예정입니다.

163
세월호 인양업체 종사자 훈·포장

제안자 **헬프미**님

주요내용 세월호 인양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종사한 인양업체 종사자에게 훈·포장 지급

제안내용 세월호 인양업체 종사자들 →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 & 적자보전

· 당초 정부 예상에도 빗나간 최저가입찰(홍보로 만족)

→ 우리 정부가 적자액 손해보전 o 한중관계 최악 o 관련 종사자들

→ 국내종사기간 중 부정적 언론기사 전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종사 o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

→ 한중관계 우호적 변화기대

부처추진계획 해양수산부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선체 수색 및 조사 등이 마무리된 이후 소관 부처(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와 협의하여 진행을 검토하겠습니다.

164

소방차 양보 운전 모범시민 포상계획

제안자 **xoals3813**님

주요내용

소방차 양보의무 준수 모범시민 포상제 도입하여 소방차량 신속한 출동에 기여하고 초기 화재진압으로 생명과 재산보호

제안내용

소방서에서는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및 처벌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인식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소방차 양보의무를 준수하는 모범시민 포상제를 도입하여 소방차 출동 시 소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근거로 모범시민 선발 및 포상. 모범시민 포상자료를 홍보자료로 활용(신문, 홈페이지, 방송보도 적극 활용).

이 제도를 시행하면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어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소방차량 신속한 출동으로 생명과 재산보호에 도움이 될 것임

부처추진계획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및 시·군·구청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별 업무협의를 거쳐 소방차 양보 운전 모범시민 정부 포상을 시행하겠습니다.

165

철도공사 유휴부지 무상으로 시민공원 활용

제안자 **빌리장**님

주요내용

철도공사의 철도 유휴부지를 공원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 시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제안내용

2015년 7월 17일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유휴부지에 대해 보전, 활용, 기타부지 등으로 분류하여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 등 일부 지역에 레일바이크사업, 서울 마포구의 경의선철도공원화사업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철도공사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이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수익사업 차원에서만 검토되고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측면에서 인근 주민의 복지를 위한 환경개선에 활용하는 것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례로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철도 소음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철도공사의 유휴부지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이화여대와 중기청, 서대문구청 등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인근지역을 스타트업 거리로 조성,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고, 주민친화적 휴식공간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철도공사 유휴부지의 시민공원화를 요청했습니다만, 철도공사는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소유부지이기에 궁극적으로는 국가소유인 유휴부지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주민친화적 시민공원화 함에 있어서 임대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추진계획

국토교통부

철도유휴부지활용지침을 제정하여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철도 유휴부지는 지자체가 주민친화적 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유재산법」 제34조에 의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선체 수색 및 조사 등이 마무리된 이후 소관 부처(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와 협의하여 진행을 검토하겠습니다.

166

외국인 방문객 대중교통 예매수단 개선

제안자 **김창규**님

주요내용 외국인 방문객이 해외발행 신용카드로 시외·고속버스 예매가 가능하도록 예매·결재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철도 및 고속/시외버스 승차권 예매에 있어 현재 내국인들은 각 운영사 또는 예매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승차권 예매/변경/취소 등의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반면, 단기 관광 또는 출장 등의 목적으로 내한하여 국내 01x 휴대전화번호 및 한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가 있을 리 없는 외국인 방문객들의 경우는 온라인 예매는 코레일을 제외하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온라인으로 승차권 예매를 하지 못하고 각 역/터미널 등에 직접 나가 현장 예매를 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모바일을 활용하는 내국인들의 좌석 선점에 밀려 필요한 시간대 승차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규모의 국제행사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조차 외국인 방문객들이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중교통을 예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은 과거 주요 언론에서도 지적한 전례가 있는 사항이고, 또한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도 지난 3월까지 개선될 것으로 명시(60페이지)하였던 적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7월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개선조치도 실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승차권 예매는 기본적 이동권의 문제이며, 각각의 민간사업자가 관여되어 있다고는 하나 대중교통망이란 공공의 영역으로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대상이므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부처추진계획 국토교통부
SRT는 조기에 외국인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고속·시외버스도 외국어, 외국 카드를 이용한 예매·결제서비스를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167
농가에 맞는 정책 홍보

제안자 **sydney2701**님

주요내용 농활을 가는 대학 연합회에 지자체 농업직공무원 1인을 팀장으로 하여 농가에 맞는 정책 홍보 시행

제안내용 <농활홍보단> 농활을 가는 대학 연합회에 지자체 농업직공무원 1인을 팀장으로 하여 농가에 맞는 정책홍보를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업자에게는 원산지표시사항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영세 농민에게는 최근 농협 주관으로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에 대하여 알리면 좋겠습니다.

부처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에 대한 농가별 맞춤형 홍보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활 시 수렴한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개별적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화문1번가
국 민 인 수 위 원 회

100일간의 기록

발 행 처 국민인수위원회·행정안전부

발 행 인 하승창·김부겸

발 행 일 2017년 7월 31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인수위원회

연 락 처 02-397-1564

기 획 행정안전부

정리편집 신승렬·이관형

디 자 인 (주)비타민컴

이 저작물은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부문 결과보고서입니다.